

2023 교사 대투쟁이 남긴 과제 교육 정책 및 입법의 전문성 강화

2024년 7월 17일(수) 3시 ~ 6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교사노조연맹TV
백승아TV

1부 광장의 목소리를 국회로!

15:00

개회사 및 인사말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입법요구 서명 결과 및
2023교사대투쟁 백서 전달

2부 발제 - 지정토론

16:00

발제 1. 교사정치기본권 최소한의 합의를 중심으로

-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2.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방안

- 박현미 전)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지정
토론

-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 경기교사노동조합 위원장
- 김상규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위원
-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
- 이태윤 부산 행복한교육학부모회 부회장
- 김태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본부장

주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주관 교사노동조합연맹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 민주당 국회의원 백승아

후원 **민주당** 국회의원 박찬대·서영교·김영호·신정훈·윤후덕·김성환·이언주·강준현·문정복
고민정·박정현·김문수·김준혁·정을호·김성희·박홍배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강경숙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국회토론회

2023 교사 대투쟁이 남긴 과제 교육 정책 및 입법의 전문성 강화

2024년 7월 17일(수) 3시 ~ 6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주관



교사노동조합총연맹

민주당

교육 정책 및 입법

민주당

국회의원 백승아

후원



민주당

국회의원 박찬대·서영교·김영호·신정훈·윤후덕·김성환·이언주·강준현·문정복

고민정·박정현·김문수·김준혁·정을호·김성희·박홍배



국회의원 용혜인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강경숙

■ 프로그램

□ 개요

- 주 제: 2024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국회토론회
- 부제: 2023 교사 대투쟁이 남긴 과제, 교육 정책 및 입법의 전문성 강화
- 일 시: 2024년 7월 17일(수) 15:00 - 18:00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세부 프로그램

시간 (소요시간)	순서
제 1 부 15:00~16:00 광장의 목소리를 국회로!	개회사 ■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
	환영사 ■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입법 청원 서명 및 백서 전달식 ■ 헌정 영상(#2023 아스팔트 위의 기록) 시청 ■ #2023 아스팔트 위의 기록 『선생님, 나는 당신입니다』 전달 ■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전달
	축 사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기념 촬영
	축 사 ■ 국회의원 및 내빈
	장내 정리정돈
제 2 부 발제 16:00~16:40 (40')	발 제 1. 교사정치기본권 최소한의 합의를 중심으로 ■ 광노현(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발 제 2.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방안 ■ 박현미(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지정토론 16:40~17:40 (60')	토론자 1. 이경아(민주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2. 송수연(교사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 경기교사노동조합 위원장) 토론자 3. 김상규(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위원) 토론자 4. 윤효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 토론자 5. 이태운(부산 행복한교육학부모회 부회장) 토론자 6. 김태신(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본부장)
질의응답 17:40~17:50	종합토론과 질의 응답
폐회 18:00	폐회

■ 개회사..... 4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명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영교

■ 환영사..... 8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용서 / 행복한교육학부모회 회장 최형욱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승아

■ 축 사..... 14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박찬대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연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정복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문수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을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성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배 /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혜인 /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강경숙
교육연론창 대표 박석균

■ 발 제

1. 교사정치기본권 최소한의 합의를 중심으로 49

곽노현(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2.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방안 57

박현미(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 토 론

토 론 1. 이경아(민주연구원 연구위원) 101

토 론 2. 송수연(교사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 경기교사노동조합 위원장) 109

토 론 3. 김상규(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위원) 117

토 론 4. 윤효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 127

토 론 5. 이태윤(부산 행복한교육학부모회 부회장) 147

토 론 6. 김태신(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본부장) 150

■ 부 록

1.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활동보호 입법 촉구 전국교사 서명운동 160

2. 한국노총 정책질의 설문결과 및 정책질의서 161

3. 제22대 국회에서 발의 및 발의 예고된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 165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명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입니다.

〈2024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국회토론회〉의 개최를 위해 함께 해주신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서영교 단장님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의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님과 행복한교육학부모회 회장님, 백승아 국회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교원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도덕적 가치와 민주시민의식을 길러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원은 정치기본권이 제한되어 교원 스스로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모순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제한은 교원들의 사회적 참여를 저해하며, 교육의 질과 다양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교원이 우리 사회와 교육의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교육정책의 현장성이 강화되고 진정한 교육여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사회의 민주적 토대와 역량을 강화하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교사 노동자 동지들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되찾고, 이를 통해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교사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인 교육현장을 정상화하는 첫발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 교원의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실천적 과제들이 제시되길 기대합니다.

한국노총은 교사 노동자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조직적·정책적 모든 역량을 지원하겠습니다.

한국노총은 교사 노동자 동지들과 맞잡은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 동 명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영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단장 서영교입니다.

오늘 <2024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국회토론회>를 주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자리를 함께 마련해주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곧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가 돌아옵니다. 작년 서이초 사태로 교권보호 4법이 개정되고, 아동학대처벌법도 일부 개정되었지만, 학교 현장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교사들의 호소를 전해 들었습니다. 교육과 교권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이 정부와 교육정책 일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교육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교사들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학생들이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진정한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사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권리를 넘어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러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이유로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교사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정책에 참여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치권이 더 생생하게 전달받아야,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길입니다.

물론, 교원의 정치 참여에 따른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교사들이 정치에 참여하면서도 교육 현장에서의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교육정책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이 모여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우리 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우리 사회를 더욱 발전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17일

서울중랑(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 영 교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용서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기대합니다.

환영합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용서입니다.

오늘 <2024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국회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서영교 단장님, 토론회를 후원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김영호, 신정훈, 윤후덕, 김성환, 이언주, 강준현, 문정복, 고민정, 박정현, 김문수, 김준혁, 정을호, 김성희, 박홍배 의원님,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님,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이 토론회를 연맹과 함께 주관해 주신 행복한교육학부모회 최형욱 회장님과 백승아 국회의원님, 주 발제를 맡아주신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님과 박현미 전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님, 여섯 분의 토론자들, 그리고 함께 해주시고 계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3 교사 대투쟁이 남긴 과제 - 교육 정책 및 입법의 전문성 강화!”

오늘 토론회 주제가 아픈 가슴을 찌릅니다.

2023년, 뜨거운 여름, 전국의 교사들은 매 주말마다 종각·광화문과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교사는 가르치고 싶다! 학생은 배우고 싶다!” 외쳤습니다.

왜 우리 교사들이 “가르칠 수 있게 해 달라!” 절규하게 되었을까요?

법을 악용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급증하여,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손발이 쑥뚫 뭉기고 있는데도, 또 많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고 있는데도, 정부도 국회도 법과 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어야 할 법과 제도가 오히려 교육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종각과 광화문에서 시작되었던 교사들의 절규가 국회 앞으로 모이게 된 것은 이 때문입니다. 교사가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을 제대로 만들어 달라고 절규하게 된 것입니다.

2023년, 국회는 교권보호 5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교육 현장에선 체감하는 변화가 미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감나는 변화를 이끌어낼 만큼 현장성 있는 법·제도 개선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학교 교육은 하나하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교육 현장 적합성을 가진 법령은 학교 교육의 발전시키는 힘을 발휘하지만, 적합성을 갖지 못한 법령은 학교 교육 발전을 저해하고 망가뜨립니다.

2023년 교사 대투쟁을 거치면서 우리 교사들은 깨달았습니다. 학교가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으려면, 교육 정책과 법령이 현장 적합성을 갖도록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교육 정책과 법령이 교육 현장 적합성을 갖추게 하려면, 교육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사가 정당과 국회의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 법령 입법 과정에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님이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4법을 대표 발의하자 교사들은 뜨거운 지지와 열광을 보냈습니다. 이는 교사들이 2023년 교사 대투쟁이 남긴 과제가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 입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라는 것을 자각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이란 2023년 교사 대투쟁이 남긴 과제의 해결 지혜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이런 뜻에 공감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지혜가 모여져,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이 풀리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당과 국회에서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입법으로 이어지는 데, 교사들이 당당히 주체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현장성 있는 정책이 입안되고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이 필요한 이유를 널리 알리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여론을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17일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 용 서



행복한교육학부모회 회장 최형욱

안녕하십니까?

행복한교육학부모회 회장 최형욱입니다.

〈2024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국회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단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님,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님과 함께 학부모를 대표하여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님, 민형배 의원님, 백승아 의원님께서 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교사들의 기본권 회복을 위해 애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쟁취하는 데 있어 이번 토론회가 중요한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 자리가 학부모들의 우려와 오해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교사의 정치 참여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교사의 정치적 권리 행사는 수업을 정치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참여를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칙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사들의 정치 참여는 교육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 과정과 정책 결정에 교사들이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아이들이 더 공정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만듭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 사회가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학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교사들의 권리가 보장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 저도 학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17일

행복한교육학부모회 회장 최 형 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승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승아입니다.

〈2024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국회토론회〉가 개최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님,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님,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의원님들과 발제 및 토론을 맡아 풍성한 내용을 채워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60여 년간 우리나라는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해왔습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처럼 교사가 정치 기사에 SNS상 ‘좋아요’를 누를 수도 없는 나라, 정당 가입, 후원까지 금지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조차 박탈당한 교사와 공무원의 시민권을 시급하게 회복해야 합니다. 교육현장의 실정에 맞는 교육입법을 위해서라도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는 작년 서이초 사태를 겪으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교육관련 입법이 얼마나 교육을 망가뜨려왔는지, 교사를 무력하게 만들어왔는지를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교육현실에 맞는 교육 입법을 위해, 교직을 버리면서까지 국회 진출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만큼 저는 교사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교사의 근무시간 외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교사의 정치중립성은 정치와 교육의 종교중립성과 마찬가지로 근무시간 중에만 요구되어야 합니다. 교원의 직무 밖/근무시간 외 정치활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OECD 기준입니다. OECD국가 중 유독 우리나라의 교사들만 정치기본권을 박탈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 후원을 보장하겠습니다.

최근 학생의 참정권이 확대됨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졌음에도 교사는 정당 가입도 불가

능한 상태입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입니다. 정당가입과 후원 금지로 50만 교원의 목소리는 정당의 정책에 전혀 반영될 수 없게 만들어 민주주의 발전을 막아왔습니다.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적 활동이 가능한 대학교수와 비교했을 때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셋째, 교사와 공무원의 공직선거 출마를 보장하겠습니다.

교사의 공직선거 출마를 금지함으로써 교육입법, 교육정책, 교육예산, 교육행정을 다루는 각급의회, 교육자치기관에 유초중등교육전문가의 진출이 막혀있고, 필요한 전문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 전문성이 결여된 각급 의회와 교육청은 교육 본질 가치에 충실하지 못한 법률, 정책, 예산을 제대로 걸러 내지 못하거나 스스로 양산함으로써 교육현장을 망가뜨렸습니다.

교사정치기본권의 박탈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은 교사들이 정치적으로 민주시민이 아니기에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사들만의 불행이 아니라, 학생들의 불행이요, 나아가 우리나라의 불행입니다. 정치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어 수 십 년 동안 입틀막 당한 교사들은 민주시민을 키우는 교육 역량은 커녕 정치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교사들 개인의 탓이 아니라, 교사들에게 정치적으로 고민하고 성장할 기회를 박탈한 국가의 탓입니다.

독일의 경우 의회에 진출한 교원의 비율이 20%를 넘는데, 우리나라는 사표를 내고 출마하여 국회에 입성한 현직교사 출신은 제가 처음입니다. 휴직하고 출마를 보장하는 선진국들의 경우,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교사출신의 의원들이 현실에 맞는 제대로 된 입법과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교사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학생에게 주입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있습니다. 교사의 종교적 자유를 제한하지 않지만, 자신의 종교를 학생들에게 강요하지 않듯이, 정치적 견해 또한 강요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이러한 우려점을 고려하여 저는 지난 7월 9일, 교사가 학생에게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넣어 교사 정치기본권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바뀌어야 합니다. 교사가 할 수 있습니다. 교사정치기본권 회복으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역량을 갖추고, 깨어있는 민주시민을 길러내어 교사들이 우리 나라 미래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교사정치기본권 회복에 도움이 되는 토론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 승 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박찬대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박찬대입니다.

〈2024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국회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자리해주신 국회의원, 선생님, 학부모 여러분께도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서이초 선생님께서 순직하신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아직 요원하다고 합니다. 최근에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여덟 분의 선생님께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에 변화가 없다’고 답하셨다고 합니다. 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교원의 정치시민으로서 정치 기본권 보장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 교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간접적인 의견만을 표출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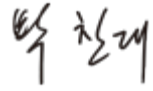
교사는 교육 정책의 당사자이자 한 명의 시민입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무조건적으로 강요하며 목소리를 틀어막을 수만은 없습니다.

마침 최근 교사노조연맹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2.3%의 선생님께서 업무시간 외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합니다.

이제 교사가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사회적 합의점을 마련할 때입니다. 지금 시점에 열리는 토론회가 시민 의견을 모으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4. 07. 17.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호입니다.

서이초 선생님이 학교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워달라!” 전국 각지에서 선생님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며 광장에 모였습니다. 추모집회 현장에서 함께 눈물 흘렸던 뜨거운 지난 여름을 기억합니다.

1년 전,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자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이 외침에 답하기 위해 유관 노조, 단체, 교육부와 수없이 토론했습니다. 총 다섯 차례에 걸친 법안소위에서 교권보호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했습니다. 입법부, 행정부의 각 교육 수장들이 모인 ‘여·야·정· 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도 구성하여 대화와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교권보호 4법 통과를 견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선생님들의 정치기본권이 박탈된 상황 역시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의 교육정책과 입법에 대한 관심을 차단함으로써 교육 현장 전문가인 선생님들이 교육 정책으로부터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교권보호 4법 의결 1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정책과 입법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선생님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런 시기에 선생님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2024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국회토론회>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행복한교육학부모회, 백승아 의원님, 그리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국민 공감대를 얻으면서 선생님들의 정치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존중받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4. 7. 17.

국회 교육위원장
서울 서대문을 국회의원 김 영 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신정훈

안녕하십니까.

국회 행안위원장, 나주·화순 국회의원 신정훈입니다.

〈2023 교사 대투쟁이 남긴 과제 : 교육 정책과 입법의 전문성 강화〉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를 환영합니다.

의미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님, 서영교 의원님 감사합니다.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님, 행복한교육학부모회 최형욱 회장님, 백승아 의원님께도 감사
를 전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상으로는 정치적 중립성을 명분으로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정치중립성 확보’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교원들에게 일반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정치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주시민교육 역량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시민의식의 형성은 수준 높은 정치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의식은 저절로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계적인 교육과 단계별 사회화 기관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생, 디지털 대전환 등 다양한 난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교육의 정상화가 대한민국의 정상화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대한민국의 정치와 민주주의에 기여하고, 민주시민교육을 더욱 활성화하며, 나아가 교육정책과 입법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국회토론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주신 고견들 앞으로의 입법·정책·예산 확보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7. 17.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나주·화순 국회의원 신 정 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후덕

안녕하십니까?

파주갑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2024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국회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 여러분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2023년 교사 대투쟁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남은 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사회의 교육 정책 및 입법 전문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서이초 사태 이후 1년을 돌아보며,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의미도 있습니다.

국민적 동의를 끌어낼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은 단지 교사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교사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교육 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나은 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우리나라 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참석하신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와 활발한 논의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2024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국회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학교와 가정에 건강하고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갑 국회의원 윤 후 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성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성환입니다.

2024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국회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토론회 준비에 애써주신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故 서이초 교사 사건이 일어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당시 수십만 교사들이 거리로 나와 “권리 보호”를 외쳤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서이초 사건은 그동안 교사 인권이 얼마나 억압받고 외면받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교사라는 직업은 우리 사회의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막중한 역할 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권침해로 인해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상당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사의 정치활동과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들이 교사들의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제한은 2021년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의 정신과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근무 시간 밖 정치활동 전면금지는 선진국인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반민주적 조치라는 것이 국제사회에서도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을 회복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가 시급합니다. 정치기본권 회복은 단순히 교사

개인의 권리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기되는 심도 있는 논의들이 교육현장에 제대로 반영되고 실천될 수 있길 바랍니다.

토론회에서 주신 의견을 토대로 국회도 입법과 정책 등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숙고와 논의가 교권회복의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 국회의원 김 성 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연주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연주입니다.

‘2023 교사 대투쟁이 남긴 과제, 교육정책과 입법의 전문성 강화 -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해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서이초 선생님을 떠올립니다. 이를 계기로 참다못한 선생님들이 검은 옷을 입고 교실 밖으로 나와 도로를 가득 메웠던 모습을 많은 국민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교육현장과 괴리된 정책이 학교로 쏟아지고,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법이 오히려 억울한 피·고소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우리 교육계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은 교육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사들이 교육정책과 입법에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기에는 아직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교원은 지지하는 후보에게 후원금을 내지 못하고, 선거 운동은 물론 선거 공약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정치기본권마저 박탈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나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계기로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인생 길잡이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계신 선생님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7.17.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언 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준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세종시(을) 국회의원이자,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 강준현입니다.

‘2024년 교사정치기본권 회복 국회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토론회 주최를 위해 애써주신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선배·동료 의원님들, 아울러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교사노동조합연맹, 행복한교육학부모회, 백승아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3년 검은색 옷을 입고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 모인 수만 명의 교사를 기억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 늦가을에 이를 때까지 그들이 대로에 계속 나와 집회를 통해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교사당사자들은 우리 교육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성을 갖고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가 교육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교육정책 수립 및 집행 등의 과정에서 배제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요구됩니다.

하지만 교사에 대한 중립성 요청은 그 직무수행에서의 중립을 의미하지, 전인격적인 국가종속과 중립성을 요청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해외 사례만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국가의 경우 교사도 정당 가입을 할 수 있으며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은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많은 국가에서 이미 교사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도,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교사

의 주체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담보할 수 있는 법 개정이나 제도를 충분히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교육의 중립성 간의 조화로운 구현을 위하여 교사의 과도한 기본권 제한은 폐지하면서도 직무상의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할 수 있는 입법정책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교사의 목소리와 전문성을 담은 살아있는 교육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정부위원회 간사
세종시(을) 국회의원 강 준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정복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간사 문정복입니다.

오늘 <2023 교사 대투쟁이 남긴 과제, 교육 정책과 입법의 전문성 강화>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국회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자리해주신 국회의원, 선생님,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은 매우 다채롭고 복잡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교원들은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고 자유롭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유·초·중등 교원들은 여전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교직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교원은 교육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과 소통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교육 전문가입니다. 그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교육 정책의 시행착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우리가 경험한 여러 교육 정책 실패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은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결과이며, 교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교원들의 정치 기본권 보장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은 단순히 헌법상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교육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보다 나은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방향을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교사노동조합연맹, 행복한교육학부모회, 백승아 의원과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각계의 전문가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간사
경기 시흥시갑 국회의원 문 정 복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정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박정현입니다.

오늘 〈2024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국회토론회〉 개최를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내일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의 1주기입니다. 처음 발령받은 학교에서 교사가 받은 극심한 고통과 그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부재를 생각하면 참담한 심정입니다.

설레는 마음을 품고 학교로 갔을 당시 25살의 초임 교사가 벼랑으로 내몰렸을 때의 그 마음은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회복을 위한 많은 요구와 움직임이 있었고, 교권 보호 5법이 개정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도 교사의 84.1%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갈수록 교직이 더 힘들어진다’라고 응답한 교사는 98.5%에 달합니다.

이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2023년 교사 대투쟁이 남긴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현재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의 학교 밖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현행법은 근무시간 외에도 교사의 정치적 활동과 표현을 제한하고 있어 교사들이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교사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 당원이나 정치후원자 될 권리가 있으며, 공직 수행 외의 영역에서는 정치적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좋은 의견들이 도출되어, 우리가 직면한 문제와 해결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교권의 회복과 교육의 질 향상이 국가의 미래를 변화시킵니다. 저 또한 국회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입법활동을 통해 교사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해주신 각계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7.17.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박 정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문수

안녕하십니까.

김문수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입니다.

「2024 교사 정치권 회복 국회토론회」가 개최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김용서 교사노동조합 연맹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교사의 정치적 권리가 필요합니다.” 과도한 정치적 중립 요구가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정책을 만들고 정권에 따라 교육이 영향을 받는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과도한 정치적 중립은 부당한 교육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교사들의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편찬 시도, 교사를 힘겹게 하는 교육정책 등은 대표적인 사례로, 왜 교사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반영돼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교사들의 정치적 권리를 되찾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교사들의 정치적 권리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나아가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 큰 기여를 하길 바랍니다.

저도 주시는 말씀 깊이 새겨듣고 교사들의 정치권 회복을 위해 더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아울러,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되찾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무더위 속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7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국회의원 김 문 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을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을호입니다.

오늘 <2024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국회토론회>에 뜻을 함께 해주신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교사노동조합연맹’, ‘행복한교육학부모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

우리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교사 여러분은 교육현장 중심에서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교육하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으로 우리 학생들은 꿈을 만들고, 하나씩 키워갔으며, 그 덕분에 대한민국도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해 모였습니다.

교사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한 기본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사들의 정치적 참여는 곧 사회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교육현장은 아직도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회복이 요원해 보입니다. 교사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제약이 있음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현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교육현장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성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시갑 국회의원 김성희입니다.

〈2024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국회토론회〉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교사노동조합연맹 그리고 행복한교육학부모회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교육이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위해 일선에서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교육해주시는 교사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교사의 정치 참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가 오가길 바랍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사에게도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지만 여전히 교사의 정치 참여와 권리 보장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사의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안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님과 박현미 전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님을 비롯하여 토론에 참여해주신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 김상규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위원,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 이태운 부산 행복한교육학부모회 부회장, 김태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본부장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이번 토론회가 교사의 정치기본권에 관한 우리 사회의 논의가 깊어지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교육노동자의 처우는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 역시 교사 여러분께서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좋은 교육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쁜 일정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고양시갑 국회의원 김 성 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배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배입니다.

오늘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국회토론회>를 공동주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적인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 백승아 의원님, 발제를 맡아주신 징검다리교육공동체 곽노현 이사장님과 전 한국노총 박현미 연구조정실장님, 그리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선생님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지난해 7월 서이초에서 교육활동을 보호받지 못한 한 선생님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일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학교 현장 곳곳에서 많은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생님의 정당한 학생지도 활동 및 교육권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라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다양해지고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교육정책과 입법의 대응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의 위축을 그대로 둔다면, 그 피해는 교사만이 아닌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과 그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현장과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교육 정책과 입법의 현장적합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 여러분의 지혜를 모은다면 교사정치기본권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 방향성과 함께 더 나은 교육 현장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리라 기대합니다.

저 역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사 여러분께서 교육의 소명을 다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7. 17.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 홍 배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혜인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혜인입니다.

‘2024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국회토론회’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준비해주시고 자리를 마련해주신 여러분들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교사에게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지, 시민이 가진 정치참여를 포기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 행위를 제한하며,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오랜 시간 박탈해왔습니다.

지난해 수십 만 명의 교사가 교육현장의 변화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을 때,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는 커녕 ‘징계 협박’으로 일관했습니다.

학교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 학생 등 학내 구성원의 정치적 권리부터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 현안이 산적해 있고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지금,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늦춰져서는 안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의 자리가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로를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시작으로, 민주적이고 다원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 동참하겠습니다.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며 모두가 존중 받는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고자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 번, 토론회를 함께 만들어주신 교사노조를 비롯한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2024. 7. 17.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강경숙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강경숙입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2024 교사정치기본권 회복 국회토론회>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해주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주관해주신 교사노동조합연맹, 행복한교육학부모회, 백승아 의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 교원은 정당 가입은 물론이고, 지지하는 후보에게 후원금조차 낼 수 없습니다.

심지어 SNS에서 ‘좋아요’도 누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교사의 직무와 관계없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펼치는 정치적 활동과 표현까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OECD 38개국 중 교사의 학교밖 정치기본권을 제한하고 교원의 정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교원의 정치적 활동이 과도하게 제한적이라고 지적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입법은 임기만으로 폐기되거나 구체적인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 주체인 교원의 선거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정치 후진국 상황은 교육계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박탈로 인해 그동안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과정에서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교육이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교원들이 교육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학교 밖 공간에서 최소한의 시민적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된다면, 교육현장을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원이 현장에 적합한 교육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토론회가 매우 시의적절하게 느껴집니다. 토론회 1부에서는 사회적 목소리가 담긴 입법청원 동의서 전달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특정 이념과 사상, 정파적 입장이 교육과 공직에 반영되지 않는 선진국의 틀을 만들기 위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17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강 경 숙



교육언론창 대표 박석균

1970년 전태일 열사와 2023년 서이초 故 박 선생님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픈 마음으로 서이초 故 박 선생님 1주기를 맞이하며 서이초 故 박 선생님과 먼저 가신 여러 선생님께 ‘#2023 아스팔트 위의 기록, 선생님, 나는 당신입니다.’를 헌정합니다.

2023년 검은 점들의 처절한 외침을 글과 사진으로 옮긴 책입니다. 우리는 안타깝게 그날의 뜨거운 외침을 모두 담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소명 의식으로 편집에 참여했고 최선을 다해 그날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다면 함께 보완하고 채워주십시오,

2023년 7월 18일은 어쩌면 군산 무녀도초, 서울 신목초, 용인 기흥고, 대전 용산초, 의정부 호원초, 부산 00초를 비롯한 아직도 그 이름을 드러내지는 못한 많은 선생님의 죽음이 만든 역사적인 추모일입니다.

선생님이 교실에서 삶을 달리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故 박 선생님의 죽음은 교육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 매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故 박 선생님과 먼저 가신 여러 선생님이 죽음으로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이였을까? 아마 평범하고 단순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제대로 수업하고 싶다. 온전한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보장하라. 교사에게도 인간적 존엄을 보장하라,”였을 것입니다.

이 말이 저에게는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가 청계천 앞에서 자신 몸에 불을 붙여 평화시장으로 향하며 외쳤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린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라!”와 다르지 않은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뿐인 목숨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1970년과 2023년 시기와 장소는 다르지만 처한 상황과 외침은 그리고 숭고한 뜻은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서이초 故 박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의 죽음 이후 우리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현상을 만들었습니다. 주최 단체가 없는 교사 개인이 검은 점으로 참여해서 만든 집회, 매주 전국에서 서울로 상경해서 만든 집회의 연인원이 60만 명에 이르렀고, 불별더위에도 불구하고 11차례 계속 이어진 집회는 교원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알려주었습니다. 또, 뒤늦게 알려진 호원초교를 비롯한 여러 선생님의 억울한 죽음, 지금도 수사와 재판을 받는 여러 선생님의 억울한 사연, 집회 때마다 연단에서 들려오는 현장의 참혹한 경험담은 이곳이 정말 대한민국의 학교인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더 불행한 것은 이런 현상이 소수 교사의 특별한 경험이 아닌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특수학교, 교실, 보건실, 상담실에서 일상적으로 만나게 되는 상황이었고 교원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의 아픈 경험이었습니다.

마침내 교사들의 검은 파도와 같은 거대한 저항에 놀란 정부와 정치권이 움직여 늦었지만,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이 흘러 7월 18일 故 박 선생님의 1주기를 맞이합니다. 학교 현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안타깝지만, 들려오는 이야기는 1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육언론[창]이 보도한 것처럼 교사들은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아동학대 협박과 고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 전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집회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다소 줄었을지 모르지만, 아직 학교 현장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 교육은 좀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백승아 국회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발의한 서이초 특별법 제정은 교육을 교육답게, 교사를 교사답게, 수업을 수업답게 만들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또 서이초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서이초 故 박 선생님과 먼저 가신 여러 선생님이 간절하게 원하는 변화가 바로 서이초 특별법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먼저 가신 선생님 모두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2024. 7.17.

교육언론[창] 대표 박 석 균

발 제

교사정치기본권, 최소한 합의를 중심으로

곽 노 현

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교사정치기본권과 관련해서 과연 범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최소한의 합의가 있는지 의문이다. 만약 최소한의 합의란 게 있다면 교사집단을 60년도 넘게 정치시민권이 없는 천민집단으로 취급해온 현행법제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교사정치기본권 회복을 외치는 이들 가운데 이뤄진 최소한의 합의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교사정치기본권 옹호론자들의 문제의식과 현상진단, 법리비판과 해법처방에서 공통적으로 엿보이는 최소한의 합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교사에게 인정되는 1할 정치시민권의 실태

현행법제 아래서 공무원과 교원은 정치시민권이 없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굳이 따지자면 본선선거권을 갖고 있으므로 1할 정치시민권자라고 할 수 있겠다. 8할이나 5할도 아니고 1할 정치시민권자에 지나지 않다면 지금까지 공무원, 교원에 붙였던 2등 시민이라는 용어조차 과분하다. 현행헌법상 정치시민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선거입후보권)을 양대 축으로 삼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실질화할 수 있는 정부정책비판권, 정당가입활동권, 선거운동권, 정치자금후원권 등으로 구성된다. 공무원과 교원은 대선, 총선, 지선의 본선거에서 지지후보나 지지정당에 투표하고 골방과 카페, 술집에서 친구들과 정치수다를 떠는 것 외에는 일반시민들이 누리는 정치시민권이 없다. 만약 교사가 일반시민들처럼 정치활동을 하면 공무원법 위반은 물론이고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는다.

현행법상 그나마 허용되는 교원의 선거권도 불완전하다. 본선선거권(=공직선거권) 못지

않게 당내경선선거권(=후보선거권)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후보선거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내부방침으로 당원뿐 아니라 일반시민에게 당내경선 투표권을 주는 정당이 늘어나고 있지만 중앙선관위는 이런 경우에도 공무원/교원은 경선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현행법상 공무원/교원은 정당당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공직후보 경선과 같은 정당행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원은 거대양당의 대선후보를 뽑는 이른바 국민완전경선에서도 배제된다. 국회의원후보, 지사체장후보, 지방의원후보를 뽑는 정당내부경선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경선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본선투표권도 반쪽 가치밖에 갖지 못한다.

본선선거권만 있을 뿐 지지후보 선거운동권도 갖지 못하고 선거기간 중 지지후보 정치자금후원권이나 선거종료 후 지지의원에 대한 정치자금후원권도 갖지 못한다. 현행법은 공무원/교사에게 피선거권을 누리려면 먼저 생업을 포기하라고, 다시 말해서 공무원/교사를 그만두라고 강요한다. 당선전망이 불확실한데 90일전 사직을 강제하고 낙선 후 복귀를 금지하기 때문에 출마자가 나오기 어렵다. 공무원은 현직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지위와 권한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를 것이다. 이런 목적이라면 누구보다도 현직 지사체장이나 현직 국회의원이 연임목적으로 출마할 경우 90일전 사퇴를 강제해야 맞다. 그럼에도 그런 규정은 없다. 차별입법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경선에 입후보하기 위해 생업을 불가역적으로 포기해야 한다면 누가 감히 출마할 수 있으랴. 이는 사실상 출마금지, 즉, 피선거권 본질침해와 다르지 않다. 더 결정적으로 교원은 정당가입권과 정당활동권이 없다. 정당에 가입해서 꾸준히 활동하다 공천을 받아 선출직에 진출할 기회가 원천 봉쇄되는 것이다. 90일전 퇴직강제와 정당가입금지가 각급의회에서 교원출신을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적 배경이다.

똑같이 정치시민권을 부정당하고 있지만 공무원출신은 교원출신과 달리 선출직 진출이 훨씬 활발하다. 행시출신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이나 중견급 지방공무원들이 퇴직 양당의 공천을 받아 각급의회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결과적으로 교원이 아닌 공무원집단은 각급의회에서 과잉 대표되고 있는 반면 교원집단은 형편없이 과소 대표된다. 일반공무원과 달리 교원은 각급의회에 이익대표자가 없어서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받는다는 뒤늦은 깨달음이 최근 젊은 교사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90%가 넘는 조합원들이 교사정치기본권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사노조조합원 설문조사결과가 이를 말해준다.

교사정치기본권운동의 최소한 합의

교사정치기본권운동을 이끌어온 최소한의 합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교육의 정치중립성 확보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해온 현행법으로 말미암아 교원의 의회진출과 정치진입이 막혀서 각급의회에는 유초중등교육전문가를 찾아보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교육전문성을 결여한 각급의회는 교육잡법, 교육잡정책, 교육잡예산을 양산해왔으며 이는 교육의 왜곡과 교사의 잡무부담으로 귀결됐다. 오늘의 토론회주제, ‘서이초사태 이후 과제: 교육정책과 입법의 전문성강화’도 동일한 문제인식에서였다.

2.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중립성은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고 규정하는 반면 군의 정치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규정한다. 이런 문언의 차이는 군의 정치중립성은 국가에 대한 군의 의무인 반면 공무원의 정치중립성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의 정치중립성은 대통령이나 선출직 등 정치권력이 휘하 공무원을 정치적 도구로 동원하거나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보호하겠다는 국가의 다짐이다. 교육의 정치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헌법의 약속도 같은 취지다. 무엇보다도 정치권력이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각종행태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겠다는 엄숙한 대국민 다짐인 것이다.

군과 공무원의 정치중립성에 대한 헌법문언의 차이는 헌법정치 차원의 굵직한 맥락을 갖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중립성 보장조항은 4.19헌법에 처음 들어온다. 공무원을 광범위하게 부정선거에 동원했던 자유당정권의 쓰라린 경험을 반영해서다. 반면 교육의 정치중립성 보장조항은 5.16헌법에서 신설된다. 5.16군사쿠데타의 산물이라는 뜻이다. 5.16쿠데타세력은 집권하자마자 4.19혁명기에 결성돼 확대일로 중이던 대구 교원노조 주동세력을 구속하고 교원노조를 해산시켰다. 1963년 전면개헌을 주도한 군사쿠데타세력이 이미 ‘공무원의 정치중립성’ 문구가 들어있는데도 특별히 ‘교육의 정치중립성’ 문구를 신설한 배경일 것이다. 공무원의 정치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중립성 보장조항을 손에 쥔 5.16군사정권은 공무원과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써서는 안 될 국가의무를 다양한 금지입법으로 구체화하는 대신 엉뚱하게도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시민권을 박탈하는 공무원법, 선거법, 정당법을 줄줄이 만들어내는바 이것이 현행법제의 모태를 이룬다.

3. 현행법제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교원의 정치활동을 직무내외, 근무시간내외, 학교안팎을 불문하고 금지한다는 점이다. 직무수행과 아무 관련 없이 근무시간 밖, 학교 밖에서 시민으로서 정당활동이나 선거운동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직위와 직책에 따라, 예컨대 교장인지, 장학관인지, 평교사인지에 따라, 또는 사회교과교사인지,

예술교과교사인지, 비교과교사인지에 따라, 직무의 정치연관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무 구별 없이 모든 교원에 대해 일률적, 획일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입법은 크게 보면 직무내외를 구별하거나 직위와 직책을 구분하거나 둘 다 구분하는 방식으로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전자의 방식, 즉, 직무 외 정치활동 전면보장방식으로 가야한다는 데 최소한 합의가 돼있다.

4. 헌법재판소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중립의무를 직무수행 중에만 요구되는 직무상 의무로 한정해야한다는 주장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며 현행법의 손을 들어줘왔다. 직무수행성이나 직무연관성이 없어도 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얼마든지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직무내외 구별조차 없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현행법의 각종규정이 헌법적으로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금지문언이 명확해서 금지사항을 교원이 파악하는 데 문제가 없고 금지사항이 과잉금지원칙, 특히 침해의 최소성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현재는 교원의 정치중립의무를 교원의 직무상 의무가 아니라 신분상 의무로 파악한다. 현재에 따르자면 교사라는 직업은 정치시민권을 향유할 수 없는 카스트(직업에 토대를 둔 신분)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시민권이 없는 신분을 불렀던 용어는 천민이다. 한국의 교사는 2024년 현재 천민카스트다. 정치기본권 확보운동은 면천운동이다.

5. 교원의 직무는 정책업무를 다루거나 현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민원을 다루는 일반 공무원의 직무와 다르다. 교육공무원(교원)은 법령에 따라 미성년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직무의 성격상 정치세뇌교육 가능성만 적절하게 차단된다면 직무를 통해 정치중립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현재는 이런 사실에 눈 감는다. 실은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정치세뇌교육을 할 이유와 유인도 거의 없다. 그랬다가는 학생의 항의와 이견, 학부모의 민원, 동료교사의 눈총, 교장의 징계, 형사처벌의 위험이 기다리기 때문이다. 교원은 민주사회의 교사의 역할이 세뇌교육과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교육전문가다. 예외 없이 교육수준이 높고 준법의식과 책임감이 강하다. 현실적으로는 가장 믿음만한 집단의 하나다. 현재는 이런 사실도 애써 외면한다. 더욱이 교원은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할 법적 사명과 책임을 가진 유일한 직종이다. 그렇다면 교원에게는 지금처럼 정치참여활동을 금지할 게 아니라 정치참여활동을 권장해야 맞다. 누구보다 먼저 교사들이 능동적인 민주시민으로서 민주정치의 민낯과 속살을 속속들이 경험하고 이해하며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어야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낼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헌법적 요청에도 모르쇠로 일관한다.

6. 현재는 교사의 경우 직무 내외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직무내외로만 정치중립의무를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입장이다. 학생은 수용성과 모방성이 강한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교사의 언행은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잠재적 교육과정을 이

룬다는 것이다. 실은 아이의 발달과정에 따라 미성숙의 정도도 다르고 그에 따라 수용성과 모방성의 정도도 다르겠지만 직무 밖, 학교 밖이라고 해도 교사의 삶은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배우고 영향 받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라는 지적엔 일말의 진실이 있다. 가정이나 지역사회, TV뉴스와 언론을 통해 아이들이 보고 있는 다양한 어른들의 모든 삶은 아이들에게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인 게 틀림없다. 그 중에서도 선생님의 삶은 아이들에게 좀 더 친밀하고 유의미하게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현재가 야간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정당활동이나 선거운동, 집회참석 등 적극적 시민활동을 전개하는 교사의 모습이 아이들한테 나쁜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예단한다는 점이다. 현재는 여기서 완전히 틀렸다. 적극적 정치참여는 민주시민에게 권장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7. 현재의 판단대로 직무내외 구별조차 소용이 없을 만큼 교육의 정치중립성이 중요하다면 교사의 본선투표권, 즉, 특정정당이나 소속후보 지지권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될 것이다. 대다수 시민들은 정당가입을 하지 않아도 지지정당이 있다. 배우자는 바뀌도 지지정당은 쉽게 바꾸지 못할 만큼 누구에게나 지지정당은 본인정체성의 굳건한 일부를 이룬다. 본인의 가치관 및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논리에 따를 경우 지지정당을 확실하게 가진 교사들에게서 교육의 정치중립성을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와 다를 게 없다. 물론 말이 안 된다. 현실세계에서는 교사에게 종교(활동)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해서 교사가 직무수행 중에 좀처럼 종교중립성을 침해하지 않듯이 교사에게 정치활동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해서 교사가 직무수행 중에 좀처럼 정치중립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기본권제한은 입증책임을 제한당국이 진다. 정치기본권은 민주국가와 주권자지위에서 직접 도출될 뿐 아니라 여타 기본권 실현의 도구라는 점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제한당국에게는 제한사유에 대한 초강력 입증책임이 요구된다. 위에서 정리한 현재논거들이 과연 초강력 설득력을 갖는지는 판단에 맡긴다.

8. 학부모와 시민들은 교사가 특정정당의 당적을 갖고 정당활동에 참여하거나 당적선거(교육감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에서 낙선/임기종료 후 교직에 돌아올 경우 학생들에게 소속정당에 유리한 정치견해를 주입, 세뇌할까 우려한다. 당적이 다른 교사들이 교무실에 섞여있을 때 특히 선거를 앞두고 교사 간 갈등이 심해질 것을 우려한다. 당적이 있는 교사가 동일당적을 가진 학부모에게 더 친근하게 굴고 반대당적을 가진 학부모에게는 불리하게 굴까 경계한다. 교사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무당파 학부모를 소속정당에 우호적으로 만들까 걱정한다. 이것이 교육의 정치중립성을 앞세워 국가가 법률로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해온 이유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유일 것이다. 일반시민처럼 정치시민권을 줄 경우 교사가 수업활동 중에, 또는 교무실에서, 또는 학부모와 관계에서 정치활동을 할까 우려하는 것이다.

9. 학부모와 일반시민들의 정당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교사는 아이들에게 정치수업을 하거나 기타 교육활동을 수행할 때 아이들에게 본인의 정치적 견해를 일방적으로 주입하거나 세뇌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논쟁적인 정치사안을 다룰 경우에는 다양한 입장을 균형 있게 제시함으로써 사안의 논쟁적 성격을 재현하고 가급적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이끌어야한다. 이를 위해 교육감이 주도해서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교원노조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들이 세뇌교육금지협약을 체결하고 정치중립적 정치교육방법에 대해 체계적인 교사연수를 실시하면 좀 더 공신력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 둘째, 교무실은 물론이고 학교 안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예를 들어 정당가입원서나 정당홍보물을 배포하거나 정당배지를 착용하거나 정당모임을 갖는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근무시간 중이건 근무시간 후이건 상관없이 금지한다. 셋째, 교원은 직무상 알게 된 학부모나 거래처에 교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정당 가입이나 특정후보 지지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규정한다. 교사의 정치시민권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민들에게도 이만하면 불안을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10. 교사정치시민권 확보의 황금열쇠는 교육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를 신분상 의무가 아니라 직무상 의무로 올바르게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직무상 정치금지, 직무밖 정치자유’ 슬로건을 내걸고 단일대오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 직무밖 정치자유라고 할 때 핵심 고리는 정당가입/정당활동 금지를 푸는 데 있다. 정당가입과 정당활동을 풀면 선거운동권, 경선투표권, 정치자금후원권이 줄줄이 따라온다. 당원으로 몇 해 활동하고 리더십을 인정받으면 공천을 받아 선출직에 도전할 기회가 열린다. 이렇게 되면 90일전 사퇴강제조항이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 정당민주주의국가에서 시민의 정당가입과 정당활동은 권장할 일이지 금지할 일이 아니다. 교사의 경우에는 민주시민을 길러낼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당참여가 더 권장된다. 요컨대 헌법의 관점에서는 교원의 직무상/근무시간 중/ 학교 안 정치활동 금지를 전제로 교원의 직무 밖/근무시간 밖/학교 밖 정치활동은 적극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법전망과 성공조건

위에서 정리한 최소한의 합의에 터 잡아 교육계가 단일대오를 형성해서 보장입법을 추진할 경우 22대국회에서는 성공가능성이 있을까? 21대국회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협력하면 우선추진과제를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있었듯이 22대국회에서도 민주당과 혁신당이 협력하면 국힘당이 아무리 강력하게 반대하더라도 얼마든지 보장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입법할 수 있다. 다만 국힘당과 보수언론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교총과 보수학부모단

체가 함께 춤을 출 경우 일반여론의 뒷받침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렇게 되면 국회를 통과한 보장입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우리정부에 보장입법을 권고한 바 있는 유엔, OECD, EU, ILO, EI 등 국제기구들과 국가인권위가 전부 나서서 대통령에게 거부권행사 자제를 권고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국내정치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교원노조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 국내여론동향일 것이다. 교사집단이 단일대오를 유지하지 못하고 학부모단체의 반대가 심하고 지금처럼 여론조사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윤석열 정부가 계속되는 이상 야권주도로 국회통과에 성공하더라도 거부권행사가 예상된다는 뜻이다. 서이 초사태 때처럼 교사당사자들이 수십만씩 모여서 한목소리로 거부권행사를 반대할 때만 거부권행사를 막을 수 있다.

엄격히 말하자면 교사정치기본권문제는 지금까지 정치권과 공론장에서 본격적인 의제화가 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당사자들의 요구가 강하지 않고 간헐적이었다. 오랫동안 교사출신으로만 구성되는 15인 교육위원회가 시도별로 운영됐기 때문에 필요를 못 느낀 측면도 강하다. 교육위원회제도가 폐지된 2010년 이후부터 교사정치기본권 요구가 종전에 비해 더 올라오긴 했다. 교총은 ‘말 따로 실천 따로’였다. 회장선거에서 교사정치기본권을 공약의 하나로 내건 후보가 당선돼도 내부적으로는 반대기류가 강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파트너격인 국힘당이 반대방침을 표명하면 침묵하고 따라갔다. 전교조도 고작해야 3대 요구사항이나 집중투쟁의 후순위과제로 내걸었을 뿐 가장 중요한 단일요구사항으로 내걸고 투쟁한 적이 없다. 더욱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늘 반대여론이 압도했고 헌법재판소도 간간이 합헌판결로 현행법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상황과 조건을 바꾸지 않는 이상 민주당과 혁신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서 금년 정기국회에서 입법에 성공해도 대통령거부권의 벽을 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교원노조들과 교원단체들이 교사당사자들의 주체적 각성과 요구를 집중적으로 모아내는 시간을 가져야한다. 두세 달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지역에서 지역정치권과 지역시민사회와 함께 지역토론회를 개최해야한다. 소속여하를 불문하고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머리를 맞대고 최소한의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 특정교원노조만의 힘으로는 안 된다. 정치권 교섭만으로도 안 된다. 정치기본권 확보를 원하는 모든 교원노조와 교원단체가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 학부모와 일반시민을 최대한 설득할 수 있어야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적절한 시점에 교원노조의 재정으로 또는 교사들의 십시일반 후원금으로 본격적인 공론조사나 추첨시민의회를 조직하고 관심 있는 언론인들과 국회의원들을 초청해서 학습숙의과정의 진행에 따라 시민의견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지켜보고 보장입법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요컨대, 교원노조지도부의 정치권 교섭과 함께 교사집단의 각성과 결의 확산, 교원노조와 교사단체의 단일대오 형성과 단일안 요구, 숙의여론조사나 추첨

시민의회에 의한 숙의민심 확인 등 전방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OECD국가 중 우리나라 아이들만 체벌을 받고 있던 2010년 당시 나는 도대체 우리아이들만 체벌을 받아도 마땅한 좋은 이유가 있는지 살펴봤다. 찾을 수 없었다. 교사정치기본권문제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다. OECD국가 중 우리나라 교사들만 천민카스트로 대우받아 마땅한 좋은 이유가 있는지 살펴봤다. 찾을 수 없었다. 명색이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논거들마저 믿기지 않을 만큼 빈약하고 허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천민 대우를 받는 교사집단이 스스로 떨쳐 일어나지 않는 이상 면천은 불가능하다. 너무 늦은 때는 없다. 지금이 최적기다. 교사노조연맹이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조합원의 마음을 모아내면 정치 환경은 더없이 좋다.

그럼에도 혼자 가서는 안 된다. 어떤 교원단체도 이번에 판소리를 하면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교사노조와 전교조, 교사단체들이 똘똘 뭉쳐야한다. 그래야 교총도 연합전선에 함께한다. 누구보다 교사노조와 전교조가 협력하며 앞장서서 교사정치기본권 단일대오를 구축하는 일을 서둘러야한다. 그리하여 향후 시군구 지역단위마다 단일대오 소속 현장교사들이 중심이 돼 오늘 같은 토론회를 개최하기를 희망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보다도 당사자인 평교사들이 먼저 본인들의 정치천민상태를 자각하는 일이다. 교원노조와 교원단체 지도부는 잠자는 교사집단을 깨어나게 할 책무가 있다.

교사당사자들이 투쟁에 소극적인 이상 정치권은 더 절박하게 움직이는 투쟁집단들의 입법요구를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다. 교사당사자들이 절박성을 갖고 단일대오를 갖춰 한목소리로 요구하지 않으면 민주당이건 혁신당이건 교사정치시민권보장입법을 최우선입법 과제로 지정하고 당력을 기울여서 움직일 이유가 전혀 없다. 시민사회, 특히 학부모단체의 지지와 협력도 다르지 않다. 면천입법은 교사당사자들이 깨어나서 한마음으로 요구할 때만 가능하다. 그래야 시민사회와 언론이 움직이고 그때 비로소 정치권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승리가 머지않았다.

교원의 교육정책 개입 및 정치기본권 보장과 교직사회의 과제

- 교원 및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박 현 미

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주요 목차〉

I. 서론	59
1. 연구목적	59
2. 연구배경	60
3. 설문조사 개요	62
II. 정치와 교원의 정치기본권에 관한 기본 인식	66
1. 정치 및 교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관심	66
2. 정치에 대한 이해(생각)	68
3.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의미와 관련 인식	69
III. 교육정책 및 제도 수립과 교원의 역할	73
1. 교육정책 평가	73
2. 교육정책의 수립과 교원의 참여와 개입 문제	74
3. 교원의 교육정책 개입 방안	76
4. 교육감 선거와 교원의 역할	77
IV.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범위와 정치기본권 제한 현황	78
1. 대학교원 교수와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에 대한 인식	78
2. 정치활동 허용 범위 관련	79
V.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방안과 (노조) 과제	83
1. 유·초·중·고 교원의 정치기본권 허용을 위한 조건	83

* 본 발제문은 박현미·김성천·황유정(2023)의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방안 연구』(한국노총중앙연구원)를 토대로 함.

2.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2, 3 순위	84
3.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기본권 부여로 기대되는 효과 1, 2, 3 순위	85
VI. 결론: 공교육 개선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과제	87
1. 교육정책 및 제도 설계에서 교사의 전문성 활용 방안 마련	87
2. 정치나 교육의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90
3. 교직사회와 교사노조연맹의 과제	83
〈부록 1〉 외국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과 그 범위	95

〈표 차례〉

〈표 1-1〉 교육 및 보육 관련 직업인의 정치활동 허용 현황	59
〈표 1-2〉 설문 구성	63
〈표 1-3〉 응답자 기초 현황(교사와 학부모)	65
〈표 2-1〉 정치 및 교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관심 정도	66
〈표 2-2〉 정치 개념과 교원 정치활동 허용범위 문항과의 상관관계	67
〈표 2-3〉 정치에 대한 생각	69
〈표 2-4〉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중립성에 대한 인식	70
〈표 2-5〉 교육의 정치중립성 보장에 대한 인식	71
〈표 2-6〉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방안	72
〈표 2-7〉 정치적 중립 의무로 수업시간에 행동이나 말 조심(교사 응답)	72
〈표 2-8〉 교사의 정치편향적 교육 우려(학부모 응답)	73
〈표 3-1〉 교육정책 평가	73
〈표 3-2〉 교육정책에 교원 의견 반영	75
〈표 3-3〉 교육정책 수립과 교원의 역할 인식	75
〈표 3-4〉 교원의 전문성 평가	76
〈표 3-5〉 교원의 교육정책 개입 방안	77
〈표 3-6〉 2022 교육감 선거 시 후보 선택 기준	78
〈표 4-1〉 대학교원 교수와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자유에 대한 의견	79
〈표 4-2〉 국가별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 여부와 범위	80
〈표 4-3〉 OECD 수준으로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에 대한 인식	80
〈표 4-4〉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기본권 허용 범위	82
〈표 5-1〉 교사의 정치편향적 교육 대응 방안	83
〈표 5-2〉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2, 3 순위	85
〈표 5-3〉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기본권 부여로 기대되는 효과 1, 2, 3 순위	86
〈표 6-1〉 연구결과 제기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및 확대를 위한 과제	88

〈그림 차례〉

[그림 3-1] (선행연구) 우리나라 교육정책 추진 시 중점 사항(전체, 2019~2022년)	74
[그림 5-1]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1, 2, 3 순위(종합)	84
[그림 5-2]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보 부여로 기대되는 효과1, 2, 3 순위(종합)	86

I. 서론

1.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교원¹⁾의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 보장과 정치기본권 보장 및 확대를 위한 교직사회와 노조의 과제를 찾고자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같은 교원이라도 대학교원인 교수는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아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있으나 유·초·중등²⁾ 교원들은 정치기본권을 크게 제한받고 있다. 같은 연령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사, 학원 강사들도 정치활동에 제약이 없다. 심지어 학생들도 16세부터 정당가입이 가능하고, 18세부터 투표에 참여하고 선거운동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을 지도하는 유·초·중등 교사는 정치기본권을 크게 제약받고 있다.

〈표 1-1〉 교육 및 보육 관련 직업인의 정치활동 허용 현황

대상	정당 가입	정당활동	정치자금 기부	선거운동	공직출마	정치적 자유
대학교수	○	○	○	○	○	허용
어린이집 교사	○	○	○	○	○	
방과후학교 강사	○	○	○	○	○	
학원 강사	○	○	○	○	○	
초등 교사	×	×	×	×	×	불허
중등(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	×	×	×	×	
유치원 교사	×	×	×	×	×	

한국의 경우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기본권 제한으로 교원은 교육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배제되는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즉, 교육현장에서 교육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책임지고 있는 유·초·중등(유·초·중·고) 교원은 교육전문가임에도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아 교육정책 수립 및 집행 등의 과정에서 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다. 오랜 기간 전문성이 결여된 교육정책이 지속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교육문제는 누적되어 왔고 교육여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2023년 7월 서이초 교사의 사망사건은 이런 교육계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

1) 교원은 공립·사립에 관계없이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대학(교)·대학원·특수학교 등에서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의 교장·교감·교사, 대학(교)의 총장·부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조교, 유치원의 원장·원감·교사, 각종 학교의 교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중등학교 정교사 1~2급 교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이다(중등교사 - 나무위키 (namu.wiki)).

여중으로써 우리 사회 교육문제의 해결 지점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던져 준다.

이에 본 연구는 정치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는 유·초·중등(유·초·중·고) 교원을 중심으로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교직사회와 노조의 과제를 탐구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발제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1장 서론에서는 연구목적과 연구배경, 설문조사 개요를 설명하였다. 2~5장까지는 교사와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분석을 서술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치와 교원의 정치기본권에 관한 기본 인식(II), 교육정책 및 제도 수립과 교원의 역할(III),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범위와 정치기본권 제한 현황(IV),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방안과 (노조) 과제 순으로 설문 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 결론에서는 본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교육 개선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부록으로 ‘외국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과 그 범위,’ ‘교사의 정치기본권 관련 교사노조연맹 추진(안)’을 수록하였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 노동조합 과제에 집중하는 것은 교원의 노동권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정치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노동조합만큼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동원력, 인적 물적 자원을 갖고 있는 대규모의 자발적인 시민사회단체는 거의 없다. 게다가 한국사회에서 노조만큼 노동자의 노동권 나아가 시민권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온 단체도 드물다. 그동안 노동자로서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해 애써왔고 현재 노력하고 있는 조직도 노동조합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과제를 교직사회와 함께 노조의 과제를 중심으로 제기하였다.

2. 연구배경

최근 몇 가지 차원에서 교원의 정치기본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첫째, 교원의 정치기본권 문제는 교육문제 해결과 교육정책 수립 및 결정을 위한 교원의 적극적인 역할론과 관련이 있다. 교육현장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기획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교사나 교사노조가 참여하는 것은 정책의 시행착오나 실패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최근 탁상행정으로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했던 사건들은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교육부의 태도에 기인한다. 예컨대 2023년 6월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인 4세대 나이스(NEIS) 오류 사태로 야기된 교육현장의 극심한 혼란은 대표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뉴시스, 2023.06.24.). 당시 학생 인적 사항 및 성적 등 중요 정

보가 유출되고, 오류가 발생해서는 안될 평가과정에 대혼란이 발생하여 전국의 중등교사들이 시험문제를 다시 출제하는 일이 발생했다. 2022년에는 교육부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정책을 제시해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적인 여론에 직면하면서 교육부 장관이 취임 34일만에 자진 사퇴하는 일도 있었다. 2023년 7월 18일에는 서울서초등학교 교사가 세상을 등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 이후 10월 28일까지 11차례의 교사 집회가 열렸는데 특히 9월 2일에는 30만 교사들이 국회 앞에 집결하였다. 교육현장이 배제된 교육입법과 교육정책의 결과, 교사들이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극도의 신체적·정신적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태들은 교육정책 수립과 제도 설계 및 개선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교육당국에 교육전문가가 없거나 교육전문가의 견제장치가 작동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이유로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데 있다. 이에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는 헌법상 정치기본권 보장이라는 원칙적인 접근을 넘어 교육현장과 괴리된 교육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교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논의가 현재 시급한 것은 법·제도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예컨대 법 개정, 헌재 판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교육부의 태도, 국제사회의 요구 등과 연관된다. 우선 공직선거법(2020년)과 정당법(2021년) 개정으로 정치참여 연령이 하향 조정되어 이에 맞는 학교 교육의 변화가 요청되고 있다(박은아 외, 2022). 2020년 4월 23일 헌법재판소 판결은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의 물꼬를 터주었다³⁾(전경원, 2020.04.24.). 2019년 국가인권위는 정치적 표현과 정당가입 등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 판단하며 국가공무원법과 관련 법률 조항, 하위 법령 등의 개정을 정부에 권고하였다(한겨레, 2019. 04. 29.). 교육부는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과하게 제한하는 법령을 고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일부 수용’하겠다는 입장⁴⁾(시사주간, 2019.08.05.)을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교원 노동자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침해로 ILO 협약 비준에 따라 없애야 할 주요 과제(매일노동뉴

3) 50만 교원과 수백 만에 이르는 그 가족들이 이제부터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대단히 아쉽다. 그러나 달리보면 교사 정치기본권의 물꼬를 터준 셈이다. 얼마만큼 열어젖히는가는 철저하게 교사들의 몫이다. 열린 공간으로 하나, 둘씩 정치기본권을 과감하게 행사하는 주체들이 정치 현장에 많아져야 한다. 정당가입과 정당활동은 여전히 족쇄로 작용하지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정치활동은 활짝 열렸다. 정당가입이 필수 조건이 아니라면 그 어떤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것도 가능해졌다(전경원, 2020.04.24.).

4) 2018년 4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의 사법처리 중단 및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냈다. 이를 바탕으로 인권위는 2019년 4월 “공무원, 교원이 공직수행의 담당자이면서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기본권 주체가 됨은 헌법 및 국제규약, 판례 등에 비추어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정당가입,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금지하는 것은 헌법, 국제규약 및 해외 사례, 과잉금지 등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시사주간, 2019.08.05.).

스, 2023.06.12.)로 제시되었다.⁵⁾ 이처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국제사회의 요청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사회적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교사의 정치기본권 문제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찾아 나가야 한다. 교육받을 권리는 주요한 기본적 인권이며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국가의 주요한 책임이다. 국민의 교육받을 기본권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전문가가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전문가인 교사가 교육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교원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즉 시민으로서의 개인적 권리를 제한받게 된다(전일균, 2015: 271).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교사가 교육정책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참여를 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교원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도 수행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에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관한 논란은 교직사회나 사법부 관계기관에서의 문제를 넘어 잠재적 갈등 이슈가 되고 있다(한석준 외, 2017). 게다가 현실적으로 교원의 정치적 참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도 적지 않다(문화일보, 2017.08.16.; 경향신문, 2001.05.17.). 때문에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및 확대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논리 제시가 더욱 필요하다. 교직사회와 노조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기본권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논리와 근거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해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교직사회와 노조의 과제를 찾아보고자 한다.

3. 설문조사 개요

1) 설문 대상 및 구성

설문조사는 교원의 교육정책 개입과 정치기본권 보장 및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조의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설문은 교육의 핵심주체인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2023. 07. 12.~23.(12일간) 온라인으로 시행되었다. 그 결과 총응답자는 13,595명인데 이중 교사 11,409명(83.9%), 학부모 2,186명(16.1%)이다.

설문내용은 통계처리 문항을 포함해 6가지 범주로 구성하였다. (<표 1-2> 참조

5)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발효된 ILO 제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에 따라 교원노조법 제3조는 개정해야 할 핵심 법 조항의 하나임. 교원노조가 행하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금지한다는 것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임.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 등 정치기본권 제한은 1998년에 비준한 ILO 제111호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에도 위반됨. ILO의 ‘협약 및 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초·중·고 교사들의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 참여 같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고용과 직업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111호 협약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표 1-2〉 설문 구성

1. 통계처리 기초 문항	(응답자 인적 사항) (신분), 연령, 성별, 현재 직급, 교직 경력, 근무학교, 설립 유형, 지역
2. 교사노조 연맹 및 교원에 대한 인식	- 교사노조연맹의 인지 여부 및 이미지 평가 - 교원에 대한 인식(교육정책 전문가, 교육현장 문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3. 정치와 교육, 교육의 중립성에 대한 인식	1. 정치의 개념과 목적 - 정치에 대한 관심 -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및 확대에 대한 관심 - 정치에 대한 이해 1: 정치=전문정치인들의 사회적 활동 - 정치에 대한 이해 2: 정치=의견차이, 이해관계, 갈등 조정활동 2.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과 정치 관계 포함됨_의미적으로)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평가 - 교육정책에 대한 정권의 영향 평가 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인식 - 헌법 제7조 ②항(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대한 이해 - 헌법 제31조④(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대한 이해 -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인식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실현과 교육정책에 대한 교사의 감시 비판 기능의 관계 인식 -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로 인한 교사의 수업권 침해 인식(교사용)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 인식(학부모용)
4. 교육정책 평가와 교원의 정책참여,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에 대한 의견	1. 교육정책 평가: 일관성, 신뢰성, 현장 적합성 (5- 3, 4, 5항) 2. 교육정책의 수립과 교원의 참여와 개입 문제 - 교원의 교육정책에 대한 정치권 의견 제시에 대한 필요성 인식 - 정치적 중립성 의무로 인한 교원의 정치권에의 교육정책 관련 의견제시 불가에 대한 인식 - 교육정책에 대한 교원의 의견 반영에 대한 인식 - 교원단체의 정당과의 정책협약 체결에 대한 인식 3.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에 대한 인식 4. 교육감 선거의 후보 선택 기준
5.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범위와 정치기본권 제한 현황	1. 교원의 정치활동 OECD 수준으로의 허용에 대한 인식 2. 교육감 선거 시 휴직 출마 허용에 대한 인식 3. 정당에 정치 후원금 기부 허용에 대한 인식 4. 수업시간 외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 표명 허용에 대한 인식 5. 정당의 예비후보 선출과정 참여 허용에 대한 인식 6. 유·초·중등 교원의 업무시간 외 정치활동 허용에 대한 인식 7. 교수의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의견 - (유·초·중등 교원과 교수의 차별 관련 문항) 8. 정치참여 연령의 하향 조정으로 인한 고교 교원의 정치활동 자유 허용에 대한 의견 9.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자유에 대한 의견
6.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과제	1. 유·초·중·고 교원의 정치기본권 허용을 위한 조건 - 정치편향 교육 교사에 대한 처벌 법 개정에 대한 의견 - 정치편향 교육 교사에 대한 교사와 교원단체의 원칙과 기준 마련에 대한 의견 2.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2, 3 순위 3.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기본권 부여로 기대되는 효과 1, 2, 3 순위

2) 응답자 기초 현황

전체 응답자는 총 13,595명인데 이중 교사는 83.9%(11,409명), 학부모는 16.1%(2,186명)이다. 교사 응답자의 기본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대를 보면 교사는 30-40대가 절대다수인데, 30대가 40.5%로 가장 많고 이어 40대(32.7%), 20대(21.5%) 순으로 많다. 성별로 보면 응답자 절대다수가 여성으로 82.6%에 달한다. 현재 직급으로 보면 일반교사가 79.6%로 가장 많고 이어 보직교사가 20.0%를 차지한다. 교사 근무경력은 5-20년미만 교사가 거의 과반에 이르는데 5-10년미만 경력자는 25.5%, 10-20년미만 경력자는 24.1%에 이른다. 이외 교사의 근무경력은 5년미만(17.7%), 15-20년미만(16.5%), 20년이상(16.1%)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학교는 초등학교가 84.5%도 압도적으로 많다. 이어 교사들은 중학교(7.6%), 고등학교(5.4%), 유치원(1.6%) 순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근무학교 설립유형을 보면 국공립이 98.9%로 거의 다수이다. 교사 응답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26.0%로 전체의 1/4이 넘는다. 이어 교사 응답자들은 서울(11.1%), 대전(7.5%), 부산(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응답자의 기본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대를 보면 학부모는 40대가 과반이상으로 57.9%에 이른다. 이어 학부모 중 30대가 27.8%로 다수이며 이외 50대 이상(10.3%), 20대(4.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응답자 절대다수가 여성으로 75.3%, 남성은 24.7%에 달한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급을 보면, 초등학교가 50.7%로 절반에 이른다.⁶⁾ 이외 자녀가 다니는 학교는 유치원(17.3%), 중학교(13.5%), 고등학교(8.4%) 순이다. 학부모 응답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와 대전이 45.7%로 과반에 가깝다. 학부모 응답자 중 거주지역은 경기도 24.8%, 대전이 20.9%에 이른다. 이어 학부모 응답자들은 서울(11.1%), 대전(7.5%), 부산(7.8%), 인천(5.2%)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결과 해석 시 유의할 사항이 있다. 전체 교사 응답자 중 초등학교(84.5%), 여성(82.6%), 일반교사(79.6%), 국공립응답자(98.9%)가 그 외 응답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점이다.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 40대(57.9%), 여성(75.3%)이 다른 연령대나 남성보다 많다.

6) 자녀의 재학 중인 학교급 문항의 경우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재학 자녀 중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체크하도록 함.

〈표 1-3〉 응답자 기초 현황(교사와 학부모)

구분			명	%	구분		명	%
교사	현재 연령 (만)	20대	2,453	21.5	근무학교	특수학교	69	0.6
		30대	4,620	40.5		기타	23	0.2
		40대	3,730	32.7		전체	11,409	100
		50대 이상	606	5.3	설립유형	국공립	11,289	98.9
		전체	11,409	100		사립	120	1.1
	성별	여성	9,425	82.6		전체	11,409	100
		남성	1,984	17.4	지역	서울	1,270	11.1
		전체	11,409	100		부산	824	7.2
	현재직급	일반교사	9,086	79.6		대구	441	3.9
		보직교사	2,285	20		인천	783	6.9
		수석교사	4	0		광주	124	1.1
		교장.교감	25	0.2		대전	856	7.5
		교육전문직원	9	0.1		울산	189	1.7
	전체	11,409	100	세종		330	2.9	
	교직경력	5년미만	2,018	17.7		경기	2,967	26
		5-10년미만	2,909	25.5		강원	559	4.9
		10-20년미만	2,754	24.1		충북	485	4.3
		15-20년미만	1,887	16.5		충남	498	4.4
		20년이상	1,841	16.1		전북	509	4.5
		전체	11,409	100		전남	670	5.9
	근무학교	유치원	184	1.6		경북	486	4.3
		초등학교	9,644	84.5		경남	351	3.1
		중학교	868	7.6		제주	67	0.6
		고등학교	621	5.4		전체	11,409	100
학부모	현재 연령 (만)	20대	88	4	지역	대구	86	3.9
		30대	607	27.8		인천	113	5.2
		40대	1266	57.9		광주	42	1.9
		50대 이상	225	10.3		대전	457	20.9
		전체	2186	100		울산	38	1.7
	성별	여성	1645	75.3		세종	60	2.7
		남성	541	24.7		경기	542	24.8
		전체	2186	100		강원	73	3.3
	자녀학교	유치원	378	17.3		충북	64	2.9
		초등학교	1108	50.7		충남	54	2.5
		중학교	296	13.5		전북	79	3.6
		고등학교	184	8.4		전남	54	2.5
		특수학교	2	0.1		경북	41	1.9
		기타	218	10		경남	73	3.3
		전체	2186	100		제주	10	0.5
	지역	서울	229	10.5		전체	2186	100
		부산	171	7.8				

II. 정치와 교원의 정치기본권에 관한 기본 인식

이 장에서는 정치와 교원의 정치기본권 문제, 교육의 정치 중립성에 관한 교사와 학부모의 기본 인식을 살펴보았다.

1. 정치 및 교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관심

설문조사에서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부모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사나 학부모 다수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이들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나 확대에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는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문항에 교사는 84.8%(매우 동의 34.7%, 조금 동의 50.1%), 학부모는 83.9%(매우 동의 36.8%, 조금 동의 47.1%)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러나 ‘나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및 확대에 관심이 많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교사는 97.0%(매우 동의 78.0%, 조금 동의 19.0%)⁷⁾, 학부모는 86.5%(매우 동의 55.1%, 조금 동의 31.4%)가 동의하였다.

〈표 2-1〉 정치 및 교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관심 정도

구분			매우 동의함	조금 동의함	거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 안함	전체	긍정 응답	부정 응답	평균 (4점)
4-1. 나는 정치에 관심이 많다.	교사	명	3,962	5,712	1,514	221	11,409	9,674	1,735	3.18
		%	34.7	50.1	13.3	1.9	100	84.8	15.2	
	학부모	명	804	1,030	302	50	2,186	1,834	352	3.18
		%	36.8	47.1	13.8	2.3	100	83.9	16.1	
4-2. 나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및 확대에 관심이 많다.	교사	명	8,897	2,167	301	44	11,409	11,064	345	3.75
		%	78	19	2.6	0.4	100	97	3	
	학부모	명	1,204	686	230	66	2,186	1,890	296	3.39
		%	55.1	31.4	10.5	3	100	86.5	13.5	

※ 평균: 1점 전혀동의안함, 2점 거의동의안함, 3점 조금동의함, 4점 매우동의함

7) 한석준 외(20170 평소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활동, 선거활동 등)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관심있음 63.6%, 관심없음 35.7%로 나타남. 218쪽

주목할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볼 수도 있지만 교사의 경우 정치에 대한 관심(평균 3.18점)보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및 확대에 대한 관심(평균 3.75점)이 크게 높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주요한 주체가 바로 교원 당사자라는 점에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현재 갖고 있는 정치기본권 보장 및 확대에 대한 관심을 향후 교원의 정치기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실천 활동에 결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과제가 교사노조연맹에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나 교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관심이 교사나 학부모 집단 모두에서 높다는 점은 향후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나 교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관심 정도와 교원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각종 문항 간의 상호 관련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판단이다.

〈표 2-2〉 정치 개념과 교원 정치활동 허용범위 문항과의 상관관계

구분	응답자	'정치는 전문 정치인 활동' 문항과 다음 문항 간 상관관계	'정치는 누구나 활동' 문항과 다음 문항 간 상관관계
정치 관심 및 개념	교사	교원 정치기본권 관심 많음(-.149**), 정치는 누구나 활동(-.211**),	교원 정치기본권 관심 많음(.271**), 정치는 전문정치인 활동(-.211**)
	학부모	교원 정치기본권 관심 많음(-.228**), 정치는 누구나 활동(-.262**)	교원 정치기본권 관심 많음(.452**), 정치는 전문정치인 활동(-.262**)
정치활동	교사	OECD 수준 보장(-.157**), 고교 교사 정 치활동 허용(-.123**), 교사 정치 활동 허용 (-.155**)	OECD 수준 보장(.258**), 고교 교사 정치활 동 허용(.191**), 교사 정치 활동 허용(.246**)
허용 여부	학부모	OECD 수준 보장(-.278**), 고교 교사 정 치활동 허용(-.251**), 교사 정치 활동 허용 (-.277**)	OECD 수준 보장(.494**), 고교 교사 정치활 동 허용(.442**), 교사 정치 활동 허용(.458**)
정치활동	교사	휴직 출마 허용(-.125**), 정치 후원금 허용 (-.114**), 정당 지지 표명(-.112**), 교육 감 후보 지지 표명(-.118**), 후보 경선 참여 (-.131**), 정당 활동 허용(-.148**),	휴직 출마 허용(.194**), 정치 후원금 허용 (.188**), 정당 지지 표명(.170**), 교육감 후보 지지 표명(.171**), 후보 경선 참여(.220**), 정 당 활동 허용(.216**),
허용 범위	학부모	휴직 출마 허용(-.245**), 정치 후원금 허 용(-.262**), 정당 지지 표명(-.255*), 교육 감 후보 지지 표명(-.257**), 후보 경선 참여 (-.260**), 정당 활동 허용(-.262**),	휴직 출마 허용(.468**), 정치 후원금 허용 (.461**), 정당 지지 표명(.435**), 교육감 후보 지지 표명(.445**), 후보 경선 참여(.458**), 정 당 활동 허용(.464**),
교육정책에서 교사 역할	교사	교사 의견 제시(-.117**), 정책 협약(-.070**), 사회적 대화기구(-.049**), 의견 제시 말아야 (.241**), 교원 의견 반영(.226**)	교사 의견 제시(.179**), 정책 협약(.154**), 사회적 대화기구(.129**), 의견 제시 말아야 (-.158**), 교원 의견 반영(-.131**)
	학부모	교사 의견 제시(-.229**), 정책 협약(-.214**), 사회적 대화기구(-.167**), 의견 제시 말아야 (.356**), 교원 의견 반영(.399**)	교사 의견 제시(.528**), 정책 협약(.425**), 사회적 대화기구(.472**), 의견 제시 말아야 (-.329**), 교원 의견 반영(-.333**)

- 주) ▪ 교원 정치기본권 관심 많음 (나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및 확대에 관심이 많다.),
 ▪ 정치는 누구나 활동 (정치는 다양한 사람들 사이의 의견차이나 이해관계나 갈등을 조정하는 활동으로 국민 누
 구나 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이다),
 ▪ 정치는 전문정치인 활동(정치는 전문정치인들이 하는 사회적 활동이다),
 ▪ OECD 수준 보장 (우리나라도 OECD 수준으로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한다.),

- 고교 교사 정치활동 허용 (고등학교 교사는 교육대상인 학생이 법 개정으로 16세 정당 가입, 18세 선거권 부여 등 정치참여 연령이 낮아졌으므로 교수와 같이 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
- 교사 정치 활동 허용 (유·초·중·고 교원에게도 교수, 어린이집 보육교사, 돌봄·방과후·학원 강사와 같이 정치활동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
- 휴직 출마 허용 (교육현장의 전문가로서 교사는 유·초·중등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감 선거에 교수처럼 휴직하고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 정치 후원금 허용 (교육현장의 전문가로서 유·초·중등 교원도 교육적 소신과 일치하는 정책을 제시한 후보나 정당에게 교수들처럼 정치후원금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 정당 지지 표명 (유·초·중등 교원에게도 수업 및 근무시간 외에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 교육감 후보 지지 표명 (유·초·중등 교원에게도 교육감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 후보 경선 참여 (유·초·중등 교원은 휴직 후에 시도지사·대통령 등 정당의 예비 후보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 정당 활동 허용 (유·초·중등 교원에게도 수업, 업무시간 외의 정치활동(정당 가입 및 행사 참여 등)을 허용해야 한다.),
- 교사 의견 제시 (교원이 정당이나 국회 등에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현장에 적합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
- 정책 협약 (교원단체가 정당과 교육정책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기구(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교사와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
- 의견 제시 말아야 (교원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교육당국이나 정당, 입법 기관에 교육정책의 문제나 해결방안 등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
- 교원 의견 반영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교육전문가인 교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2. 정치에 대한 이해(생각)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다수는 정치가 전문정치인들의 영역이 아닌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이라는 데 다수가 압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예컨대 ‘정치는 다양한 사람들 사이의 의견차이나 이해관계나 갈등을 조정하는 활동으로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이다’는 문항에 교사의 99.1%, 학부모의 95.9%가 동의하고 있다. 반면 ‘정치는 전문정치인들이 하는 사회적 활동이다’는 문항에는 교사는 17.9%, 학부모는 33.8%가 찬성하고 있다. 교사나 학부모의 경우 ‘정치는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이라는 항목에 압도적인 대다수가 동의하면서도 ‘정치는 전문정치인의 사회적 활동’이라는 문항에 교사는 10명 중 2명 미만, 학부모는 10명 중 3명 이상이 동의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정치가 전문정치인의 사회적 활동이기도 하고 국민 누구나의 활동이기도 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표 2-3〉 참조).

전체적인 경향으로 볼 때 설문에 응답한 교사와 학부모 다수가 정치를 선출된 정치인 등 정치활동을 하는 일부 사람들의 활동만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다수가 정치가 사회의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활동으로서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및 확대에 관한 여론에 긍정적일 수 있다. 정치를 누구나의 활동이자 일상의 정치로 이해할 경우 일상적으로 교육전문가인 교사들이 교육정책에 의견 등을 제시하는 게 가능해야

〈표 2-3〉 정치에 대한 생각

구분			매우 동의함	조금 동의함	거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 안함	전체	긍정 응답	부정 응답	평균 (4점)
4-3. 정치는 전문정치인의 사회적 활동	교사	명	606	1,431	3,515	5,857	11,409	2,037	9,372	1.72
		%	5.3	12.5	30.8	51.3	100	17.9	82.2	
	학부모	명	232	507	562	885	2,186	739	1,447	2.04
		%	10.6	23.2	25.7	40.5	100	33.8	66.2	
4-4. 정치는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	교사	명	10,516	786	79	28	11,409	11,302	107	3.91
		%	92.2	6.9	0.7	0.3	100	99.1	0.9	
	학부모	명	1,696	401	71	18	2,186	2,097	89	3.73
		%	77.6	18.3	3.3	0.8	100	95.9	4.1	

주1) 4-3. 정치는 전문정치인들이 하는 사회적 활동이다.

4-4. 정치는 다양한 사람들 사이의 의견차이나 이해관계나 갈등을 조정하는 활동으로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이다.

주2) 평균: 1점 전혀동의안함, 2점 거의동의안함, 3점 조금동의함, 4점 매우동의함

하고 정책수립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누구나 활동으로 정치를 인식할 경우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갈등이나 문제 해결을 정치인들의 ‘협소한’ 정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문제임을 설득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교사에게 이런 권리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법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설득도 가능할 것이다.

3.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의미와 관련 인식

이번 조사에서는 교원의 정치기본권과 관련되어 있는 헌법 규정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과연 교육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고 있는지 등에 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1) 헌법 규정에 대한 이해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공무원’과 ‘교육(교원이 아님)’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 제7조 ②항(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 제31조 ④항(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에 명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교사와 학부모 다수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헌법 제7조②항은 ‘국가가 정치인 출신인 사용자(대통령,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로부터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사 77.1%, 학부모 80.6%).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헌법 제31조④항은 ‘정권이나 정당이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교사 83.9%, 학부모 84.0%).

이러한 응답은 교사나 학부모들이 헌법 제31조④항에서 명시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정권이나 정당이 특정한 목적을 갖고 교육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장치로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헌법 제31조④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 현장에서 정권이나 정당의 교육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법과 현실의 괴리 현황이나 그로 인한 문제점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내는 작업도 요청된다.

〈표 2-4〉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중립성에 대한 인식

구분			매우 동의함	조금 동의함	거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 안함	전체	긍정 응답	부정 응답	평균 (4점)
6-1. 헌법 제7조②공무원 이 정치적 중립 준수 하도록 법률로 보장	교사	명	5,454	3,340	1,406	1,209	11,409	8,794	2,615	3.14
		%	47.8	29.3	12.3	10.6	100	77.1	22.9	
	학부모	명	1,029	733	258	166	2,186	1,762	424	3.2
		%	47.1	33.5	11.8	7.6	100	80.6	19.4	
6-2. 헌법 제31조④교육 을 정치에 이용 못하 도록 국가가 법률로 보장	교사	명	7,165	2,406	861	977	11,409	9,571	1,838	3.38
		%	62.8	21.1	7.6	8.6	100	83.9	16.1	
	학부모	명	1,209	626	198	153	2,186	1,835	351	3.32
		%	55.3	28.6	9.1	7	100	84	16.1	

주1) 6-1.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헌법 제7조②)는 것은 국가가 정치인 출신인 사용자(대통령,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로부터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다.

6-2.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헌법 제31조④)는 것은 정권이나 정당이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다.

주2) 평균: 1점 전혀동의안함, 2점 거의동의안함, 3점 조금동의함, 4점 매우동의함

2)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대한 인식

과연 교육현장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고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대한 평가와 교육정책에 대한 정권의 영향 평가 문항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교사는 물론 학부모 집단에서도 10명 중 4명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잘 보장되고 있다’(교사 38.0%, 학부모 40.0%)고 답했다. 그러나 교사와

학부모 모두 압도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문항에 동의하고 있다(교사 99.2%, 학부모는 97.0%).

〈표 2-5〉 교육의 정치중립성 보장에 대한 인식

구분			매우 동의함	조금 동의함	거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 안함	전체	긍정 응답	부정 응답	평균 (4점)
5-1.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잘 보장됨	교사	명	1,857	2,473	3,456	3,623	11,409	4,330	7,079	2.23
		%	16.3	21.7	30.3	31.8	100	38	62.1	
	학부모	명	316	559	712	599	2,186	875	1,311	2.27
		%	14.5	25.6	32.6	27.4	100	40	60	
5-2. 교육정책은 정 권 영향 받음	교사	명	10,430	882	62	35	11,409	11,312	97	3.9
		%	91.4	7.7	0.5	0.3	100	99.2	0.9	
	학부모	명	1,717	404	47	18	2,186	2,121	65	3.78
		%	78.6	18.5	2.2	0.8	100	97	3	

주1) 5-1.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잘 보장되고 있다. 5-2.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주2) 평균: 1점 전혀동의안함, 2점 거의동의안함, 3점 조금동의함, 4점 매우동의함

위 두 개 문항은 사실 같은 내용으로도 볼 수 있는데, 설문 응답자들의 응답 내용에는 일관성이 없었다. 교육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진다는 것은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이 좌우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교사나 학부모 모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는 적지 않은 수가 동의하면서도 교육정책에 대한 정권의 영향이 존재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혼선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의미에 대해 다양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3)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방안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이 교사와 학부모 거의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음을 〈표 2-5〉에서 확인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교사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교사는 91.7%, 학부모는 72.6%이다. 반면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사들이 정부 편향적인 교육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을 때 지킬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 찬성하는 이들은 교사 86.9%, 학부모 84.0%에 이른다.

〈표 2-6〉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방안

구분			매우 동의함	조금 동의함	거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 안함	전체	긍정 응답	부정 응답	평균 (4점)
6-3. 교사의 정치 활동 금지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 장 가능	교사	명	218	724	2,654	7,813	11,409	942	10,467	1.42
	학부모	%	1.9	6.4	23.3	68.5	100	8.3	91.7	1.85
		명	172	427	491	1,096	2,186	599	1,587	
		%	7.9	19.5	22.5	50.1	100	27.4	72.6	
6-4. 교육의 정치적 중 립성은 교사의 정 부 편향 교육정책 감시 및 비판 시 지킬 수 있음	교사	명	7,710	2,199	598	902	11,409	9,909	1,500	3.47
		%	67.6	19.3	5.2	7.9	100	86.9	13.2	
	학부모	명	1,194	642	164	186	2,186	1,836	350	3.3
		%	54.6	29.4	7.5	8.5	100	84	16	

주1) 6-3. 교사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

6-4.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사들이 정부 편향적인 교육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을 때 지킬 수 있다.

주2) 평균: 1점 전혀동의안함, 2점 거의동의안함, 3점 조금동의함, 4점 매우동의함

4) 교원의 정치기본권 제한과 교육활동 위축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근거로 하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제한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크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에 수업시간에 행동이나 말을 조심하려고 한 적이 있다’는 문항에 대해 응답 교원들의 96.0%가 동의하고 있었다. 대부분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교육을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검열을 하거나 위축된 경험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7〉 정치적 중립 의무로 수업시간에 행동이나 말 조심(교사 응답)

구분(교사)		매우 동의함	조금 동의함	거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 안함	전체	긍정 응답	부정 응답	평균 (4점)
6-5.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로 수업시간에 행동이나 말 조 심하려 한 적 있음	명	8,724	2,224	313	148	11,409	10,948	461	3.71
	%	76.5	19.5	2.7	1.3	100	96	4	

주1) 6-5. 나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에 수업시간에 행동이나 말을 조심하려고 한 적이 있다.

주2) 평균: 1점 전혀동의안함, 2점 거의동의안함, 3점 조금동의함, 4점 매우동의함

5) 교사의 정치편향 교육 실시 우려에 대한 학부모 인식

현재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제한의 이유의 하나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정치 편향적인 교육을 실시할 우려’를 들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학교교육의 정치편향성 여부에 대한 학부모들의 응답은 엇갈리게 나타났는데 우려하는 입장(46.7%)보다 우려하지 않는 입장

(53.3%)이 좀 더 많았다(6.6% 포인트). 학부모들 중 교사들의 정치 편향적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지만 교사들을 신뢰하는 학부모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음을 보여준다.

〈표 2-8〉 교사의 정치편향적 교육 우려(학부모 응답)

구분(학부모)		매우 동의함	조금 동의함	거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 안함	전체	긍정 응답	부정 응답	평균 (4점)
5. 교사의 정치 편향적 교육 걱정한 적 있음	명	341	679	506	660	2,186	1,020	1,166	2.53
	%	15.6	31.1	23.2	30.2	100	46.7	53.3	

주1) 나는 교사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할까 봐 걱정한 적이 있다.

주2) 평균: 1점 전혀동의안함, 2점 거의동의안함, 3점 조금동의함, 4점 매우동의함

III. 교육정책 및 제도 수립과 교원의 역할

1. 교육정책 평가

이번 조사에서 교사나 학부모는 모두 교육정책을 매우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정책의 일관성, 신뢰성, 현장 적합성 등 세 가지 문항으로 살펴본 결과 이들 항목 모두에 대해 응답자의 80%~90%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교사 응답자들은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일관성이 있다.’(95.0%)는 항목과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현장 적합성이 높다.’(94.2%)는 항목에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학부모들도 교육정책의 일관성(87.5%)과 현장적합성(83.2%)을 교사들에 비해 덜하지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교육정책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교사나 학부모 모두 부정적이다. 교사는 87.7%, 학부모는 78.8%가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신뢰성에 부정적으로 답하고 있다.

〈표 3-1〉 교육정책 평가

구분			매우 동의함	조금 동의함	거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 안함	전체	긍정 응답	부정 응답	평균 (4점)
5-3. 교육정책 일관성 있음	교사	명	155	412	2,930	7,912	11,409	567	10,842	1.37
		%	1.4	3.6	25.7	69.4	100	5	95	
	학부모	명	58	215	662	1,251	2,186	273	1,913	1.58
		%	2.7	9.8	30.3	57.2	100	12.5	8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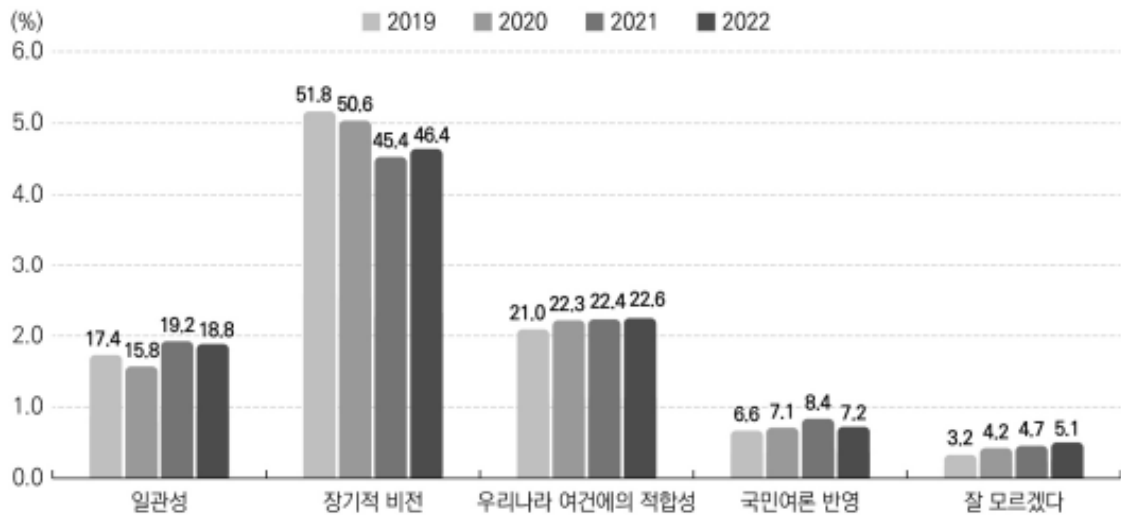
5-4. 교육정책 신뢰할 수 있음	교사	명	151	1,250	4,579	5,429	11,409	1,401	10,008	1.66
		%	1.3	11	40.1	47.6	100	12.3	87.7	
	학부모	명	44	419	834	889	2,186	463	1,723	1.83
		%	2	19.2	38.2	40.7	100	21.2	78.8	
5-5. 교육정책 현장 적합성 높음	교사	명	78	580	3,156	7,595	11,409	658	10,751	1.4
		%	0.7	5.1	27.7	66.6	100	5.8	94.2	
	학부모	명	37	331	755	1,063	2,186	368	1,818	1.7
		%	1.7	15.1	34.5	48.6	100	16.8	83.2	

주1) 5-3.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일관성이 있다.

5-4.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신뢰할 수 있다. 5-5.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현장 적합성이 높다.

주2) 평균: 1점 전혀동의안함, 2점 거의동의안함, 3점 조금동의함, 4점 매우동의함

[그림 3-1] (선행연구) 우리나라 교육정책 추진 시 중점 사항(전체, 2019~2022년)



자료: 권순형 외, 2022: 111쪽 그림

주) 평균: 1점(매우 있다) 2점(있다) 3점(보통이다) 4점(없다) 5점(전혀 없다)

2. 교육정책의 수립과 교원의 참여와 개입 문제

위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는 교육정책의 현장 적합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교육전문가로서 교원들이 교육정책에 제대로 개입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교육전문가인 교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문항에 대해 교사는 물론 학부모 대다수가 부정적으로 답했다(교사 97.0%, 학부모 83.5% / <표 3-2> 참조).

〈표 3-2〉 교육정책에 교원 의견 반영

구분			매우 동의함	조금 동의함	거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 안함	전체	긍정 응답	부정 응답	평균 (4점)
7-3. 교육정책은 교원 의견 충분히 반영함	교사	명	160	182	1,553	9,514	11,409	342	11,067	1.21
		%	1.4	1.6	13.6	83.4	100	3	97	
	학부모	명	58	303	607	1,218	2,186	361	1,825	1.64
		%	2.7	13.9	27.8	55.7	100	16.5	83.5	

주1) 7-3.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교육전문가인 교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주2) 평균: 1점 전혀동의안함, 2점 거의동의안함, 3점 조금동의함, 4점 매우동의함

이번 조사에서 교사나 학부모응답자들은 현장에 적합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 교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교원이 정당이나 국회 등에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현장에 적합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는 문항에 대해 교원은 물론 학부모들이 압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교사 99.2%, 학부모 95.0%). 반면 ‘교원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교육당국이나 정당, 입법 기관에 교육정책의 문제나 해결방안 등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다수 특히 교사들이 동의하지 않았다(교사 95.4%, 학부모 82.1%).

〈표 3-3〉 교육정책 수립과 교원의 역할 인식

구분			매우 동의함	조금 동의함	거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 안함	전체	긍정 응답	부정 응답	평균 (4점)
7-3. 교육정책은 교원 의 견 충분히 반영함	교사	명	160	182	1,553	9,514	11,409	342	11,067	1.21
		%	1.4	1.6	13.6	83.4	100	3	97	
	학부모	명	58	303	607	1,218	2,186	361	1,825	1.64
		%	2.7	13.9	27.8	55.7	100	16.5	83.5	

주1) 7-1. 교원이 정당이나 국회 등에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현장에 적합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

7-2. 교원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교육당국이나 정당, 입법 기관에 교육정책의 문제나 해결방안 등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

주2) 평균: 1점 전혀동의안함, 2점 거의동의안함, 3점 조금동의함, 4점 매우동의함

향후 현장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중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등등...) 현장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교육정책 등에 대한 참여가 중요하다. 하지만 앞서 확인한바(〈표 3-2〉) 실제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교육전문가이자 교육현장의 전문가인 교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부모 모두가 압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교원은 직접 교육을 하는 자로, 교육정책을 가장 잘 아는 교육전문가이다.’라는 문항에 대해 교사

98.2% 동의, 학부모 96.7%가 동의하고 있다. ‘교원은 교육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교사의 경우 99.8%가 동의하는데 97.4%가 매우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학부모도 97.1%가 동의하는데 78.6%가 적극 동의하고 있다.

〈표 3-4〉 교원의 전문성 평가

구분			매우 동의함	조금 동의함	거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 안함	전체	긍정 응답	부정 응답	평균 (4점)
3-1. 교원은 교육전문 가임	교사	명	9,419	1,784	192	14	11,409	11,203	206	3.81
		%	82.6	15.6	1.7	0.1	100	98.2	1.8	
	학부모	명	1,582	532	60	12	2,186	2,114	72	3.69
		%	72.4	24.3	2.7	0.6	100	96.7	3.3	
3-2. 교원은 교육현장 문제 가장 잘 앎.	교사	명	11,110	280	15	4	11,409	11,390	19	3.97
		%	97.4	2.5	0.1	0	100	99.8	0.2	
	학 부모	명	1,718	405	48	15	2,186	2,123	63	3.75
		%	78.6	18.5	2.2	0.7	100	97.1	2.9	

주1) 3-1. 교원은 직접 교육을 하는 자로, 교육정책을 가장 잘 아는 육전문가이다.

3-2. 교원은 교육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다.

주2) 평균: 1점 전혀동의안함, 2점 거의동의안함, 3점 조금동의함, 4점 매우동의함

3. 교원의 교육정책 개입 방안

앞서 설문조사 결과 교육현장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여러 문항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응답을 통해 교육정책 등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원이 교육전문가로서 교육정책 및 제도 설계 및 기획, 집행 등의 과정에 개입해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두 가지, 즉 정당과의 교육정책 협약과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문항으로 알아보았다. 그 결과 ‘교원단체가 정당과 교육정책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교사의 94.5%, 학부모들도 85.6%가 동의하고 있다.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교사와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교사나 학부모 모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교사 97.2%, 학부모 95.7%).

〈표 3-5〉 교원의 교육정책 개입 방안

구분			매우 동의함	조금 동의함	거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 안함	전체	긍정 응답	부정 응답	평균 (4점)
7-4. 교원단체와 정당한 교육정책 협약 체결 허용해야 함	교사	명	9,067	1,717	458	167	11,409	10,784	625	3.73
		%	79.5	15.1	4	1.5	100	94.5	5.5	
	학부모	명	1,258	612	220	96	2,186	1,870	316	3.39
		%	57.6	28	10.1	4.4	100	85.6	14.5	
7-5. 교육문제 해결 위해 정부가 교사와 학부모 참여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해 논의해야 함	교사	명	9,324	1,767	196	122	11,409	11,091	318	3.78
		%	81.7	15.5	1.7	1.1	100	97.2	2.8	
	학부모	명	1,594	497	66	29	2,186	2,091	95	3.67
		%	72.9	22.7	3	1.3	100	95.7	4.4	

주1) 7-4. 교원단체가 정당과 교육정책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7-5.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교사와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

주2) 평균: 1점 전혀동의안함, 2점 거의동의안함, 3점 조금동의함, 4점 매우동의함

4. 교육감 선거와 교원의 역할

교육감은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이다. 교사들의 교육정책 참여 통로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감이 어떠한 교육철학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는 공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교육감의 교육정책 공약은 매우 신중하게 교육현장에서 논의되고 토론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현재 교육감 선거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으며 그런 여건에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교사와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교육감 선거 선택기준을 알아본 결과 ‘정책공약’은 절반 내외에 불과했다(교사 55.3%, 학부모 43.0%). 정책공약 외에 다른 요소들에 의해 교육감이 선출되고 있다. ‘정책공약’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응답한 것은 ‘후보자 능력(교육경력 등)’이다(교사 23.4%, 학부모 25.5%). 이외 [소속정당+이념]을 기준으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경우는 교사의 경우 14.7%(6.3% + 8.4%), 학부모의 경우 21.4%(9.0% + 12.4%)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다. 유권자들은 교육감 후보자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후보자의 능력(31.8%), 정책과 공약(25.6%), 도덕성(25.2%), 후보자의 이념(17.5%)의 순으로 말하고 있다(김영진·가상준, 2021: 23). 본 연구에서 교육감 후보자 선택기준으로 ‘정책공약’이 김영진·가상준(2021)에 비해 많이 나온 것은 조사대상을 일반국민이 아닌 교사와 학부모에 한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두 연구결과에서 주목할 것은 소속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념이 교육감 선거 시 후보자 선택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교육감 선거 결과를 분

석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선택 시 가장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요인은 정당이었다(함승환, 2019; 김영진·가상준, 2021). 이는 교육감 선거에 실제 정당정치가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도 훼손당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3-6〉 2022 교육감 선거 시 후보 선택 기준

구분			소속 정당	이념	후보자 능력 (교육, 경력 등)	정책 공약	주위 평가	투표 안함	전체
8. 2022년 교육감 선거 후보 선택 기준	교사	명	716	961	2,671	6,309	192	560	11,409
		%	6.3	8.4	23.4	55.3	1.7	4.9	100
	학부모	명	196	271	558	939	77	145	2,186
		%	9	12.4	25.5	43	3.5	6.6	100

주1) 8.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귀하가 후보를 선택한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주2) 평균: 1점 전혀동의안함, 2점 거의동의안함, 3점 조금동의함, 4점 매우동의함

IV.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범위와 정치기본권 제한 현황

1. 대학교원 교수와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에 대한 인식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학교원인 교수는 정치기본권을 보장받고 있지만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교사나 학부모 응답자들은 대학교원인 교수나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더 많이 선택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교수도 교원이므로 정치활동을 금지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 모두 찬성(교사 32.5%, 학부모 42.9%)보다 반대(교사 67.5%, 학부모 57.1%)가 많다. 둘째, ‘고등학교 교사는 교육대상인 학생이 법 개정으로 16세 정당 가입, 18세 선거권 부여 등 정치참여 연령이 낮아졌으므로 교수와 같이 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교사 94.4%, 학부모 84.4%였다. ‘유·초·중·고 교원에게도 교수, 어린이집 보육교사, 돌봄·방과후·학원 강사와 같이 정치활동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도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서 높다(교사 97.7%, 학부모 85.5%).

위 3가지 문항에 대한 응답경향을 보면, 기본적으로 대학교원인 교수든 유·초·중등 교원(유·초·중·고 교원)이든 정치적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사나 학부모 응답자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란 원칙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런 긍정적인 결과는 대학 교수를 비롯해 어린이집 교사, 방과후학교 강사, 학원 강사는 정치적 자유가 허용되어 있지만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적 자유는 허용되지 않음을 미리 고지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응답가능성도 존재한다.

〈표 4-1〉 대학교원 교수와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자유에 대한 의견

구분			매우 동의함	조금 동의함	거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 안함	전체	긍정 응답	부정 응답	평균 (4점만점)
10-1. 대학교수도 정치활동 금지	교사	명	2,460	1,243	2,827	4,879	11,409	3,703	7,706	2.11
		%	21.6	10.9	24.8	42.8	100	32.5	67.5	
	학부모	명	443	495	511	737	2,186	938	1,248	2.3
		%	20.3	22.6	23.4	33.7	100	42.9	57.1	
10-2. 고등학교 교사는 정치활동의 자유 허용	교사	명	8,560	2,211	432	206	11,409	10,771	638	3.68
		%	75	19.4	3.8	1.8	100	94.4	5.6	
	학부모	명	1,290	555	231	110	2,186	1,845	341	3.38
		%	59	25.4	10.6	5	100	84.4	15.6	
10-3. 유·초·중·고 교원에 게도 정치활동 자유 보장	교사	명	9,741	1,401	189	78	11,409	11,142	267	3.82
		%	85.4	12.3	1.7	0.7	100	97.7	2.3	
	학부모	명	1,386	483	211	106	2,186	1,869	317	3.44
		%	63.4	22.1	9.7	4.9	100	85.5	14.5	

주1) 10-1. 대학교수도 교원이므로 정치활동을 금지해야 한다.

10-2. 고등학교 교사는 교육대상인 학생이 법 개정으로 16세 정당 가입, 18세 선거권 부여 등 정치참여 연령이 낮아졌으므로 교수와 같이 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

10-3. 유·초·중·고 교원에게도 교수, 어린이집 보육교사, 돌봄·방과후·학원 강사와 같이 정치활동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

주2) 평균: 1점 전혀동의안함, 2점 거의동의안함, 3점 조금동의함, 4점 매우동의함

2. 정치활동 허용 범위 관련

한국은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는 국가로 분류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OECD 국가 중 상당수가 교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만 교원의 특정 정치활동에 대해 일부만 제한하고 정당 가입, 정치자금 후원 등 기본적인 활동은 허용한다. 교사의 지위에 관한 유네스코 권고(1966년) 제80조에서 교사는 일반적으로 향유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자유를 가지는 시민이며, 나아가 공직에 나갈 권리를 가지는 존재라고 밝히고 있다.

〈표 4-2〉 국가별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 여부와 범위

구분	정치활동 허용 여부		허용되는 정치활동
	일반(중앙/지방) 공무원	교육 공무원	
일본	국가-불허 지방-제한적 허용	불허	선거운동, 정치자금 모금 및 기부, 서명운동
미국	연방 허용(1993) 주 허용(1974)	허용	정당활동, 단 정치자금 모금 및 기부, 공직후보 출마 및 선거운동은 제한적으로 허용(연방, 주별)
독일	제한적 허용	허용	정당활동과 정치자금 모금 및 기부 제한, 공직후보 출마 허용
영국	원칙적 허용. 단 직무의 성격과 권한 및 책임 정도에 따라 다름.	허용	일반공무원 기준으로 할 때 국회의원 후보 출마 이외 모든 정치활동 허용
캐나다	원칙적으로 모든 정치활동 허용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됨.
호주	원칙적으로 모든 정치활동 허용		출마 시 공직 사퇴, 선거운동 참여 시 상급자와 협의
뉴질랜드	원칙적으로 모든 정치활동 허용		출마 의사 상급자에게 미리 통보
프랑스	원칙적으로 허용	허용	정당활동, 정치자금 기부, 공직후보 출마, 선거운동. 단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은 상당히 제한

자료: 정영태(2009: 33)의 ‘〈표 1〉 국가별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 여부와 범위’ 재구성.

1) 교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의견

이번 조사결과 교사나 학부모 모두 교원의 정치활동을 OECD수준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OECD 수준으로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교사는 98.3%, 학부모는 87.5%가 동의했다. 앞서 ‘대학교원 교수와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3가지 문항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란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3〉 OECD 수준으로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에 대한 인식

구분			매우 동의함	조금 동의함	거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 안함	전체	긍정 응답	부정 응답	평균 (4점만 점)
9-1. OECD 수준 으로 유·초·중 등 교원 정치 활동 허용	교사	명	9,921	1,289	152	47	11,409	11,210	199	3.85
		%	87	11.3	1.3	0.4	100	98.3	1.7	
	학 부모	명	1,373	540	183	90	2,186	1,913	273	3.46
		%	62.8	24.7	8.4	4.1	100	87.5	12.5	

주1) 9-1. 우리나라도 OECD 수준으로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한다.

주2) 평균: 1점 전혀동의안함, 2점 거의동의안함, 3점 조금동의함, 4점 매우동의함

2) 교원의 정치활동 유형에 대한 의견

이번 조사에서는 교사와 학부모 모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치활동 유형에 대해서도 압도적으로 혹은 다수가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6가지 유형을 제시했는데 그 중 교사와 학부모 모두 ‘교육현장의 전문가로서 교사는 유·초·중등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감 선거에 교수처럼 휴직하고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가장 높은 동의를 하고 있다(교사의 98.9%, 학부모의 90.4%). ‘교육감 선거 시 휴직 출마 허용에 대한 인식’ 문항 외의 다른 유형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응답현황은 다음과 같다.

교사들은 교원의 정치활동과 관련해서는 ‘유·초·중등 교원은 (휴직 후에) 시도지사·대통령 등 정당의 예비 후보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동의 97.8%, 동의안함 2.2%), ‘유·초·중등 교원에게도 수업, 업무시간 외의 정치활동(정당 가입 및 행사 참여 등)을 허용해야 한다.’(동의 97.1%, 동의안함 2.9%), ‘교육현장의 전문가로서 유·초·중등 교원도 교육적 소신과 일치하는 정책을 제시한 후보나 정당에게 교수들처럼 정치후원금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동의 96.0%, 동의안함 4.0%), ‘유·초·중등 교원에게도 교육감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동의 95.3%, 동의안함 4.7%), ‘유·초·중등 교원에게도 수업 및 근무시간 외에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동의 93.0%, 동의안함 7.0%) 순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경우는 ‘교육감 선거 시 휴직 출마 허용에 대한 인식’ 문항 외에 ‘유·초·중등 교원은 (휴직 후에) 시도지사·대통령 등 정당의 예비 후보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동의 88.33%, 동의 11.7%), ‘유·초·중등 교원에게도 교육감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동의 86.2%, 동의 13.8%), ‘교육현장의 전문가로서 유·초·중등 교원도 교육적 소신과 일치하는 정책을 제시한 후보나 정당에게 교수들처럼 정치후원금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동의 85.1%, 동의 14.9%), ‘유·초·중등 교원에게도 수업, 업무시간 외의 정치활동(정당 가입 및 행사 참여 등)을 허용해야 한다.’(동의 84.6%, 동의 15.4%), ‘유·초·중등 교원에게도 수업 및 근무시간 외에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동의 83.7%, 동의 16.3%) 순으로 교원의 정치활동 유형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표 4-4〉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기본권 허용 범위

구분			매우 동의함	조금 동의함	거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 안함	전체	긍정 응답	부정 응답	평균 (4점)
9-2. 교육감 선거에 휴직 출 마 허용	교사	명	10,420	862	91	36	11,409	11,282	127	3.9
		%	91.3	7.6	0.8	0.3	100	98.9	1.1	
	학부모	명	1,453	523	131	79	2,186	1,976	210	3.53
		%	66.5	23.9	6	3.6	100	90.4	9.6	
9-3. 지지후보나 정당에 정 치후원금 허용	교사	명	9,415	1,540	350	104	11,409	10,955	454	3.78
		%	82.5	13.5	3.1	0.9	100	96	4	
	학부모	명	1,321	540	214	111	2,186	1,861	325	3.4
		%	60.4	24.7	9.8	5.1	100	85.1	14.9	
9-4. 근무시간 외에 후보나 정당 지지 의사 표명 허용	교사	명	8,939	1,671	573	226	11,409	10,610	799	3.69
		%	78.4	14.7	5	2	100	93	7	
	학부모	명	1,303	527	226	130	2,186	1,830	356	3.37
		%	59.6	24.1	10.3	6	100	83.7	16.3	
9-5. 교육감 후보 지지 의사 표명 허용	교사	명	9,070	1,803	396	140	11,409	10,873	536	3.74
		%	79.5	15.8	3.5	1.2	100	95.3	4.7	
	학부모	명	1,334	551	189	112	2,186	1,885	301	3.42
		%	61	25.2	8.7	5.1	100	86.2	13.8	
9-6. 휴직 후에 정당의 예비 후보 선출 과정 참여 허용	교사	명	9,738	1,416	181	74	11,409	11,154	255	3.83
		%	85.4	12.4	1.6	0.7	100	97.8	2.2	
	학부모	명	1,393	538	155	100	2,186	1,931	255	3.48
		%	63.7	24.6	7.1	4.6	100	88.3	11.7	
9-7. 업무시간 외 정당 관련 정치활동 허용	교사	명	9,482	1,595	234	98	11,409	11,077	332	3.79
		%	83.1	14	2.1	0.9	100	97.1	2.9	
	학부모	명	1,339	510	205	132	2,186	1,849	337	3.4
		%	61.3	23.3	9.4	6	100	84.6	15.4	

주1) 9-2. 교육현장의 전문가로서 교사는 유·초·중등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감 선거에 교수처럼 휴직하고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9-3. 교육현장의 전문가로서 유·초·중등 교원도 교육적 소신과 일치하는 정책을 제시한 후보나 정당에게 교수들처럼 정치후원금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9-4. 유·초·중등 교원에게도 수업 및 근무시간 외에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9-5. 유·초·중등 교원에게도 교육감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9-6. 유·초·중등 교원은 (휴직 후에) 시도지사·대통령 등 정당의 예비 후보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9-7. 유·초·중등 교원에게도 수업, 업무시간 외의 정당 관련 정치활동(정당 가입 및 행사 참여 등)을 허용해야 한다.

주2) 평균: 1점 전혀동의안함, 2점 거의동의안함, 3점 조금동의함, 4점 매우동의함

V.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방안과 (노조) 과제

1. 유·초·중·고 교원의 정치기본권 허용을 위한 조건

이번 조사에서 유·초·중·고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혹은 정치활동 참여에 대해 교원과 학부모의 의견이 매우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일보 조사결과나 학교 내 정치편향 교육에 대한 논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보도자료, 2019.10.24.) 등을 볼 때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및 정치활동 참여에 대한 여론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그런 점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나 정치활동 참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들에 적극 대응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두 가지 사항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유·초·중등 교원(유·초·중·고 교원)의 정치기본권 허용을 위해서는 향후 법 개정과 교사와 교원단체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업활동 중 정치적 편향 교육을 할 경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10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고 있다(교사 60.5%, 학부모 67.2%). 그러나 이에 동의하지 않는 집단도 10명 중 3명 이상이다(교사 39.5%, 학부모 32.9%). ‘교사와 교원단체에서 정치편향적 교육을 하는 교사들에 대한 제재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는 문항에는 교사와 학부모 응답자들 10명 중 7명 이상이 동의하고 있다(교사 74.4%, 학부모 76.8%).

〈표 5-1〉 교사의 정치편향적 교육 대응 방안

구분			매우 동의함	조금 동의함	거의 동의 안함	전혀 동의 안함	전체	긍정 응답	부정 응답	평균 (4점)
11-1. 수업시간 중 정치 편향 교육 시 엄벌하는 법 개정 수반	교사	명	3,504	3,395	2,247	2,263	11,409	6,899	4,510	2.71
		%	30.7	29.8	19.7	19.8	100	60.5	39.5	
	학부모	명	777	691	341	377	2,186	1,468	718	2.86
		%	35.5	31.6	15.6	17.3	100	67.2	32.9	
11-2. 교사와 교원단체의 정치 편향적 교육 교사 제재 기준과 원칙 마련 및 실천	교사	명	4,354	4,132	1,406	1,517	11,409	8,486	2,923	2.99
		%	38.2	36.2	12.3	13.3	100	74.4	25.6	
	학부모	명	919	760	241	266	2,186	1,679	507	3.07
		%	42	34.8	11	12.2	100	76.8	23.2	

주1) 11-1. 교사가 수업활동 중 정치 편향적 교육을 할 경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11-2. 교사와 교원단체에서 정치 편향적 교육을 하는 교사들에 대한 제재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

주2) 평균: 1점 전혀동의안함, 2점 거의동의안함, 3점 조금동의함, 4점 매우동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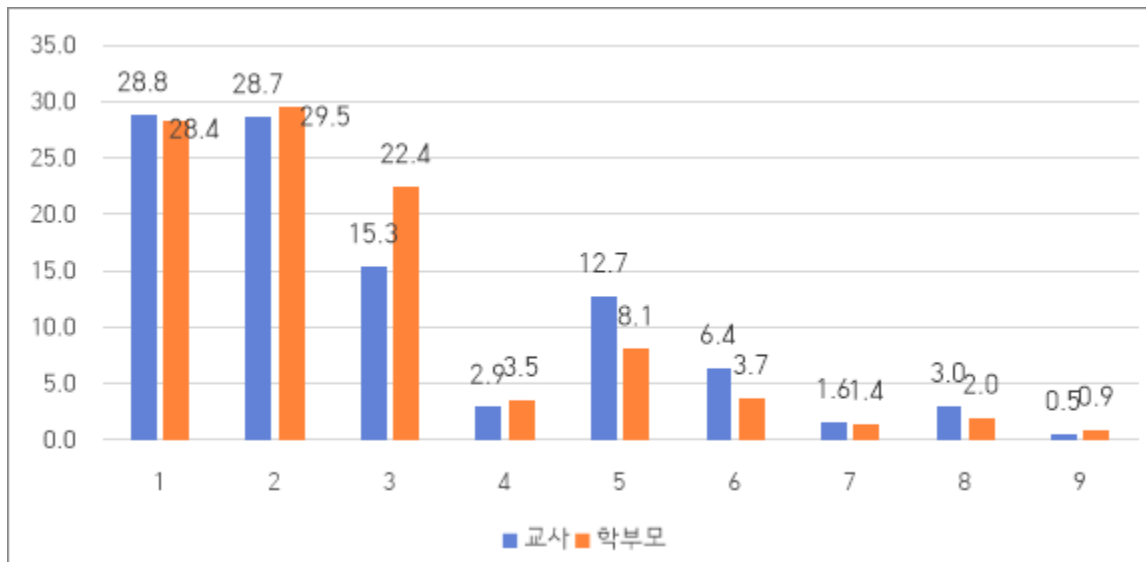
2.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2, 3 순위

유·초·중등 교원이 정치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어떤 사항이 가장 필요한지 우선순위대로 3가지를 고르도록 하였다. 1, 2, 3순위를 종합한 결과⁸⁾ 교사의 경우 유·초·중등교원의 정치기본권 중요성 인식 제고 및 실천적 노력이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가장 많이 지적했다. 학부모 응답자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2. 국민 전반의 관심과 공감대 형성 필요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구체적으로 1, 2, 3 순위 응답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교사와 학부모 모두 1순위로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①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기본권 중요성 인식 제고 및 실천적 노력’이었다(교사 61.3%, 학부모 53.8%). 2순위로 많이 선택된 것은 ② 국민 전반의 관심과 공감대 형성 필요(교사 50.5%, 학부모 49.5%), 3순위로는 ③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와 동의 획득(교사 33.5%, 학부모 37.6%) 등이다. 교사와 학부모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1, 2, 3순위 문항이 동일하다.

주목할 것은 교사응답자 중 10명 중 6명 이상이 ‘①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기본권 중요성 인식 제고 및 실천적 노력’을 꼽은 것이다. 향후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및 확대를 위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교사 주체들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매우 의미있는 결과이다. 교사노조연맹에서 향후 교사들의 의지를 잘 조직해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동력을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는가 하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림 5-1]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2, 3 순위(종합)



주) 1. 유·초·중등교원의 정치기본권 중요성 인식 제고 및 실천적 노력. 2. 국민 전반의 관심과 공감대 형성 필요.
3.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와 동의 획득. 4. 시민사회단체의 지지 확대. 5. 정당과 정치인의 지지 확대.
6. 언론인의 지지 확대. 7. 학계인사의 지지 확대. 8. 법조인의 지지 확대. 9. 기타

8) 1, 2, 3순위를 모두 합한 응답자 수는 교사 응답자는 총 34227명, 학부모 응답자는 6558명이다.

〈표 5-2〉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2, 3 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교사		학부모		교사		학부모		교사		학부모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1	6,995	61.3	1,175	53.8	1,825	16	331	15.1	1,046	9.2	355	16.2
2	2,838	24.9	585	26.8	5,758	50.5	1,083	49.5	1,215	10.6	265	12.1
3	306	2.7	232	10.6	1,127	9.9	416	19	3,819	33.5	823	37.6
4	48	0.4	19	0.9	240	2.1	65	3	702	6.2	148	6.8
5	802	7	94	4.3	1,361	11.9	183	8.4	2,194	19.2	252	11.5
6	219	1.9	33	1.5	683	6	57	2.6	1,295	11.4	155	7.1
7	25	0.2	11	0.5	125	1.1	12	0.5	388	3.4	72	3.3
8	129	1.1	17	0.8	268	2.3	35	1.6	632	5.5	79	3.6
9	47	0.4	20	0.9	22	0.2	4	0.2	118	1	37	1.7
전체	11,409	100	2,186	100	11,409	100	2,186	100	11,409	100	2,186	100

- 주) 1. 유·초·중등교원의 정치기본권 중요성 인식 제고 및 실천적 노력
 2. 국민 전반의 관심과 공감대 형성 필요 3.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와 동의 획득
 4. 시민사회단체의 지지 확대 5. 정당과 정치인의 지지 확대
 6. 언론인의 지지 확대 7. 학계인사의 지지 확대 8. 법조인의 지지 확대 9. 기타

3.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기본권 부여로 기대되는 효과 1, 2, 3 순위

유·초·중등 교원에게 정치기본권이 부여될 경우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어떤 사항이 가장 기대되는지 우선순위대로 3가지를 고르도록 하였다. 1, 2, 3순위를 종합한 결과⁹⁾ 교사나 학부모 응답자 모두 교원에게 정치기본권이 부여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로 2. 공교육의 현장 적합성 제고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두 번째로 많이 기대하는 것은 1. 공교육의 환경개선과 학교교육의 내실화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 2, 3 순위 응답을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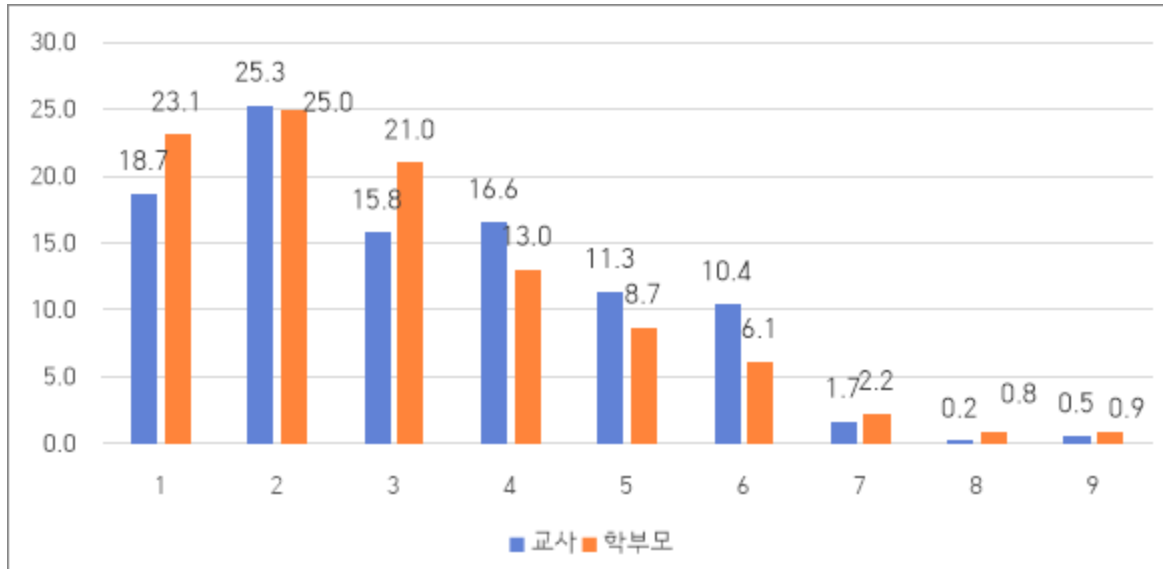
교사와 학부모 간 선택사항 순위에서 차이가 있었다. 교사의 경우는 교육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지적하였지만 학부모의 경우는 공교육 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초·중등 교원이 정치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교사나 학부모 간 응답 경향성에서 차이가 없었던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교사의 경우 1순위로 선택을 많이 한 것은 ‘② 교육정책의 현장 적합성 제고’(31.8%)였고, 2순위로는 ‘② 교육정책의 현장 적합성 제고’(32.1%)를 많이 지적하였다. 3순위로는 ‘③ 안정적인 교육정책 수립과 시행’(24.4%)을 다수가 꼽았다. 반면 학부모의 경우 1순위

9) 1, 2, 3순위를 모두 합한 응답자 수는 교사 응답자는 총 34227명, 학부모 응답자는 6558명이다.

로 다수가 선택한 것은 ‘① 공교육의 환경 개선과 학교교육의 내실화’(44.4%)였고, 2순위는 ‘② 교육정책의 현장 적합성 제고’(41.1%)였다. 3순위로는 ‘③ 안정적인 교육정책 수립과 시행’(34.3%)이었다.

[그림 5-2]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보부여로 기대되는 효과 1, 2, 3 순위(종합)



주) 1. 공교육의 환경개선과 학교교육의 내실화 2. 교육정책의 현장 적합성 제고 3. 안정적인 교육정책 수립과 시행
4. 교육관련 입법의 교육현장 적합성 확대 5. 교권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확대 6. 교원의 사회적 지위 개선과 역할제고
7.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인식 제고 8. 기타

〈표 5-3〉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기본권 부여로 기대되는 효과 1, 2, 3 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교사		학부모		교사		학부모		교사		학부모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1	3,328	29.2	970	44.4	1,316	11.5	238	10.9	1,757	15.4	306	14
2	3,631	31.8	487	22.3	3,660	32.1	899	41.1	1,367	12	253	11.6
3	771	6.8	221	10.1	1,844	16.2	406	18.6	2,785	24.4	750	34.3
4	1,610	14.1	225	10.3	2,108	18.5	280	12.8	1,953	17.1	350	16
5	1,088	9.5	133	6.1	1,267	11.1	217	9.9	1,529	13.4	221	10.1
6	847	7.4	96	4.4	1,088	9.5	107	4.9	1,638	14.4	199	9.1
7	98	0.9	28	1.3	118	1	34	1.6	357	3.1	85	3.9
8	36	0.3	26	1.2	8	0.1	5	0.2	23	0.2	22	1
전체	11,409	100	2,186	100	11,409	100	2,186	100	11,409	100	2,186	100

주) 1. 공교육의 환경개선과 학교교육의 내실화 2. 교육정책의 현장 적합성 제고 3. 안정적인 교육정책 수립과 시행
4. 교육관련 입법의 교육현장 적합성 확대 5. 교권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확대
6. 교원의 사회적 지위 개선과 역할제고 7.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인식 제고 8. 기타

VI. 결론: 공교육 개선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과제

이번 연구에서 실시한 교사 및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및 확대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육정책 및 제도 설계에서 교사의 전문성 활용 방안 마련

1) 교육정책 전문성 확보와 교원의 교육정책 개입 및 참여 보장 방안 모색

교육정책에 대한 교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올바른 공교육정책 수립과 시행에 중요함을 공론화하면서 교원의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와 개입을 현실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는 본 연구의 조사결과는 물론 타 연구기관의 조사결과에서도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의 조사결과에서 교육정책의 현장 적합성이나 일관성에 대한 평가는 비판적이었다. 본 연구의 조사항목인 신뢰성 평가도 매우 비판적이어서 교육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번 조사결과는 교사나 학부모 응답자들이 현장에 적합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 교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교육전문가이자 교육현장의 전문가인 교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현장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교사나 교원단체에서 교육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처럼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실 불가능하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교원단체와 정당 간 정책협약 체결이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교육전문가로서 교원의 전문성을 교육정책 수립이나 교육문제 해결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적절하고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유·초·중등학교의 교육 전반을 책임지는 수장을 선출하는 교육감 선거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정당을 배제하고 정책선거를 표방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선정기준이 정책인 경우는 절반 내외에 불과했다. 교육감 선정기준으로 [소속정당+이념]이 학부모의 경우에는 10명 중 2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교육감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표 6-1〉 연구결과 제기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및 확대를 위한 과제

구분	내용
교육정책 및 제도 설계에서 교사의 전문성 활용 방안 마련	교육정책 전문성 확보와 교원의 교육정책 개입 및 참여 보장 방안 모색
	교원의 공직선거 출마제도 마련 및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시대 변화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 제·개정 노력 요구
정치나 교육의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확장된 정치개념의 공론화 및 일상정치 필요성의 인식 제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개념에 대한 재해석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
교직사회와 교사노조연맹의 과제	교직사회 자정 시스템 구축 및 사회적 소통 강화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사노조연맹의 사회적 기대와 역할 제고

2) 교원의 공직선거 출마제도 마련 및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는 현재의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때 현재 제도개선 논의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는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감 선거 휴직 출마를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교사나 학부모 응답자들 과반 정도가 교육감 선거 시 후보자 선택 기준으로 정책공약을 꼽았다. 그러나 실제 여러 선행연구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정책선거여야 할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의 영향력이 절대적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유권자들이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잘 갖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보다는 선거를 전후한 시점의 보수, 진보진영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후보자들 자신과 그 주변에서 선거운동 과정 중 특정 정당 성향을 드러내면서 진영 간 대리전으로도 읽힌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정당을 배제하면서 정책선거로 교육감 선거를 기획했지만 그 목적 달성에는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방향은 사실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교육정책이 중심이 되는 선거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아 보인다.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현재의 직선제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정당공천 허용,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 실시 방안 등이 제안되고 있다(김영진, 가상준, 2021: 25).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폐기하고 정당정치 속으로 교육정책을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정책 중심 선거로 가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차원에서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 사회 선거에서 정당의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배제할 수 있을까 하는 데에는 회의적이다. 그러나 적어도 정당보다는 정책에 관심을 두게 하는 선거로 개편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 하나는 교육문제의 직접 당사자들이 정책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를 개선하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낮은 것은 유권자 자신과 관련이 크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공간인 교육감 선거에 관심 있는 당사자들을 교육적 차원에서 적극 참여시키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교육감이 유·초·중등교육 전반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유·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이들은 또한 교육현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맞는 교육정책이나 제도의 문제, 개선방향 등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교사와 교원단체들이 교육감 선거 때 정책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교사들이 교육감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 정책공약을 둘러싼 공론화 작업을 교육전문가들인 교사들과 교육핵심 주체의 하나인 학부모(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체계적으로 진행한다면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쓴 교육감 선거는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 특히 선거권의 연령 저하로 고 3학생들도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정책 공약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교육의 핵심주체들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는 이유일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교육감 선거에 교사들도 교수처럼 휴직하고 출마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교사나 학부모들 모두 이같은 의견에 10명 중 9명 이상이 찬성했다(교사 98.9%, 학부모 90.4%). 현재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도 공직선거 출마 휴직 후 선출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교사만은 제외되어 선거 과정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에서도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도 공직선거 출마 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면, 휴직 후 교육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 선출직에 출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법안 및 정책의 입안과 집행과정에서 현장 적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임기 종료 후에는 학교 현장에 돌아올 수 있어 임기 중에도 교육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교육문제보다 뜨겁고 중요한 이슈는 많지 않다. 공교육의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과정에 교육현장의 주체들을 적극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시대 변화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 제·개정 노력 요구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대한 교원들의 적극 개입과 참여 필요성에 동의하는 세력들과 연대하여 교육의 정치중립성을 이유로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률을 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개정이 시급하다. 이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내용은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교원노조법 제3조 정치활동 금지 조항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들과 충돌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ILO 제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와 98호(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개정해야 할 핵심 법 조항의 하나로 교원노조법 제3조가 지목되고 있다. 교원노조가 행하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금지한다는 것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 등 정치기본권 제한은 1998년에 비준한 ILO 제111호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에도 위반된다. ILO의 ‘협약 및 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초·중·고 교사들의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 참여 같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고용과 직업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111호 협약에 위배된다고 봤다.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이들의 정치활동을 억압하는 한국 정부의 조치는 협약 111호가 규정한 인종·피부색·성·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혹은 사회적 출신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활동 제한은 공공부문 전체가 아니라 특정한 공무에 한정돼야 한다고 ILO 전문가위원회는 강조했다(매일노동뉴스, 2021.02.18.).

2020년 4월 23일 헌법재판소도 교사의 정당가입을 금지한 법조항에 대해 부분적인 위헌결정을 내렸다. 정당 가입금지는 타당성이 있지만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까지 금지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최근 정당가입이나 선거 연령이 하향 조정되면서 학교의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공무원·교원 정치적 자유 제한은 인권침해”라는 권고를 수차례 내린 바 있다.

최근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인 4세대 나이스(NEIS) 오류 사태나 만5세 초등학교 입학추진 방침 발표로 인한 혼란 등은 교원과 학부모의 불만은 물론 일반 국민의 우려를 낳고 있다.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으로 드러난 교육현장의 심각한 문제와 교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이같은 대내외 분위기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활동에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열려진 공간 속에서 교사노조연맹 등 교직사회는 우리나라가 OECD 주요 국가로서 국제 수준에 맞는 법 제·개정을 ‘쟁취’해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실천 활동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정치나 교육의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1) 확장된 정치개념의 공론화 및 일상정치 필요성의 인식 제고

정치 개념에 대한 확장된 이해 및 인식 제고 등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되어야 한다. 정치를 ‘제도권 정치’(이호, 2017: 92), ‘직업적 정치활동’(노순일, 2013: 127)으로 보는 것은 정치를 너무 협소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정치는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대립을 조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공동의 문제

를 해결해 가는 활동¹⁰⁾이다.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 개념 특히 사회의 문제 해결 과정이자 수단으로서의 정치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보나 정치활동 참여와 관련해 헌법상 권리이고 기본권이라는 원론적인 주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선출된 정치인들이 여의도 국회 등에서 하는 것만이 정치가 아니라는 인식,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정치 개념, 즉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정치라는 생각을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문정치인들이 하는 정치(협소한 의미의 정치)로 사실상 인식하고 있는 정치개념을 광의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공론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교사나 학부모 응답자들이 정치를 전문정치인들이 하는 사회적 활동으로 인식하는 경우 혹은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인식하는 경우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교육정책 관여 등에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의 전체 응답 경향을 볼 때 설문에 응답한 교사와 학부모 다수가 정치를 선출된 정치인 등 정치활동을 하는 일부 사람들의 활동만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다수가 정치가 사회의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활동으로서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이 정치를 국민 누구나의 활동이자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경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및 확대나 정치활동 참여에 관한 여론에 긍정적일 수 있다. 교육현장에서 교육전문가인 교사들이 정치과정에서 결정되는 교육정책이나 행정과 관련해 의견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올바른 교육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누구나 활동으로 정치를 인식할 경우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갈등이나 문제 해결이 정치인들의 '협소한' 정치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한계가 있음을 설득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교사들이 잘못된 교육정책이나 행정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설득도 가능할 것이다.

교사노조연맹에서는 이를 염두에 두고 조합원은 물론 학부모, 대국민을 상대로 하는 각종 공론화 작업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준비해 시행해 가야 할 것이다.

10)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정치활동의 사례: 학교에서는 학급회의에서 반 규칙을 정하는 일, 학교 회장을 뽑는 일, 가정에서는 가족 여행 장소를 정하는 일, 집안일에서 역할분담을 정하는 일 등이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정치란 무엇인가 (천재학습백과 초등사회 6-1)).

2)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개념에 대한 재해석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실제 이를 달성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나 학부모 둘 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잘 지켜진다고 10명 중 4명가량이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정책이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은 교사나 학부모 응답자 모두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교사 99.2%, 학부모 97.0%). 사실 이 두 문항 모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묻는 내용인데 교사와 학부모의 응답은 일관되지 않았다. 교육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진다는 것은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이 좌우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교사나 학부모 모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는 적지 않은 수가 동의하면서도 교육정책에 대한 정권의 영향이 존재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혼선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의미에 대한 이해나 해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하게 제한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헌법규정의 의미와 해석과 관련해 다양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함을 알 수 있다.

향후 교육현장에서 교육의 정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정치참여가 필요함을 사회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한 마디로 한국 사회에서 교사는 정치적 금치산자와 다를 게 없다.”(한겨레:온, 2021.03.22.)는 사실을 공론화하면서 그 문제점을 알려 나갈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교사들은 SNS(소통누리망) 사용에서도 크게 제약을 받고 있다. 페이스북에서 남의 글에 ‘좋아요’ 한두 번 누른 것이 전부인 교사들이 사법처리 선상에 올랐다(송재혁, 2019.06.01.). “일반인들의 잘못은 용서되지만 정치인들의 잘못은 용서하면 안 된다. 나라가 망하기 때문.”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벌금형을 받은 교사들이 있다(변성호, 2017).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기사를 공유했다고 기소를 당하거나 2014년 4월 16일 수백 명의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던 교사들이 기소당했다(교육희망, 2022.08.23.).

일반 국민들은 물론 학부모들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한 이같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같은 상황에 동의하는 이들이 많다면, 혹은 이에 분노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 결과에 따라 교직사회가, 교사노조연맹이 해야 할 사업과 추후 전략은 그 내용이나 수준에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다음 두 가지 문항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 응답이 향후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와 관련해 그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번 조

사에서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데에는 10명 중 7~9명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교사 91.7%, 학부모 72.6%, <표 3-9> 참조). 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사들이 정부 편향적인 교육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을 때 지킬 수 있다는 문항에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교사 86.9%, 학부모 84.0%, <표 2-6> 참조). 이러한 반응은 향후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정치참여 허용 논의에 긍정적일 수 있을 것이다.

3. 교직사회와 교사노조연맹의 과제

1) 교직사회 자정 시스템 구축 및 사회적 소통 강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주장에 대해 다수가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교육현장의 의식화 교육, 편향적 교육에 대한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일부 우려했던 사례가 발생했거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직사회 스스로 이를 걸러낼 수 있는 자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미명 아래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는 만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에 대한 일반 국민이나 학부모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의 자정 능력이 있거나 대다수 교사가 그러지 않을 거라는 식으로는 국민설득이 쉽지 않다. 일부에서는 담임교사가 특정 단체의 회원인지를 학기 초에 알 수 있게 하는 알 권리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문화일보, 2020.01.08.).

본 연구조사결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으로 인한 기대효과 1순위로 교사의 경우는 교육정책의 현장 적합성 제고를 우선적으로 지적하였고 학부모의 경우는 공교육의 환경개선과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위기의 교육현장을 살리는 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교육현장을 정치화하고 이념화한다는 우려가 일부에서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정치교육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정치적 원칙을 세우고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경청할 만하다. 이에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같은 정치교육 원칙을 교육감과 교원단체 간 협약을 통해 교육감 지침에 마련하고 그 기본 취지를 영국과 같이 교육기본법에 담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한다(최선정, 2022.05.19.).

이와 관련,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설문 조사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교사와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는 문항에 교사나 학부모 둘 다 거의 모두 찬성하고 있다(교원 97.2%, 학부모 95.7%).

2)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사노조연맹의 사회적 기대와 역할 제고

향후 교사노조연맹은 대표적인 교원노조로서 교육현장을 개선해내고 공교육을 살릴 수 있도록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확대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때 교사노조연맹이 주도적으로 다른 교원노조들은 물론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시민사회 단체 등 우호 세력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연대활동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사 조합원을 12만 명 이상 조직하고 있는 대규모노조이다. 교사노조연맹은 그동안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각종 활동과 함께 그 기반으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확대를 위해 활동해왔다. 그 결과 2022년 말 6만 명 조직에서 2023년 5월 7만여 명이 넘는 노조로 급성장하였다. 이후에도 5만 명의 조합원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2023년 10월 12만 명을 넘어서 제1의 교원노조가 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 교사나 학부모들은 교사노조연맹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갖고 있었다(교사 94.6%, 학부모 77.4%). 12일간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에 1만1천여 명이 넘는 교사들이 참여했다는 사실은 교사노조연맹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기대와 신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학부모 응답자도 2천 200여 명에 이른다. 이들도 교육현장의 문제 해결과정에서 교사노조연맹이 크게 역할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사와 학부모 모두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위해 필요한 내용 1순위로 가장 많이 지정한 것이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기본권의 중요성 인식과 실천적 노력’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국민 전반의 관심과 공감대 형성도 가장 많이 선택된 내용이다. 향후 교사노조연맹은 이같은 결과에 근거해 조합원은 물론 국민을 대상으로 교원의 교육정책 참여가 갖는 의미를 충분히 공론화시켜 나가야 한다. 동시에 교원의 교육정책 개입 활동이 정치기본권 제한으로 불가능해 현장에 맞지 않는 교육정책이 나왔음을 적극 알려야 한다. 그 결과 교육현장에 혼란이 있었고 그 책임은 누구도 제대로 지지 않아 학교 현장의 주체인 교사,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드러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에 대한 교원의 개입과 참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금지되어 있는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사회 전반에 설득해 내야 한다.

향후 교사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은 물론 교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부일지라도 국민들의 우려가 있고 그 목소리 때문에 정치기본권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에 교사들의 역량 제고에도 교사노조연맹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사노조연맹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반면 정부나 학교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가능한 사업들이 있을 것이다. 조합원들과의 충분한 소통 속에서 우선 사업을 선정하고 이에 기초해 중장단기 사업을 마련해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부록 1〉 외국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과 그 범위

〈부표 1〉 외국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과 그 범위

	정치활동 허용 관련 사항	
	일반(중앙/지방) 공무원	교육공무원
미국	연방공무원과 콜롬비아 주 공무원의 정당활동과 선거운동 허용. 단 노조의 정치자금 모금 및 기부, 정당후보로서의 공직출마, 업무관련자 대상 선거운동, 직장내/업무시간 중 또는 제복 등 공무원 신분 파악 가능한 징표 지닌 채 정당활동과 선거운동 금지	일반공무원보다 허용 범위 넓음
일본	중앙정부: 제한 지방공무원: 자산의 근무지 아닌 지역에서 선거운동, 정치자금 모금, 서명운동 가능	중앙과 지방 모두 일괄 제한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공무원들이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을 해왔고 최근까지는 묵인되었음) (Hirano, 2006)
독일	정당활동과 정치자금 기부 금지 공직후보 출마는 허용	정당활동, 선거운동 등이 폭넓게 허용
영국	- 직무의 성격과 권한, 책임 정도에 따라 정치적 자유의 허용 정도가 다름. 다만, 공직출마 시 사직해야 함. - 상급공무원: 정당 가입만 허용 - 중급공무원: 국회의원 후보 제외 모든 정치활동 허용(허가 요함) - 현업공무원을 포함한 하급공무원: 모든 정치활동 허용	정당활동, 공직후보 출마, 선거운동 등 거의 모든 정치활동 허용
프랑스	- 공무 중 또는 근무지를 제외한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는 개인으로서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의 표현 등 모든 정치적 자유(정당가입, 정치자금 기부, 공직후보 출마, 선거운동) 인정	정당가입과 그 밖의 정치활동 허용
캐나다	- 정치자금 모금 및 기부 허용(1967) - 정치집회 참여 허용(1967) -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허용(2003)	
호주	- 정치적 의견(정부정책에 대한 평가 포함) 발표 허용 - 국회의원(연방, 주) 출마 시 휴직 또는 사퇴, 지방의회 후보 사퇴 불필요 - 선거운동, 정치자금 모금, 서명운동 허용, 단 공공건물 사용 불가 - 버턴 등 패착물, 제한적 허용(직접 시민 접촉하는 공무원은 금지)	
뉴질랜드	- 정치적 의견발표 허용 - 국회의원 후보 출마 시 휴직	

자료: 정영태(2009: 34)의 <표 2> 재구성. 단, 일본의 경우 정영태(2010: 73) 참조로 보완함.

〈참고자료〉

- 경향신문(2001. 05. 17.), “[쟁점] 교총의 정치활동,” <https://www.khan.co.kr/opinion/contribution/article/200105171854041>. (2023. 10. 10. 인출)
- 교육희망(2022. 08. 23.), “교사는 24시간 내내 공무원? ... 퇴근후 정치활동 허하라,” <https://news.eduhope.net/24472>. (2023. 08. 23. 인출)
- 권순형·도재우·민윤경·양희준·이강주·이쌍철·이정우·이희현·김성열(202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KEDI POLL 2022)』, 한국교육개발원.
- 김영준 가상준(2021), “교육감 선거의 특징 분석: 후보자는 이념을 유권자는 전당을,” 『연구방법논총』, 6(1), 경북대학교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pp. 1-30.
- 노순일(2013),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뉴스시(2023. 06. 24.), “민주 ‘윤정부 4세대 교육시스템 혼린민 ... 다 졸속인가-현장의견 무시하더니... 용납할 수 없어’,”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624_0002351057. (2023. 07. 03. 인출)
- 매일노동뉴스(2021. 04. 23.), “ILO 기본협약 비준,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계기될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84>. (2023. 06. 12. 인출)
- 매일노동뉴스(2021. 02. 18.), “ILO “한국 법·제도, 100·111호 협약에 위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87>. (2023. 08. 29. 인출)
- 문화일보(2017. 08. 16.), “<문재인정부 100일 여론조사> “전교조 합법화” 51.2%... 50대 이상은 ‘부정적’,”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81601070221304001>. (2023. 06. 13. 인출)
- 문화일보(2020. 01. 08.), “담임교사의 전교조 여부, 학기초 학부모가 알 수 있어야,”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10801071039345001>. (2023. 12. 12. 인출)
- 박은아·성경희·배화순(2022), “초·중등학교 참정권 교육의 방향과 과제(KICE 이슈페이퍼),” 5, 한국교육과 정책가원.
- 변성호(2017. 04. 04.), “물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⑧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숨은 함정,” 참여연대,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493028>. (2023. 06. 01. 인출)
- 송재혁(2019), “교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다,” 『교육공동체벗』, 37 (2019. 06. 01.), <https://communebut.com/Article/?idx=6116977&bmode=view>. (2023. 06. 12. 인출)
- 시사주간(2019. 08. 05.), “교원 정치 참여 ‘정당 가입허용 VS 국민 논의가 먼저’,”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23187345&memberNo=16745602&vType=VERTICAL>. (2023. 06. 12. 인출)
- 이호(2017), 『풀뿌리운동, 새로운 복원: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이루는 힘, 풀뿌리운동 이야기』, 옥천:포도밭출판사.
- 전경원(2020. 04. 24.), “교사 정치기본권, 현재 판결 의미는... ‘문 열린 정치활동 넓히는 건 교사 몫’,” 에듀인뉴스,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Print.html?idxno=28676>. (2023. 06. 23. 인출)
- 전일균(2015), “전문직으로서의 교사의 지위에 관한 연구: 교사의 지위에 관한 UNESCO/ILO의 ‘권고문’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21(4), 안암교육학회.
- 정영태(2009),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국제협약과 외국사례,”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주최: 김재윤·홍희덕 국회의원, 토론회 자료집, 2009. 12. 09 토론회 자료집.
- 정영태(2010),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논거와 문제점」, 『한국정치연구』, 19(1), pp. 71-100.
- 중등교사 - 나무위키 (namu.wiki).
- 천재학습백과 초등사회 6-1.
- 최선정(2022. 05. 19.), “교사의 정치기본권 박탈 아닌 ‘정치교육 원칙 마련’ 우선,” 『교육희망』, <http://news.eduhope.net/24189>. (2023. 08. 23. 인출)
- 한겨레(2019. 04. 29.), “인권위 ‘공무원·교원 정치적 자유 제한은 인권침해’ 네번째 권고,” <https://www.>

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1909.html. (2023. 08. 20. 인출)

한겨레:온(2021. 03. 22.), “한국사회,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불가촉천민 수준,” <http://www.han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62>. (2023. 08. 20. 인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보도자료, 2019. 10. 2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석준·황선훈·이성일·김광희(2017), 『정치적 기본권의 규범과 실제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전북교육정책연구소.

함승환(2019), 정당 없는 정당효과? :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당선경쟁력 결정요인 재검토, 『지방정부연구』, 23(1), 한국지방정부학회.

토론

‘교육정책 및 교육입법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의 정치시민권 회복 방안’

- 2023 교사 대투쟁의 의미,
우리 교육은 어떤 시민을 키워낼 것인가?

이 경 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I. ‘교사 정치기본권, 최소한의 합의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

발제자는 교사 정치기본권과 관련해 지금까지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왜 교사 정치기본권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의식과 현상 진단을 통해 교사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합의 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발제자가 도출한 최소한의 합의 사항은 세 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교사가 수업 등 교육활동을 수행할 때 학생에게 정치적 견해를 주입하거나 세뇌해서는 안 된다.

둘째, 학교 안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은 금지한다.

셋째, 교원은 직무상 알게 된 학부모나 거래처(직무 관련자)에 교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가입이나 특정 후보 지지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발제자가 제시한 최소한의 합의 사항에 동의하며, 제 생각과 제안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한국의 공교육에서 ‘정치’는 헌법이 규정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더불어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게 된 우리의 불우한 역사적 맥락까지 더해져, 학교에서는 정치라는 말의 언급 자체도 그간 터부시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학교 바깥세상에서는 투표 나이와 정당 가입 나이가 낮아졌지만 정작 우리는 학교에서 필요한 ‘정치 교육(시민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차도 쉽지 않았습니

이러한 척박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교사가 정치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논쟁을 돌파함과 동시에 다수의 교사가 국가공무원이라는 신분에 대한 논쟁도 돌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발제자는 교육계의 단일 대오를 강조하고 있지만, 공교육에서 마땅히 필요한 ‘정치(시민) 교육’에 대한 우려도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치하는 교사’를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충분한 고려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 낼 때는 학교에서의 정치(시민) 교육 강화를 함께 의제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 교육을 목표로 하는 정치교육의 원칙(예를 들면,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같은)을 세워야 교사가 정치기본권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 과정도 그 명분과 설득력을 더할 것입니다. 정치교육의 내용은 우리가 고민해 온 시민교육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을 것이고, 정치, 경제, 노동법 등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데 꼭 필요한 지식을 교과 내용으로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II. ‘교원의 교육정책 개입 및 정치기본권 보장과 교직 사회의 과제’에 대한 토론

두 번째 발제자는 대규모 설문조사를 통해 교원의 교육정책 개입과 정치기본권 보장 및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발제자가 제시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정책 및 제도 설계에서 교사의 전문성 활용 방안 마련
 - 교원단체와 정당 간 정책 협약 체결,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 교원의 교육감 선거 휴직 출마 보장(공직선거법), 선출직 임기 종료 후 학교 현장에 복귀(국회법, 지방교육자치법, 지방자치법의 겸직 금지 조항), 교사와 교원단체의 교육감 선거 정책공약 검증(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감 후보 지지 허용(공직선거법)
 -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보장(교원노조법),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공직선거법)

1) 조선비즈(2024.06.25.), “정치하는 교사 만들자는 민주...”

2. 정치·교육의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대국민 공론화)

- 확장된 정치(일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개념의 공론화 및 일상 정치(교사들이 잘못된 교육정책이나 행정에 대한 의견 표명 보장)의 필요성 제고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재해석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

3. 교직 사회와 교사노조연맹의 과제

- 정치적 중립성 훼손·학생 학습권 침해 시 교직 사회 자정 시스템 구축, 사회적 소통 강화(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
- 교사노조연맹의 대국민 홍보 강화

* 입법 필요한 제안은 밑줄로 표시

발제자가 제시한 내용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하며, 제안하신 내용 중 교육감 선거 휴직 출마 보장과 선출직 임기 종료 후 학교 현장에 복귀하는 것에 관련된 법안을 검토하며 의견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 교원의 교육감 선거 휴직 출마 보장(공직선거법 제53조)

공직선거법 제53조에 의해 교육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면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발제자가 문제를 제기했듯이 교수의 경우 휴직 출마가 보장되며 이는 정당법 제22조(정당 가입 보장)와 선거법 제53조(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은 휴직 출마 가능)에 기인합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교수가 정치활동이 가능한 이유(정당법, 선거법)

- 정당법 제22조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의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 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고 하고, 각호에 금지되는 공무원과 허용되는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이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²⁾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②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 선거법 제53조에서 공무원 등의 입후보를 제한(선거일 60일 전에 사직)하나,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교수는 그 직을 가지고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이 가능함

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2)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염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 **선출직 임기 종료 후 학교 현장에 복귀(국회법, 지방교육자치법, 지방자치법의 겸직 금지 조항)**

국회의원과 교육감의 경우에는 교수도 당선되면 사직해야 합니다. 2013년 개정된 국회법(폴리페서 방지법)에 따라 19대 국회까지 휴직 상태로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교수 출신 국회의원들이 20대 국회부터는 임기 개시일 전까지 사직하게 되었습니다(겸직교수, 석좌교수, 외래교수 등은 해당하지 않음). 이 법령이 만들어졌던 당시의 상황과 법안 개정의 문제 인식을 복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에서, 지방의회의원에 당선된 교수(정당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는 의원 임기 종료 후 교수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 상충, 성실의무 위반 등 선출직 겸직에 대한 많은 윤리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의회에 더욱 많은 지역 내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열어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 외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재선거·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직을 휴직하거나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2.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와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3. 「정당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

지방교육자치법 제23조(겸직의 제한)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3.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직원
- ② 교육감이 당선 전부터 제1항의 겸직이 금지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일에 그 직에서 당연 퇴직된다.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읍면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마지막으로 교사노조연맹이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전략적으로 매우 동의하는 바이며, 본 토론자도 다른 글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방안을 제안하면서 단계적 추진을 제안³⁾한 바 있습니다.

교사노조연맹은 1단계는 정치후원금 허용 및 국가기관 고용 휴직 허용, 2단계는 공직 선거 휴직제도 허용, 3단계는 정당 관련 활동 허용을 제시하였는데, 다만 이 순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검토 시 염두에 둘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과 같은, 더 많은 교원이 정책적 효능감을 가질 수 있는 입법과제들을 앞 단계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고, 앞에서 관련 법령을 살펴본 것처럼 선거 출마 휴직 허용보다 교사의 정당 가입 허용이 더 먼저, 내지는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Ⅲ. 나가며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큰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대한민국의 교사는 그간 직무와 신분상 이중의 정치적 중립을 강요받았기에, 이 장막을 걷어내려면 더 많은 사회적 연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OECD 대부분의 국가가 공무원과 교사의 공무 외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가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OECD 가입국 중 한국이 유일한 상황에서 선생님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여정을 응원하며 토론을 마칩니다.

민주주의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목소리를 내는 학생,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민을 키우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과제다.

‘두터운 민주주의’는 시민사회의 모든 일원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에서 만들어진다.

- 위스콘신대 교수, 마이클 애플(Michael Apple) -

교사 정치기본권 박탈의 모순과 시대착오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제한된 것은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조항과 이에 따라 하위 법령들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헌법 7조는 관권정치시절 교사가 선거에 동원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려던 것이었으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교사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변질되었다.

헌법 제7조의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조항은 1960년 6월 15일 헌법 개정에서 등장한다.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겪으며, 정치가 교사(공무원)를 이용하고 교육을 수단화하는 것에서 보호하고자 하여 도입된 것이다. 헌법의 정치적 중립 보장 조항은 공무원 또는 교육이 권력에 지배되어 정치에 이용되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함이지, 한 국민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5.16. 이후 교사단체 해산, 정당법 등 교사시민권 박탈 법안이 제정되더니, 60여 년이 흐른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50만 국민인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의 취지는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자는 것이지 학교와 교사를 “정치적 결벽 상태”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었고, 60년간 시대도 변하였다. 2024년 현재는 만 16세의 학생이 정당에 가입하고, 만 18세에 피선거권을 가지며, 과거 부모와 교사가 지식 전수와 사회화의 유일한 창구였다면 지금의 학생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해나가는 시대이다. 그래서 교원에 대한 전면적인 정치기본권 박탈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관성적이고 시대착오적이다.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60.06.15.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1. 학생은 만16세 정당가입, 만18세 출마 가능!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는 불가?

2021년 12월 국회의원선거(총선)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되었고, 2022년 01월 정당가입(법정 대리인 동의 시) 연령이 만 16세로 조정되었다. 이로써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성인인 교사는 제한되는 정치참여 권리가 학생들에게는 보장되게 되었다. 어찌보면 교사는 미성년자인 학생보다 더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는 미숙한 존재가 된 것이다.

〈학생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비교〉

	학생	교사
정치후원금 허용	가능	불가
공직선거 출마 허용	가능(만 18세 이상)	불가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 허용	가능(만 16세 이상)	불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	가능	불가

이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닌다.

첫째, 정치기본권을 가진 학생에게 정치기본권이 박탈된 교사가 선거와 정당, 대의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학생들은 만 16세에 정당을 만들 수도 있고, 학교 안에서 토론과 모의선거도 가능하다. 그런데 막상 이를 가르치고 지도해야 할 교사는 정치기본권을 가지지 못해서 교사가 학생에게 정당가입과 정치참여를 가르치면서 교사는 법적 제한을 가진다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다. 국회는 교사에게 “너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학생들에게는 잘 가르쳐 보아라”라고 주문하고 있다. 국회는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기회가 늘어나면 일찍부터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에 대해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다”라며 청소년의 정치참여 연령을 낮추었지만, 분석적이고 비판적 사고를 기르기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할 교사가 민주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정치권조차 갖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정치참여 교육을 하고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둘째, 학생들의 가치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교사의 정치기본권 박탈을 정당화하고 있으나, 만 16세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 참여, 만 18세 피선거권은 청소년의 판단 능력과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또다시 모순이 생긴다. 정당 정치 참여와 피선거권은 학생들의 판단력을 믿지 못한다면 부여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학생 정치참여권 확대와 교사 정치기본권 제한은 학생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것인지, 스스로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존재로 보는 것인지 입장이 불분명하다.

2. 교사가 정치기본권을 가지면 학교가 정치화될 것이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이들은 종종 교사가 정치기본권을 가지면 이념·정치편향 교육을 할 것이다. 학교를 정치화할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학생은 이미 정치기본권을 가지고 있으며, 만16세로 정당 가입 연령을 내릴 때도 같은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2년이 흐른 지금 누구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또한, 이미 학생들을 상대하는 많은 직종이 정치기본권을 가지고 있다. 발제문의 <표 1-1> 교육 및 보육 관련 직업인의 정치활동 허용 현황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교 밖에서는 학원 강사, 어린이집 교사, 학교 안에서는 방과 후 강사, 돌봄전담사 등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이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만, 학생들에게 정치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제한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실체가 없는 기우에 불과하다.

또한 외국의 경우는 공무원 중에서도 교육이라는 비권력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 교사는 오히려 그 성격상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더 폭넓게 정치참여가 인정되고 있고, ILO(국제노동기구)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 1966년 ILO/UNESCO의 교사 지위에 대한 권고 “교사들은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제반의 모든 시민적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공직에 출마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Teachers should be free to exercise all civic rights generally enjoyed by citizens and should be eligible for public office).”
- 1998년 고용 직업상 참여를 금지하는 111호 협약 한국 정부 비준
- 2019년 ILO 협약 권고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보고서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한국의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ILO 111호 협약을 위반하는 명확한 차별, 교사들의 교육활동 외에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 2021년 ILO 기준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 권고 “한국의 초·중·등 교사들의 정치적 제반 활동들이 학교 시설 외부에서 행해지고 직접적인 교수 학습과 관련이 없는 한 이를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의견 표현에 기초한 차별에 해당하며, 이는 ILO 협약 위반”
- 2022년 국제교원단체 총연맹 아시아-태평양 지역(EIAP) 9차 총회에서는 한국 교사들의 정치적 권리 제약에 대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 유엔과 ILO 회원국으로서 한국의 국제 기준 존중 의무와 시민 인권 보호의 책임 강조
- 2024년 제112차 ILO 총회 노동계 대표 연설에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티 '한국정부에 교사 정치기본권 제약 경고' ... ILO 제소 검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발족, 10대 과제 중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우선과제

10월 30일부터 50만 교사정치시민권 입법 촉구 전국 대장정

'근무시간 중 정치중립', '근무시간 외 정치자유' 집중행동 선언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의 인성과 기본 습관 개발에 있어서 교사들이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교실 밖이나 학교 밖, 혹은 가르치는 것과 관계없는 교사의 활동을 교사 본연의 교육활동과 구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허용된 국가와 국제사회에서 반대의 움직임이 이미 있었어야 한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선진국으로서 모범과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한국이 국제표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후진적 태도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도 맞지 않는다. 대부분의 선진국 사례와 국제사회의 권고는 한국 교원의 정치기본권 박탈의 이유가 기우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오히려, 교사 정치기본권 제한은 교육이 정치권에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초래했다. 교육 분야는 매우 고도화되고 전문적인 영역임에도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전문가인 교사가 배제되면서, 비전문가들에 의해 교육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필요에 의한 정책이 남발되고 교사는 교육의 주체가 아닌 주어진 정책을 그저 시행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그리고 이는 교육 현장의 혼란과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고교학점제와 정시 확대라는 전혀 상반된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고, 만 5세 취학이라는 무리한 정책이 추진되었다가 한 달 만에 취소된 사례, 별도 예산 확보조차 없이 교육예산을 전용하는 무리한 유보통합, 최근 학생 인권 논란까지 교육 현장과 괴리된 정책들은 혼란과 갈등만 증폭시키고, 교육은 백년지대계라지만 백 년을 준비하기는커녕 정치 권력에 의해 쉽 없이 흔들리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오히려 교육전문가인 교사의 정치 참여로 보장될 수 있으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박탈로 인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사의 교육활동 중 학생 교육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보장은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같은 사회적 합의 장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대안을 찾아갈 수 있음에도

현재의 교사 정치기본권 박탈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득보다 실이 많다고 할 수 있다.

3. 국민의 권리 제한은 최소화되어야

헌법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으로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제한은 최소화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자 운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민 대다수는 공공의 이익(보행자나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고령자의 운전을 무조건 제한하여야 한다기보다는, 고령자의 이동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하물며,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실체가 불분명한 교사의 사적영역에서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권리 박탈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교사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근거가 되는 헌법 제7조와 제31조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헌법 제7조와 제31조의 정치 중립성 “보장”은 의무의 조항이라기 보다는 권리적 조항에 가깝다. 이는 헌법의 다른 의무 조항과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와 제39조 “국방의 의무를 진다.”와 같은 의무 조항은 권리 조항과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주체는 이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존재들에게 있는 것이고, 보장받아야 할 대상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같은 예로 헌법 제23조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하지는 않지 않는가?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종교적 중립과 다르지 않다. 교육활동 중 학생들에게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가치관을 주입하고 강요해서는 안 되지만, 개인이 근무시간 외 종교활동을 하는 것은 종교의 중립성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이는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 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신의 정치적·종교적 신념을 전파하기 위해 교육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구도 종교의 중립성과 마찬가지로 “학교”라는 공간, “근무시간 중”이라는 시간, “교육활동”이라는 목적성에 대해서만 제한되어야 마땅하다. 헌법재판소에서도 2020년 정당법 위헌 심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면서도 “근무시간 외의 집단행위는 학생들에게 간접적·사실적 영향만 미침에도 이를 이유로 기본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박탈”이라 하였고, “교원이 받게 되는 정당 설립·가입의 자유에 대한 제약과 민주적 의사 형성 과정의 개방성과 이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공익에 발생하는 피해가 매우 크다”라는 의견을 냈다.



50만 교사 정치시민권 입법 촉구 대장정



교원 정치기본권 요구 교사노조연맹 총선요구안 발표

교사가 24시간 교사로서 모든 공간과 생활에서 공무와 무관함에도 정치기본권을 박탈되는 것은 국민으로서 명백한 차별이며 헌법에도 어긋난다. 시민으로서의 교사와 교육자로서의 교사를 구분하고 직무 관련성의 안에서만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여야 한다.

4. 독일의 보이텔스바흐와 같은 합의, 왜 우리는 안되나?

헌법 제31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63.12.17.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사(교육자)가 교육활동 중 한 정당에 편향된 태도를 보이거나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주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이지, 민주시민을 위한 정치교육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것이 아니다. 한 교수는 현재의 교육 현장을 정치적 진공 상태라 표현하였다. 만 16세에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학생이 학교에서 정치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경험할 수 없다면 학생들은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교육을 어디에서 배우고 훈련할 수 있을까?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면서 학생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교사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배제하고 다양한 정보와 접근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교육활동 중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이

것으로 충분한 조건이 형성되며, 이로써 교육기본법 제6조의 교육의 중립성은 충족된다. 교사의 사적영역에서까지 정치기본권을 전면 박탈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다.

진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시민 교육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입장과 정보를 접하고 자신의 관점과 견해를 형성해나가도록 돕는 민주시민교육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누군가는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결벽적인 정치적 제한은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이유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분단국가의 상황은 우리나라만의 경험만 아니다. 독일도 우리와 같이 분단국가의 경험이 있는 나라이다. 독일은 좌파, 우파의 이념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였을까? 독일에는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있었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1976년 서독에서 비판적 사고력과 자율적 판단력을 길러 주기 위해 좌우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교육지침이다. 학교에서의 이루어지는 정치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강제성의 금지(강압적인 교화 교육 및 주입식 교육 금지), 논쟁성의 유지(수업 시간에도 실제와 같은 논쟁적 상황을 드러낼 것), 정치적 행위 능력의 강화(학생 자신의 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를 고려한 실천 능력을 기를 것)를 기본으로 한다. 이 합의를 이루기까지 보수와 진보는 격렬하게 대립하였고 치열하게 토론하였지만 결국 합의를 끌어냈고, 이 합의는 현재까지 독일의 모든 공교육 영역에서의 정치교육 헌법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왜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의 원칙에 대한 논의가 부재한 것일까? 우리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같은 보수와 진보 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것일까? 지금 우리 학교의 정치교육 진공 상태는 미래 민주시민들을 우민화시키고 있고,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는 왜곡되어 있다. 아직도 좌파 우파 양분적으로 나누어 적대시하고, 빨갱이라는 단어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으니 “차이에 대한 존중”, “토론과 합의” 같은 민주시민의 태도도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가장 나은 합의를 찾아가는 것이다. 일상의 모든 것에 정치가 녹아 있고, 정치교육은 일상의 모든 갈등과 선택에 필요한 일상 교육인 것이다. 다양한 매체와 통로를 통해 개인의 의견 개진 기회는 폭넓어졌으나 이념대립, 흑과 백, 나와 같지 않으면 적, 이런 식의 토론 문화에 머물러 갈등만 더욱 커지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 누구도 제대로 된 민주시민 교육을 접해보지 못하였고, 민주시민 역량은 갑자기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선거에 출마할 기회를 준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만16세 정당 가입을 허하기 전에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 정치 참여자로서의 훈련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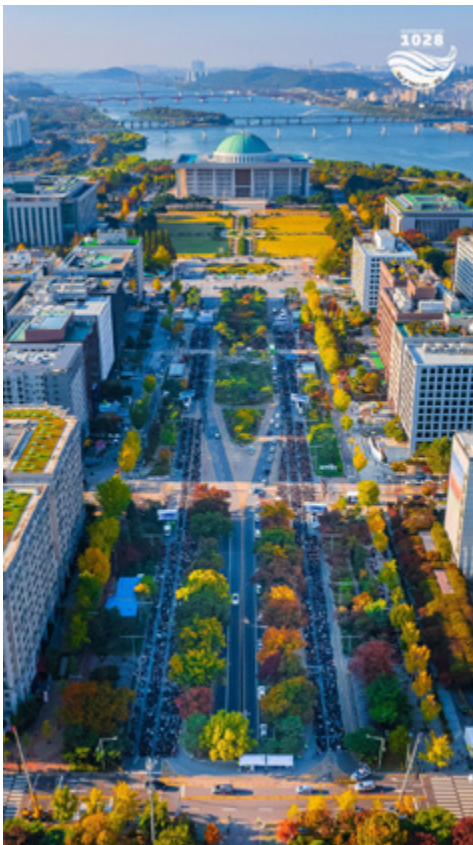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다.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민주주의식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사례이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의식은 매우 퇴보적이다. 세계의 여러 선진국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정치참여 교육이 이루어진다. 인권, 환경, 교육 다양한 분야에서 토론과 참여의 경험은 비판적 사고와 주체적 역량을 높여준다. 이로써 아이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현실은 정치에 알려지라도 있는 듯이 폐쇄적이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사적영역에 있어서까지 국민의 기본권이 박탈당한 교사들과 제대로된 민주시민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다. 정치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녹아 있고, 매 순간 모든 선택에 정치가 있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모두 정치의 상황에 놓이게 되고, 정치적 기본권의 행사는 천부적 권리인 것이다.

만16세 정당가입법(정당법) 통과 직후 이재명 당대표는 “대부분의 국가가 정당 가입 연령을 법으로 규제하지 않는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할수록 더 좋은 민주주의 사회로 갈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는 교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교사의 정치참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고, OECD 국가 중 교사의 정당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기본권 행사에 있어서 교사라는 이유로 직무와 무관한 사적영역에 있어서까지의 전면 제한은 완전한 모순이다. 국회는 50만 국민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해답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그 날이 오면

김상규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위원



[사진] 11차 교사 집회 (2023.10.28)

집회 헌정곡 [꺾인 꽃의 행진]

- 공교육 정상화를 기다리며

들리는가 분노한 우리의 함성 소리가
무너져간 교실에서 홀로 싸워온
보이는가 새카만 이곳의 성난 파도가
제자리를 찾아가길 원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 견뎌왔는가
이젠 일어나 바로잡으세

들리는가 분노한 우리의 함성 소리가
무너져간 교실에서 홀로 싸워온
우리 꿈꿔왔던 교육을 되찾기 위하여
이제는 더 이상 헛된 죽음 막으리
죽음 막으리 죽음을 막으리

작곡 김종환, 작사 강한길·김종환

[1] ▶Remember 0718, 서이초 1주기◀

2023년 7월 18일, 서울 서이초 막내 선생님의 죽음은 교육계를 뒤집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를 찾아가서 분노하고 추모하는 것을 넘어 서울 보신각과 경복궁, 국회 앞에

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정부(교육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교권 5법(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여 학교 현장에 시행했습니다.

2023년 9월 4일, 서이초 선생님의 49재가 되던 날, 저는 국회 앞으로 가려던 길을 멈추고 용인 기흥고에 가게 되었습니다. 체육 수업 활동 중에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 학부모가 지도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고 교육청에 민원(징계 요구)을 넣어서 경찰조사와 교육청 감사를 받다가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정년을 1년 정도 남겨둔 분이셨습니다.

그날 밤, 기흥고 선생님의 장례식장에서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잠긴 아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상실감이 저에게도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서울 신목초, 대전 용산초, 군산 무녀도초 등 수많은 선생님의 아픔과 고통, 죽음이 있었습니다. 밤늦게 교원 사망 및 순직 인정 현황 자료¹⁾를 혼자서 살피다가 죽음의 이야기가 다가와서 힘들고 무서웠습니다.



[사진] 용인 기흥고 정문 앞 추모공간 (2023.9.4)

[2] 교육 문제 해결의 출발점, 정치기본권 회복!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오늘, 학교 현장의 문제가 대부분 해결 되었나요? 초등학교 현장에서 담임교사로 일하고 있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

1) 좋은교사운동(2023), [성명서] 15개 시도교육청 교원 사망 및 순직 인정 현황 분석 결과 및 대책 마련 촉구

합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여러 대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지원해주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²⁾에 가까운 대책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된 것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도입된 것 외에는 뚜렷한 정책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특히, [교육부]에 의해 시행된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³⁾에서 갈등과 문제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교육 과정에서 교원이 악성민원을 겪거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펄쩍 뛴지도 모르겠으나 지금처럼 정치기본권이 없는 교사는 누가 뭐래도 **2등 시민**이자 **정치 천민**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교사 집단이 이런 사실을 직시하고 **‘면천 의지’**를 불태워야 바람직하다. 만약 50만 교사가 정치적으로 면천을 해 정당 정치와 선거 정치, 의회정치를 직접 경험하고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한다면, 학교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고 정당민주주의와 시민사회도 강화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교육 입법과 교육정책, 교육예산이 비전문가들의 손에 흔들리며 포퓰리즘으로 흐르지 않을 수 있다.⁴⁾

근본적인 원인은 교원의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정치기본권은 박노현 이사장님께서 2020년에 쓰신 [칼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2등 시민’이자 ‘정치 천민’이기 때문입니다. 발제문에서 “한국의 교사는 2024년 현재 천민 카스트다. **정치기본권 확보 운동은 면천 운동**이다.”라는 표현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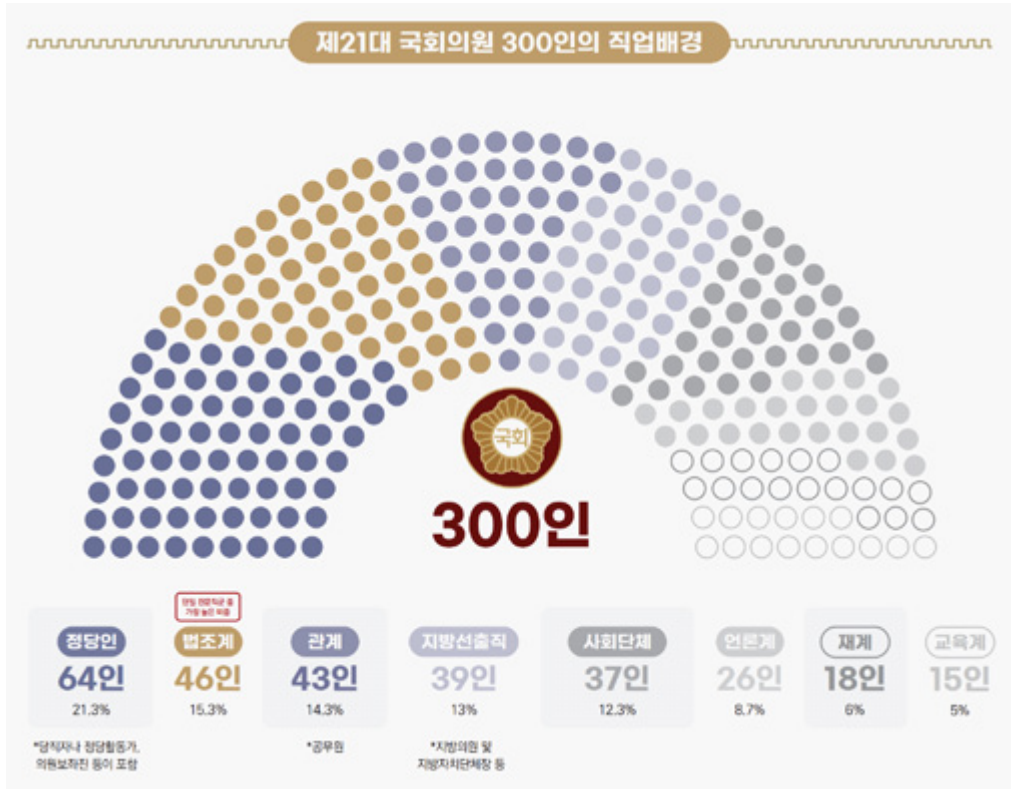
[3] 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헌법 개정!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인디스쿨에서 활동하시는 보헤미안 선생님입니다. 그분은 7차 교사 집회(2023.9.2)에서 사회자를 맡으셨고, 국회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후에도 교육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활동하고 계십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회복된다면 국회 밖이 아니라 안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네이버 한자사전(2024),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검색결과, 죽은 뒤에 약방문(藥方文)을 쓴다는 의미

3) 전교조(2023), [보도자료] 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관한 현장 설문 결과, ‘변화 없다’ 72.3%

4) 박노현(2020.12.29), [박노현 칼럼] 백금열 사건과 교사의 정치적 면천 운동, 민중의소리



전진영(2024), 국회와 주요국 의원의 직업적 배경 비교 : 법조계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NARS 인포그래픽스

학생 생활교육, 학교폭력, 교권 침해 등 여러 교육 문제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지만, 국회에서 법률 제·개정 없이는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한국의 교육제도는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고,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시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과 각급학교를 제도적으로 강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하부조직이며, 교사는 말단 공무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본 연구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사와 학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해서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야 헌법을 개정하여 정치기본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정치기본권에서 대학 교원과 유·초·중·고 교원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회복하려면 2018년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처럼,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로 조문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경우, 학교가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자 장소입니다. 학교 밖, 퇴근시간 이후에는 교사들도 시민으로서 정치적으로 오롯이 자신의 생각과 목소리를 낼 수 있

어야 합니다.

정치활동의 허용범위와 관련해서 설문조사 참여자의 대부분(교사 98.3%, 학부모 87.5%)이 찬성한 것처럼, OECD 수준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단계로서 교사노조연맹의 [교사 정치기본권 추진 방침]처럼 [1단계] 교원의 정치후원금 허용, [2단계] 선거를 위한 출마 휴직 허용, [3단계]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 허용의 순서대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학교 교육활동 중에 시사적이거나 논쟁적인 주제를 다루다가 교사 개인의 관점이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강요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따라 교사가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쟁적인 주제일수록 논쟁적인 형태로 가르쳐야 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그림] 보이텔스바흐 3가지 합의 (©정검다리교육공동체)

[4] 나가며



[포스테] 영화 1987



[스틸컷] 영화 1987

영화 [1987]의 마지막 장면에서 거리에 나온 시민들은 “호헌철폐! 독재 타도!”를 외칩니다.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처럼, 군사독재로 인해 잃어버린 정치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죽음을 각오한 시민운동이었습니다. 엔딩 크레딧에는 100만 명이 모인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 사진과 전태일 열사를 추모하는 [그 날이 오면] 노래가 나옵니다. 그렇게 정치기본권을 되찾았습니다.

“7월 18일 이후 우리의 삶도 함께 멈추었습니다.”

“선생님,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우리는 모두 당신입니다.”⁵⁾



[사진] 서이초 선생님 동료 교사 추모 발언

이 땅에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회복되는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5) 오마이TV(2023), 7차 교사집회(2023.9.2.) 故 서이초 선생님 동료교사의 추모발언 중 일부

[시] 그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은
삼각산(三角山)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 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할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날으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人聲)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頭蓋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恨)이 남으리까.

그 날이 와서 오오 그 날이 와서
육조(六曹) 앞 넓은 길 울며 뛰며 덩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 메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심훈

[노래] 그 날이 오면

한밤의 꿈은 아니리 오랜 고통 다한 후에
내 형제 빛나는 두 눈에 뜨거운 눈물들
한 줄기 강물로 흘러 고된 땀방울 함께 흘러
드넓은 평화의 바다에 정의의 물결 넘치는 꿈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내 형제 그리운 얼굴들 그 아픈 추억도
아 짧았던 내 젊음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내 형제 그리운 얼굴들 그 아픈 추억도
아 피맺힌 그 기다림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작사·작곡 문승현

[참고자료]⁶⁾

[표1] 2020년~2023년 상반기 15개 시도교육청별 교원 사망 현황 분석 결과

	사망 교원수	자살 교원수	5년차 이내 자살 교원수	5년차 이내 자살교원 비율	자살교원 중 공무상 사망 인정 교원수	자살교원 중 공무상 사망 인정률
서울	67	10	3	30%	0	0%
인천	37	3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대전	16	3	2	66.6%	0	0%
충북	19	5 (외인사)	2	40%	0	0%
충남	27	5	3	60%	0	0%
세종	6	1	0	0%	0	0%
경북	34	6	1	16.6%	자료 부존재	자료 부존재
대구	20	2	0	0%	0	0%
경남	39	5	1	20%	0	0%
울산	14	2	0	0%	1	50%
부산	36	6	3	50%	0	0%
전북	10	3	0	0%	0	0%
전남	10	2	0	0%	0	0%
광주	22	7 (미상)	0	0%	0	0%
제주	12	1	1	100%	0	0%
합계	369명	61명	16명	27.6% (인천 제외)	1명	1.9% (인천, 경북 제외)

6) 좋은교사(2023), [성명서] 15개 시도교육청 교원 사망 및 순직 인정 현황 분석 결과 및 대책 마련 촉구

[표2] 2020년~2023년 상반기 15개 시도교육청 연도별 교원 사망 현황 분석 결과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망교원수	자살교원수	사망교원수	자살교원수	사망교원수	자살교원수	상반기 사망교원수	상반기 자살교원수
서울	22	3	21	2	19	4	5	1
인천	10	1	9	0	13	2	5	0
대전	연도정보없음. 공무상 사망 인정 0명							
충북	(자료없음)	(자료없음)	5	1(외인사)	8	0	6	4(외인사)
충남	연도정보없음. 공무상 사망 인정 4명(국외연수중 사고)							
세종	1	0	0	0	5	1	0	0
경북	6	1	12	3	9	0	7	2
대구	3	0	5	2	6	0	6	0
경남	8	1	14	1	7	0	10	3
울산	5	1	3	0	4 (1)	1 (1)	2	0
부산	12	3	10	3	10	0	4	0
전북	1	0	1	1	7	2	1	1
전남	1	0	4 (1)	2	3	0	2	0
광주	6	2(미상)	4	2(미상)	5	0	7	3(미상)
제주	6	1	2	0	4	0	0	0
합계	81	13 (미상2)	90 (1)	17 (미상2)	100 (1)	10 (1)	55	14 (외인사4, 미상3)

※(괄호) 표시는 공무상 사망(순직) 인정 교원수

[참고문헌]

곽노현(2016. 8. 17),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이텔스바흐 원칙만으로 충분하다,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곽노현(2016. 9. 21), 교사와 청소년의 정치배제 극복과 보이텔스바흐 원칙,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곽노현(2020. 12. 29), [곽노현 칼럼] 백금열 사건과 교사의 정치적 면천 운동, 민중의소리
김선화(2020), 교원의 정치적 자유 제한과 헌법재판소 결정-쟁점과 입법과제, 국회 입법조사처
김재현, 류창기, 성현아, 송철섭, 양봉준, 이상수, 정희범(2024), 공교육 멈춤, 그 이후, 비사이드박스
네이버 한자사전,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검색결과
박정현(2024. 1. 16), [박정현 칼럼] 교사의 '정치력'과 '정치화'의 경계, 교육플러스
실천교육교사모임(2023), 대한민국 교육, 광장에 서다, 학교도서관저널
오마이TV(2023), 7차 교사집회(2023. 9. 2) 故 서이초 선생님 동료교사의 추모발언
이경아(2024), 22대 국회 교육정책 과제 제안 : 공무원,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 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
전국교직원노동조합(2023), [보도자료] 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관한 현장 설문 결과
전진영(2024), 국회와 주요국 의원의 직업적 배경 비교 : 법조계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입법조사처
전진영(2024), 국회와 주요국 의원의 직업적 배경 비교 : 법조계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NARS 인포그래픽스
정용주(2023), 1014 교사집회 발언 원고, 인디스쿨
좋은교사운동(2023), [성명서] 15개 시도교육청 교원 사망 및 순직 인정 현황 분석 결과 및 대책 마련 촉구
한국교육신문(2018. 4. 2), 文개헌안 3대이슈 “국민적 합의 먼저”

교사의 권리에 관한 국제 기준과 교사의 정치적 권리 해외 사례

윤희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

1. 교사의 지위: 정치적 무권리의 ‘천민’

- 한국 사회에서 교사는 세 가지 지위를 갖고 있다. 국민, 노동자, 공무원이 그것이다. 교사의 세 가지 지위를 고려할 때, 교사의 권리 또한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국민으로서의 권리, 노동자로서의 권리, 교사로서의 권리가 그것이다.
- 국제 기준의 측면과 해외사례의 비교를 통해 이러한 권리를 살펴볼 때, 한국의 교사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 노동자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또한 공무에 종사하는 교사로서의 기본권을 모두 박탈당한 상태다.
- 국제 기준에서 국민, 즉 인민(people)으로서의 권리는 국제연합(UN)의 국제인권법인 〈세계인권선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국제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 국제규약〉에서 보장된다.
- 국제 기준에서 노동자(worker)로서의 권리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한 국제노동법인 협약(Conventions)에 의해 보장된다. 특히 ILO는 가장 초보적인 노동자의 권리로 10개 기본 협약(Fundamental Conventions), 특히 그중에서도 결사의 자유 협약 87호와 단체교섭권 협약 98호를 강조한다.
- 국제 기준에서 공무원으로서의 교사의 권리는 ILO 공무 노동관계 협약 151호와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공동 채택한 ‘교사의 지위에 관한 권고’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 이러한 국제 기준을 토대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교사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 본 토론문에서는 교사의 권리에 관한 국제 기준과 교사의 정치적 권리에 관련된 해외 사례, 그리고 해외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지침(미국 사례)을 살펴본다. 국제 기준과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교사의 정치적 지위가 기본권을 박탈당한 ‘천민’ 상태에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사노조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발제자 논지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2. 국민, 즉 인민으로서 교사의 권리: UN 인권법

2.1. UN 세계인권선언

-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UN)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의 전문은 이 선언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자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이라면서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했다”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정치적 권리, 노동권, 교육권과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18조),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19조)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20조),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정부에 참여할 권리와 동등한 공무담임권(21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22조)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일과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근무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 차별 없이 같은 근로(work)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23조), 근무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의 권리(24조)를 가진다.

2.2. 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국제규약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은 1966년 12월 16일 열린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다자간 조약으로 1976년 1월 3일 발효되었다.
- 지금까지 171개국이 비준한 이 규약을 대한민국 정부는 1989년 10월 5일 제3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90년 3월 16일 제148호 국회(임시)의 동의를 얻어 1990년 4월 10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최호중 외부부장관 명의의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1990년 7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조약 제1006호). 여기서 정치적 권리, 노동권, 교육권과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모든 인민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인민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1조1항).
-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노조의 규약에만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조에 가입하는 권리, 그리고 그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에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할 수 없음을 약속한다(8조1항a).
- 또한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합 또는 총연합을 설립할 권리와 연합 또는 총연합이 국제노동조합조직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권리(8조1항b),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공공질서를 위하거나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자유로이 활동할 권리(8조1항c), 법률에 따라 행사될 것을 조건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8조1항d)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 규약의 위 조항은 군인, 경찰 또는 국가행정의 구성원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적법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지만(8조2항),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1948년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보장된 권리를 저해하려는 입법 조치를 취하거나, 그러한 권리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8조3항).

-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하고(13조1항), (a) 모든 사람을 무상의무 초등교육 (b)모든 사람에게 중등교육의 개방 및 점진적 무상교육화 (C)고등교육의 능력에 기초한 동등한 개방 및 점진적 무상교육화 (d)초등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을 위한 기본교육의 장려와 강화 (e)학교제도 발전의 적극적 추진 및 적절한 연구 장학 제도의 수립, 그리고 교육원 물질적 처우의 지속적 개선을 인정한다(13조2항).

2.3. UN 시민적·정치적 권리 국제규약

- 〈시민적·정치적 권리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은 1966년 12월 16일 열린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다자간 조약으로 1976년 3월 23일 발효되었다.
- 지금까지 173개국이 비준한 이 규약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9년 10월 5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1990년 3월 16일 제148회 국회(임시)의 동의를 얻어 1990년 4월 10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최호중 외무부장관 명의의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1990년 7월 10일부터 대한민국에 효력을 발생하였다(조약 1007호). 여기서 정치적 권리, 노동권, 교육권과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모든 사람은 자결권을 가지며, 이 권리에 기초하여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1조1항).
-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18조1항), 이러한 권리는 법률로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18조3항).
-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19조1항),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19조2항)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21조),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한 타인과 함께 하는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22조1항)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법률로 규정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

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서는 아니 된다(22조2항). 하지만 22조 2항은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87호를 저해하는 입법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22조3항).

-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25조 a),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정기적인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되는 것(25조b), 일반적인 평등한 조건 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것(25조c)에 관련된 권리와 기회를 가진다.

3. 노동자로서 교사의 권리: ILO 협약

3.1 모든 나라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ILO 기본 협약

- 1919년 출범한 ILO는 지난 100여 년 동안 191개 협약을 채택했다. 그중에서 ILO 기본 협약은 1998년과 ILO 총회에서 채택되고, 2022년 총회에서 개정된 「ILO 일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에서 정식화되었다.
- 1998년 총회에서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87호와 98호), △강제노동 금지(29호와 105호), △아동노동 철폐(138호와 182호), △차별 금지(100호와 111호) 등 4개 영역의 8개 협약이 기본 협약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2022년 ILO 총회에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155호와 187호)이 기본 협약으로 추가되었다.
- UN 등 국제기구가 말하는 국제노동기준은 넓은 의미에서 1919년 출범 이래 ILO가 지난 백여 년 동안 채택한 191개 협약을 말하며, 좁은 의미에서 보자면 「ILO 일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에 명시된 5개 범주에 관련된 10개 협약이라 할 수 있다.

3.2. 강제노동 철폐 협약 105호를 비준하지 않은 대한민국과 협약 111호 위반 문제

- 이들 10개 협약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는 ‘강제노동 철폐 협약’ 105호를 아직도 비준하지 않고 있다. 187개 ILO 회원국 중 협약 105호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 브루나이, 라오스, 마셜제도, 미얀마, 팔라우, 동티모르, 통아, 투발루 등 9개국뿐이다.

- 105호 협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법률은 이념적·정치적 반대자를 징역형에 처하는 국가보안법과 파업참가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형에 처하는 형법 등이 있다.

[표1] ILO 기본 협약 5개 범주와 10개 협약

범주	협약	비준국 수	한국 비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 협약 87호, 1948	158개국	2021.4.20.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98, 1949	168개국	2021.4.20.
강제노동 금지	강제노동 협약 29호, 1930	181개국	2021.4.20.
	강제노동 철폐 협약 105호, 1957	178개국	비준 안 함
아동노동 철폐	최저 연령 협약 138호, 1973	176개국	1999.1.28.
	최악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 182호, 1999	187개국	2001.3.29.
차별 금지	동등 보수 협약 100호, 1951	174개국	1997.12.8.
	고용과 직업의 차별 금지 협약 111호, 1958	175개국	1998.12.4.
안전보건	직업안전보건 협약 155호, 1981	81개국	2008.2.20.
	직업안전보건 증진 체계 협약 187호, 2006	63개국	2008.2.20.

자료: 필자 정리. 비준국 수 검색일 2024. 6. 3.

- ILO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 금지 협약 111호와 관련하여 ILO의 ‘협약 및 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는 2021년 2월 15일 발표한 <2021년 국제노동기준 적용>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초·중·고 교사들의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 참여 같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고용과 직업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111호 협약에 위배된다고 봤다.¹⁾
-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이들의 정치활동을 억압하는 한국 정부의 조치는 협약 111호가 규정한 인종·피부색·성·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혹은 사회적 출신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활동 제한은 공공부문 전체가 아니라 특정한 공무에 한정돼야 한다고 ILO 전문가위는 강조했다.

3.3. ILO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87호

- 국가와 기업이 노동조합의 존재와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권리는 실현될 수 없다. 노동조합의 권리란 노동조합이 노동자를

1) 윤효원, ‘ILO “한국 법·제도, 100·111호 협약에 위배”, 『매일노동뉴스』, 2021년 2월 18일 자.

위한 독립적인 대표 조직으로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는 노동조합 설립권, 노동조합 인정권, 국가나 사용자의 간섭 없이 노동조합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 이러한 내용을 명시한 ILO 협약 87호, 즉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은 2차 대전 직후인 1948년 7월 9일 ILO 총회에서 노사정 3자 합의로 채택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자조약(외교부 제2504호, 2022. 4. 18)으로 2022년 4월 20일 발효되었다.
- ILO 협약 87호는 1절에서 ‘결사의 자유’에 관한 조항(2조~10조)을, 2절에서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항(10조)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조 “노동자 및 사용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사전 인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해당 단체의 규칙만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3조 “(1)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그들의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완전히 자유롭게 대표자를 선출하며, 운영 및 활동을 조직하고, 사업을 수립할 권리를 가진다. (2)정부는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삼간다.”
- 4조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행정기관에 의해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지 않는다.”
- 5조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연맹과 총연합단체를 설립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단체, 연맹 또는 총연합단체는 국제적인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와 제휴할 권리를 갖는다.”
- 6조 “이 협약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연맹 및 총연합단체에 적용된다.”
- 9조 “(1)이 협약에 규정된 보장사항이 군대 및 경찰에 적용되는 범위는 국내 법령으로 정한다.”

- 10조 “이 협약에서 단체는 노동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옹호하기 위한 모든 노동자단체 또는 사용자단체를 의미한다.”
- “노동자와 사용자”라는 2조 주어에서 알 수 있듯이 ILO 결사의 자유 협약 87호에서 말하는 ‘결사의 자유’(freedom of association)에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다시 말해, 결사의 자유는 노동자는 물론이거니와 사용자에게도 보장되는 권리인 것이다.
- 노사 단체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은 사전인가 등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노사 단체의 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행정기관은 노사 단체를 해산하거나 그 활동을 정지시켜서는 안 된다.
- 그리고 87호 협약은 군대와 경찰을 제외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3.4. ILO 단결권 보호와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 98호

- 사용자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노동자가 이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가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체교섭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자발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기업이 ‘자발적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합의한 결과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 따라서 독립적인 당사자인 사용자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교섭(legally mandated bargaining)에 응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대한 인권 침해가 아니다. 단체교섭의 권리는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단체교섭이 노동자의 권리(right)라 할 때, 당연히 사용자에게는 의무(duty)가 된다.
- 이러한 원리를 명시한 ILO 협약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of the Right to Organise and to Bargain Collectively)은 결사의 자유 협약 87호와 더불어 2차 대전의 산물로 1949년 7월 1일 ILO 총회에서 노사정 3자 합의로 채택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자조약(외교부 제2505호, 2022. 4. 18)으로 2022년 4월 20일 발효되었다.

- 협약 98호는 단체교섭권 협약이라 불리지만, 조항을 살펴보면 단체교섭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은 없다. 앞서 언급한 대로 협약 98호는 노동자에게 단체교섭을 권리로서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명시하고 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조. “(1)노동자는 고용과 관련하여 반(反)노동조합 차별행위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는다. (2)이러한 보호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 보다 특별히 적용된다. (가)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할 것을 조건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행위. (나)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나 근로시간 외에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 내에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
- 2조. “(1)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그 설립, 운영 또는 활동에 대해 상호 간 또는 상대의 대리인이나 구성원의 모든 간섭 행위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는다. (2)특히, 노동자단체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통제하에 둘 목적으로, 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지배하에 둘 목적으로 노동자단체 설립을 촉진하거나 노동자단체를 재정적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위는 이 조에서 의미하는 간섭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3조. “2조에서 말하는 (노동자의) 조직할 권리의 존중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국가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 4조. “단체협약이라는 수단을 통해 고용의 조건과 상태를 규제할 목적으로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사이의 자발적 교섭(voluntary negotiation)을 위한 제도의 충분한 발전과 활용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해 국가의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5조. “(1)이 협약을 군대와 경찰에 보장하는 정도는 국가의 법령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 6조. “이 협약은 국가 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위는 다루지 않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의 권리 또는 지위에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는다.”
- 협약 87호의 ‘결사의 자유’가 노동자는 물론 사용자에게도 적용되는 권리라면, 98호는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가 하지 말아야 할 의무 사

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단체교섭이 노동자에게는 권리이며, 사용자에게는 의무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는 노동자의 조직할 권리, 즉 단결권을 존중해야 한다. 협약 98호는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용자의 의무를 ‘반노조 차별행위’(acts of anti-union discrimination)의 금지로 규정한다. 이를 우리나라 노동법 용어로 설명하면 사용자에 의한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ur practices)의 금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협약 2조와 관련해서 유의할 점이 있다. 2조는 노동자단체를 위한 사용자의 재정적 지원을 금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사용자 혹은 사용자단체가 노동자단체를 통제·지배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이를 ‘반노조 차별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3.5. ILO 협약 87호와 98호를 보완하는 ‘사업장 노동자 대표 보호’ 협약 135호

- 협약 87호와 98호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조합 활동가나 대표자에 대한 차별, 협박, 괴롭힘, 그리고 노동조합 인정, 단체교섭 등의 문제에 대해 UN과 ILO가 채택한 국제기준에서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져 왔다.
- 노동자 인권의 토대를 이루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effectively)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 대표에게 제공되어야 할 보호 및 편의와 관련하여 ILO는 협약 135호를 중요한 보완 협약으로 강조하고 있다.
- ‘사업장의 노동자 대표에게 제공되는 보호 및 편의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concerning Protection and Facilities to be Afforded to Workers’ Representatives in the Undertaking)은 1971년 6월 23일 ILO 총회에서 노사정 3자 합의로 채택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자조약(외교부 제1618호, 2002. 12. 31)으로 발효되었다.
- 이 협약은 노동자 대표의 개념을 정의하고 노동자 대표가 자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를 보호하고 노동자 대표의 활동에 관련된 편의(facilities)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협약 135호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조. “사업장(undertaking)의 노동자 대표는 현행 법령, 단체협약 그 밖의 노사협약에 따라 행동하는 한, 노동자 대표로서의 지위나 활동을 이유로 또는 노동조합원이나 노동조합 활동에의 참가를 이유로 행한 해고를 포함한 불이익한 조치로부터 효과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
- 2조. “(1)적절한 경우 노동자 대표가 그 직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으로부터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2)이 경우 국내의 노사관계 제도의 특성이나 당해 기업의 필요·규모 및 능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3)그러한 편의의 제공은 당해 기업의 능률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 3조. “이 협약의 목적상 ‘노동자 대표’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인지의 여부가 국내 법령이나 관행에 따라 노동자 대표로 인정된 자를 말하며, 이는 다음과 같다. (가) 노동조합 대표, 즉 노동조합이나 해당 조합의 구성원이 지명·선출한 대표. 또는 (나) 선출된 대표, 즉 사업장의 노동자가 국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로서, 해당 국가에서 노동조합의 배타적 권한으로 인정되는 활동이 그 임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4조. “이 협약에서 규정하는 보호 및 편의를 받을 권리를 가진 노동자 대표의 종류는 국내 법령·단체협약·중재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
- 5조. “동일 사업장에 노동조합 대표 및 선출된 노동자 대표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선출된 노동자 대표의 존재가 관련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 대표의 지위를 저해하는 데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고, 모든 관련 사항에 대하여 선출된 노동자 대표와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대표와의 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적당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 6조. “이 협약은 국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또는 국내 관행에 적합한 그 밖의 방법으로 실시될 수 있다.”

4. 공무에 종사하는 교사로서의 권리

4.1. ILO 노동관계(공무) 협약 151호

- 공무(public service) 활동이 많은 나라에 뚜렷이 확장되고, 공공당국과 공공종업원단체 사이에 건전한 노동관계의 필요성이 커졌다. 하지만, 협약 98호는 공공종업원(public employees) 가운데 일부 범주를 포함시키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협약 135호는 ‘사업장의 노동자 대표’(workers’ representatives in the undertaking)에게 적용되었다.
- 회원국 사이에 정치체제, 사회체제, 경제체제의 다양성이 크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기능, 국유사업과 다양한 형태의 자율적 공공기관 혹은 반(半)자율적 공공기관의 기능, 그리고 고용관계의 성격이 관행적으로 차이가 컸다.
- 많은 나라에서 공적 고용과 사적 고용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1949년 채택된 ‘조직할 권리와 단체교섭’ 협약 98호를 공무원(public servants)에게 적용하는 데 해석상의 어려움이 컸다. 특히 몇몇 정부는 공공종업원 가운데 큰 집단들을 배제하는 식으로 협약 98호를 적용해왔다.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ILO는 공무에서 결사의 자유와 고용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와 관련한 국제협약을 채택하였다.
- 협약 151호는 공공당국에 의해 고용된 모두에게 적용된다(1조1항). 정책 결정이나 관리 기능을 맡은 고위 종업원에게 이 협약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지는 국내 법령에 따른다(1조2항). 군대(armed forces)에게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지도 국내 법령에 따른다(1조3항).
- 협약 151호가 말하는 공공종업원(public employees)은 1조에 따른 사람을 말하며 (2조), 공공종업원단체는 공공종업원의 이익을 키우고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뜻한다(3조).
- 공공종업원은 고용과 관련해서 반노조 차별행위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는다(4조1항). 이러한 보호는 고용을 조건으로 공공종업원이 공공종업원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단체의 회원자격을 포기하도록 계산된 행위, 공공종업원단체의 회원자격을 이유로

혹은 그 단체의 정상적 활동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공공종업원을 해고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에 보다 특별하게 적용된다(4조2항).

- 공공종업원단체는 공공당국으로부터 완전한 자주성을 누린다(5조1항). 공공종업원 단체는 그 설립, 기능 및 운영에서 공공당국의 어떠한 개입행위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는다(5조2항). 특히 공공당국의 지배 아래 공공종업원단체의 설립을 촉진하려고 계획된 행위, 공공종업원단체를 공공당국의 통제하에 두려는 목적을 갖고 재정수단 혹은 기타 수단으로 공공종업원단체를 지원하려고 계획된 행위는 5조2항에서 말하는 개입행위가 된다(5조3항).
- 승인을 받은 공공종업원단체의 대표자는 근무시간은 물론 근무시간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기능을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의(facilities)를 적절하게 제공받는다(6조1항). 이러한 편의의 제공은 관련된 행정이나 업무의 효율적 실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6조2항). 이러한 편의의 성격과 범위는 이 협약 7조에 명시된 방법이나 기타 적절한 수단에 따라 결정한다(6조3항).²⁾
- 공공당국과 공동종업원단체 사이의 고용조건 교섭을 위한 기제의 완전한 개발과 활용을 고무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상황(national conditions)에 맞는 조치를 취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공공종업원의 대표자가 이러한 사안의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한다(7조).
- 고용조건 결정과 연결되어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은 국가 상황에 맞추어 당사자들의 교섭을 통하거나, 관계당사자의 신뢰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설립된 조정·화해·중재 같은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기제를 통해 처리한다(8조).
- 공공종업원은 다른 노동자들처럼 ‘결사의 자유의 정상적 행사에 필요한 시민권과 정치권’(the civil and political rights which are essential for the normal exercise of freedom of association)을 가지며, 자신의 지위 및 기능의 성격에 따

2) ILO의 공무 전문가 Carlos R. Carrion-Crespo는 2021년 9월 15일 열린 유럽공무노조(EPSU)와 유럽군인협회·노동조합기구(EUROMIL) 등과의 세미나에서 공공종업원 대표자를 위한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교통·통신 지원 △노조 임무를 위한 시간면제(time off) △관리/경영 접근(access to management) △집회와 (노조) 행사에 참가할 권리 △정기적으로 노동조합비를 거둘 능력(ability) △노조계시판 권한 △당국에 위반을 고발할 역량(capacity) 등을 예를 들었다. 이 세미나에서 Carrion-Crespo는 노조권의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민적 자유(civil liberties)로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안보 △임의적인 체포와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 △간섭받지 않고 견해를 보유했을 자유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국경에 상관없이(through media and regardless of frontiers) 정보와 생각을 구하고 받고 전할 자유 △집회의 자유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법원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자단체 재산의 보호 등을 들고 있다.

른 의무에만 종속된다(9조).

- ‘공무에서 조직할 권리 보호 및 고용조건 결정을 위한 절차에 관련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and Procedures for Determining Conditions of Employment in the Public Service)이라는 공식 명칭을 갖고 있는 151호는 ILO 협약의 3개 범주(기본 협약·우선 협약·기술협약) 가운데 기술협약에 속하며, 최신기준(up-to-date instrument)의 지위를 갖고 있다.
- 우리나라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협약 151호는 2024년 7월 1일 기준, ILO 187개 회원국 가운데 59개국이 비준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21개국이 비준했다(Belgium, Chile, Colombia, Denmark, Finland, Greece, Hungary, Italy, Latvia, Luxemburg, Netherlands,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iye, UK). 기타 주요 비준국으로 Argentina(1987년), Brazil(2010년), Philippines(2017년), Russia(2014년) 튀르키예(1993년) 등이 있다.

4.2. ILO/UNESCO ‘교사의 지위에 관한 권고’

- ILO와 UNESCO는 1966년에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eachers)를 공동으로 채택했다. 이 권고는 전 세계 교사의 지위와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지침과 기준을 제공한다.
- 권고에서 말하는 교사는 학생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 내의 모든 사람이다. 권고는 유아원과 유치원, 초중고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에 적용된다.
- 1. 직업적 자유: 교사는 과목을 가르치고 토론할 자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비판적 사고와 지적 성장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 2. 직업적 발전: 교사의 지속적인 직업적 발전과 재교육은 교사가 기술과 지식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 3. 고용조건: 교사는 고용 안정성, 적절한 급여, 사회보장 혜택을 포함한 공정하고 평등한 고용조건을 가져야 한다. 계약은 안정성을 제공하고 명확한 조건을 포함해야 한다.

- 4. 의사결정 참여: 교사는 교육정책과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수준에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교육 시스템을 형성하는 데 교사의 통찰과 전문성을 반영한다.
- 5. 교육기준: 교사 자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며, 높은 자격을 갖춘 인재를 교육 직업으로 유치하고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6. 근로조건: 교사는 적절한 학급 크기, 필요한 교육 자료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가져야 한다.
- 7. 학문적 자유와 책임: 교사는 연구에 참여하고 학문적 활동에 참여할 학문적 자유를 가져야 하며, 이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할 책임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 8. 인정과 존중: 사회는 개인과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사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직업의 지위를 향상시켜야 한다.
- 9. 동등한 기회: 고용, 승진, 직업적 발전에 있어 성별, 인종, 사회 경제적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교사에게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 권고는 정부, 교육기관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교사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교사에게 지원적 환경을 조성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를 통해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는 교사의 정치적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1.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교사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할 자유가 있으며, 이는 교사의 근로조건과 전문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또한, 교사는 자신의 근로조건을 협상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 2. 정치적 권리: 교사는 일반 시민과 동일한 정치적 권리(all civic rights)를 가져야 한다(80조), 공직에 참여할 때는 연공과 연금 등을 유지하며, 공직 이후에는 원직 혹은 동등한 직위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81조).
- 3. 비차별: 교사는 정치적 신념이나 활동을 이유로 차별받아서 안 된다. 이는 고용,

승진, 직무 배정 등 모든 측면에서 적용된다.

- 4. 참여 권리: 교사는 교육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는 교사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정책 결정에 반영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 권고는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함으로써, 교사가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교사가 전문적인 역할을 넘어, 사회와 교육 시스템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5. 교사의 정치적 권리 해외사례

5.1. 해외사례³⁾

- 스웨덴, 덴마크, 독일 등에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성’(political neutrality)이란 표현을 거의 쓰지 않으며, 다음의 원칙을 강조한다.
 - 불편부당성(impartiality)
 - 독립성(independence)
 - 이해충돌 금지(no conflict of interest)
 - 정실주의 금지(no favoritism)
 - 신뢰성(reliability)
 - 사례 깊음(carefulness)
 - 책임성(responsibility)
 - 전문성(professionalism)
-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의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거론되는 가치는 “불편부당성”(impartiality)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국민으로서 개인의 정치적 권리’와 ‘직업인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분리하여 접근하고 있다.
- △직무와 연관될 경우, △근무시간일 경우, △근무공간일 경우에는 직업인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치활동에 제약을 두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사의 정

3) 이 토론문의 해외사례는 2023년 한국노총 공무원본부·중앙연구원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진행한 ‘공무원 정치기본권’ 연구를 위해 윤효원이 집필한 부분을 재정리한 것이다.

치적 권리를 시민권으로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다.

[표2] 교사·공무원 정치권 보장 국가별 유형

유형		국가
국민적 기본권을 평등하게 보장		독일,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국민적 기본권을 제한	유연하게 제한	대만, 미국, 영국, 말레이시아, 태국
	경직되게 제한	일본
국민적 기본권을 부정		한국, 인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자료: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중앙연구원,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공무원 정치기본권 연구'(2023).

- ‘국민적 기본권을 평등하게 보장하는 나라’에서 교사는 정당 가입, 정당 활동, 정치후원금 기부, 선거운동, 공직출마(휴직 허용), 정부 정책 비판권에서 일반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 ‘국민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유연한 제한과 경직된 제한으로 나뉜다. 유연한 제한은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민적 기본권을 평등하게 보장하는 나라’와 사실상 동일한 수준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 [표3]에서는 문헌과 전자우편 인터뷰를 통해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의 자유, 공직선거에서의 피선거권(사직이 아니라 휴직 혹은 일시이직(一時離職)의 조건에서), 정치기부금의 자유, 정치기부금 세액공제에 관해 국가별 비교를 해 보았다(아래 표에서 세모(△)는 완전하게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강력한 제약이 가해지는 상태를 말한다).
- 14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처럼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당 가입’ 모두를 금지하는 나라는 인도네시아와 인디아 2개국뿐이었다.
- 유럽 나라들은 대부분 교사와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앵글로색슨 계열의 나라에서도 정치활동의 범위와 공무원 직급에 따라 어느 정도 제한을 두기는 하지만, 교사와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을 상당한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다.
- 교사와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 사정이 대한민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일본에서도 정당 가입과 정치자금 기부는 허용되고 있다.

-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정당 가입은 물론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까지 상당한 정도로 보장하고 있다. 특히 ‘정치 중립’이 아니라 ‘행정 중립’이라는 관점을 통해 교사와 공무원에게 정치권을 보장하는 대만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표3]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국가별 비교

국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의 자유	피선거권 (휴가, 휴직)	정치기부금 자유	정치기부금 세액공제
한국	X	X	X	X	X
인도네시아	X	X	X	X	X
인디아	X	X	X	X	X
필리핀	△	X	X	X	X
일본	△	O	X	O	O
말레이시아	△	O	△	△	X
태국	△	O	미확인	△	O
영국	O	O	△	O	X
미국	O	O	△	O	X
대만	O	O	O	O	O
네덜란드	O	O	O	O	O
독일	O	O	O	O	O
프랑스	O	O	O	O	O
스웨덴	O	O	O	O	O
덴마크	O	O	O	O	O

자료: 한국노총 공무원본부·중앙연구원,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공무원 정치기본권 연구’(2023)

- Thomas Braendle and Alois Stutzer(2011)는 71개국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정치참여 여부를 조사한 논문에서 공무원의 정치참여 허용 유형을 다음 4가지로 구분한다.⁴⁾
 - 1) 입후보 금지, 즉 겸직 불가능(ineligibility): 공직선거 후보가 되려는 공무원은 사직해야 한다.
 - 2) 엄격한 겸직 제한(strict incompatibility): 모든 공무원은 의원에 당선되면 의원 임기 중 반드시 자신의 공무원 직위를 일시 이직해야(in abeyance) 한다.
 - 3) 느슨한 겸직 제한(soft incompatibility): 의원 임기 중 일시 이직해야 하는 공무원 직군과 일시 이직하지 않아도 되는 공무원 직군이 구분된다.
 - 4) 겸직 가능(Compatibility): 의원으로 당선되더라도 공무원 직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4) Braendle, Thomas; Stutzer, Alois (2011), Selection of Public Servants into Politics, WWZ Discussion Paper, No. 2011/06, 9쪽.

- 71개국 중에서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입후보자 되는 것을 금지하는 제1 유형의 나라는 5개국에 불과했다. 제2 유형의 엄격한 겸직 제한이 37개국, 제3 유형의 느슨한 겸직 제한이 23개국, 그리고 공무원 직위와 의원직을 겸임할 수 있는 제4 유형의 겸직 가능성이 6개국이었다.⁵⁾
-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은 겸직 금지에 대해 엄격한 제도를 채용하는 나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 의원직을 겸하는 공무원이 존재한다. 일본에서는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후보로 나갈 경우 관행적으로 사직해야 하는데,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령은 없다.
- 해외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권 논의가 ‘표현의 자유’와 ‘정당 가입’이라는 초보적 단계를 넘어 공직선거 입후보자(그리고 당선 후 의원직)와 교사·공무원 직위의 겸직을 허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5.2. 미국교원노조연맹(NEA) 정치활동⁶⁾

- 미국교원노조연맹(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의 정치활동 지침에 따르면, 교사는 수정 헌법 제1조(First Amendment)에 따라 “개인 시간에 개인 자격으로”(on your own time and in your personal capacity)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때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학교를 대변하거나 학교를 대신하여 발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해당 이벤트가 학교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익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셋째, 모욕적이고 선동적인 활동은 피해야 한다.
- 교사는 정치적 모임에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정치적 모임에는 행진, 집회, 시위, 정당의 전당대회 등이 포함된다. 집회에서 기자들과 대화할 수 있고, 팻말을 들고 다닐 수 있으며, 집회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다. 단, 백인 우월주의 증오 단체(hate groups) 또는 이와 유사한 공격적 단체 또는 이벤트와 연계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Braendle, Thomas; Stutzer, Alois (2011), 앞의 글, 3쪽.

6) <https://www.nea.org/resource-library/educator-rights-and-political-participation>

- 일반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캠페인에 기부할 수도 있다. 단체나 후보자를 위한 모금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개인 시간에 개인 컴퓨터로 해야 한다. 일부 선거구에는 정치활동에 대한 특정 규칙이 있으므로 정치 후보자를 위해 기부하거나 모금하기 전에 해당 선거구의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 선거와 관련 캠페인에 완전하게(fully) 참여할 수 있다. 다른 형태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개인 시간에 해야 하며, 학교 자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건에서 정치적 후보자를 지지하고 지지할 수 있다.
- 교사는 캠페인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 일부 단체협약에서는 교사가 선거운동 또는 후보자 선거운동을 위해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공직에 출마할 수 있다. 일부 학군에서는 교사가 공직에 출마할 계획이 있는 경우 학군에 통지해야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부모들의 정치참여도 제한해야지!

이 태 운

부산 행복한교육학부모회 부회장

1. 교사의 정치편향 우려에 관한 반론

박현미 선임연구위원의 발제문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가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교사의 정치 편향 교육’이다. 교사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강요하고 다른 이념을 비하하는 수업을 했을 때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 때문이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서 교사들끼리, 학생들끼리, 학부모까지 나서서 오염된 정치판을 만들까 봐 두려운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가 그런 상황에 놓이는 자체가 두려운 것이다. 이 두려움은 가지 않은 길에 관한 두려움과 같다. 우선, 교사들이 수업하고 학생 지도하기도 바쁜데 이를 제쳐두고 본인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교사가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다음으로 학교에는 오직 한 가지 이념에 편향된 교사만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끝으로 학생들이나 동료 교사가 그런 교사의 말을 비판 없이 수용할까 하는 의문이다.

첫째, 본인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교사가 있다면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절대 이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일이 빈번하게 생긴다면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그 교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칙이나 방식을 분명히 세울 것이다. 이것이 민주시민의 기본 소양이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의 정치적인 자아가 성장할 것은 뻔한 결말이다.

둘째, 만약 한 학교의 구성원이 동일한 정치적 지향점을 지녀서 특정한 가치를 계획적으로 주입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구성원의 학부모까지 모두 동의하는 상황은 불가능할 것이다. 촛불 집회의 경험으로 시민의식이 성장한 학부모들이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리가 없다. 그 부모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다. 반드시 문제를 제기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학교의 문화를 바꿔 갈 것이다.

셋째, 편향된 정치 성향으로 대자보를 붙이거나, 관련 수업이나, 학내 메시지를 전달하는 교사가 있다고 가정해도 이 사람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상상은 불가능하다. 지금은 SNS의 시대이다. 이런 일이 생긴다면 삽시간에 대중에게 공유되고 상식을 넘는 행동을 한 교사들은 지탄받게 된다.

정치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학생에게 ‘위험한 사상’이나 ‘왜곡된 정보’를 주입할지 모르는 두려움은 이제 걷어내자. 민주시민을 길러야 할 학교이니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당연하다.

학생들의 정서적인 면을 생각한다면 학생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초·중·고 학부모의 정치기본권도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치편향 발언은 부모가 더 많이 하지 않을까? 교·교사만큼, 그 이상으로 영향을 주는 게 가정교육이고 부모의 가치관이니. 학생들은 가정이나 학교가 아니라도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 자신들의 경험 세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정치적 자아를 형성한다. 정치 편향 교육을 하는 교사가 있다고 해도 갈대처럼 흔들릴 학생도 아니고 이를 방관하는 학부모도 아니다. 동료 교사들도 마찬가지다.

2. 교사의 정치기본권 제한으로 이득은 얻는 사람은 누구인가?

박현미 선임연구위원의 발제문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96%의 교사는 ‘나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에 수업 시간에 행동이나 말을 조심하려고 한 적이 있다’라는 문항에 동의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검열을 하거나 위축된 경험을 했다.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조심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각자 기준에서 ‘위축’되었다는 것은 같다. 자기 말과 행동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두려움과 함께 자기 말 때문에 소동에 휩쓸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권력은 두려움을 먹고 자란다. 민주주의가 정착되었고 이제는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갈 성숙한 민주시민을 기르는 것이 학교 교육의 목표이다. 민주시민의 역할은 ‘참여’이다. 그런데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사들이 참여에서 배제된 상황이다. 어떤 분쟁에 휘말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길 때는 입을 다물고 행동을 숨기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교과서를 통해 ‘정치는 다양한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하는 활동으로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임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학생들의 정치적 자아는 성장을 도모하기 힘들다. 학교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이들은 의견 차이가 있기에 갈등이 생기는 상황을 경험하고 이를 ‘조정’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정상이다.

민주시민의 반대편에는 조용한 시민이 있다. 차이를 무시하고 자신이 삶만 가꾸며 갈등을 회피하는 시민들이다. 기득권 세력은 조용한 시민에게 움직이면 다친다는 두려움

을 심어주어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한다. 미래는 학생들의 몫이다. 민주적인 정치를 경험한 학생들이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우리 자녀들은 수많은 갈등이 쌓인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조정’ 능력을 갖춰야만 힘들게 만든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 누구나 주인으로 사는 세계. 민주주의 사회.

3. 교육은 교사에게

박현미 선임연구위원의 발제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대부분의 교사와 학부모가 동의하고 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제한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말이 틀렸다는 뜻이다. 권력은 나눠야 하고 서로 감시하고 견제되어야 한다. 교육정책을 만들 때는 교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지금도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이 말은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과 같다.

같은 발제문에서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르치는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현실을 가장 잘 아는 교사가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결정하는 위치에 참여해야만 교육 문제를 가장 교육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발제문에서 제안한 ‘정치후원금 및 국가기관 고용 휴직’, ‘공직선거 휴직제도’, ‘정당 관련 활동’ 역시 허용되어야 마땅하다.

“120만 공무원은 ‘선거권 반납 운동’에 나서라”

- 60년째 정치기본권 박탈...당신은 국민이 아니다 -

김 태 신

한국노총 공무원본부장

I. 입에 재갈 물린 공무원



“정치활동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도 아닌데
SNS에 ‘좋아요’ 눌렀다고 징계 주는 건 너무한 것 아니요”

- 공무원 A씨 -

○ 페이스북, 나무위키,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스토리 등 SNS에 ‘좋아요’ 또는 응원 ‘댓글’
→ 선거법 위반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 75명 경징계, 훈계 처분(중앙선관위)

○ 21대 총선(2020년) 대전지역 SNS 위반 사례

소속 횟수	합 계	국가직	지방직	교직원 (교사)	경찰	소방
총 계	77	15	36	15 (8)	9	2

○ 2010년 공무원 1,900명 정당에 월 1만 원 후원 → 선거법 위반 검찰 기소

↔ 검사, 교육부차관, 헌법재판관, 교장, 유치원장, 한국개발연구원장(KDI) 고위공직
자는 면죄부

○ 정치후원금 선관위 기탁 10만 원 : 싫어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균등 배분
‘일반기탁방식’ → ‘지정기탁방식’ 전환 필요

○ 정치참여를 위해 출마 : 사직이나 퇴직 후가 아니면 불가능

II.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 공무원이란?

- 협의 : 직업공무원
- 광의 : 공법상 관계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



→ ‘국민’으로서 기본권 제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 역사적 배경

〈태동〉

관권선거로 얼룩진 ‘이승만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출발
- ‘1960년 4·19혁명’ 이후 헌법 제27조(공무원의 정치적중립) 보장 명시

(당초)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들이 집권여당의 압력에 의해 선거에 동원 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의미. (보호막, 방어적 권리)



〈현재〉

(독재 정권에 의해)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사실상의 거세를 뜻하는 ‘**정치적 중성화**’로 변질

- 박정희 ‘정치적 중립=정치활동 금지’ / 노동운동과 집단행동까지 금지

이후 ‘정당법’과 ‘공무원법’의 악법 조항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 박탈당한 대한민국 공무원**”

※ (선진국 등 대부분의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 ‘민원인의 정치적 이념과 성향을 이유로 차별하지 마라’는 의미로 해석

Ⅲ. 외국에선 지금...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OECD 국가 중 상당수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음.

- 공무원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가 가능하며, 정당 가입은 물론 정치활동에 따로 제한을 두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의 윤리 규정에 담겨 권고사항에 불과

[미국] 연방공무원은 특정 당의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정치활동 가능, 하위직 공무원들은 피선거권 제한, 정당간부직 금지 외 모든 정당 활동 참여 가능, 교원노조 대통령 지지 후보 공개선언, 선거운동 가능, 정치자금 후원 가능
[일본] 공무원은 정당 가입과 정당 활동 허용, 지방공무원은 정치활동 금지(소속 지방자치단체 지역에만 해당), 조례로 정하는 정치적 행위를 자유롭게 허용
[캐나다] 정당 가입이나 당비의 납부 등의 정치활동 허용,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제한, 후보자나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 정치집회 참여 허용
[영국] 모든 공무원은 정당 가입 허용, 직위에 따른 정치활동 범위 제한, 고위공무원은 정당 가입만 허용, 중위공무원은 국회의원 후보 출마만 규제, 하위공무원과 교원은 선거 출마 및 모든 정치활동을 허용. → 낙선 시 일주일 이내에 원직 복직
[프랑스] 정치활동에 제한요건이 없음, 공무수행과 무관한 경우 정치 표현의 자유를 가지며,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인식,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는 품행 유지 의무를 준수(공개적인 극단적 비난은 제한)
[독일] 근무시간 외 모든 정치활동 허용, 공직 보유한 채 하원의원에 출마·복직 가능, 지방의원은 겸직 허용, 법관에게도 정치적 기본권이 일반시민과 똑같이 보장
[말레이시아] 일반직 공무원 선거 출마, 정당 가입 등 자유로운 정치활동, 선거에서 진 경우 재임용을 신청, 다만 정치활동은 근무시간 이후에 하고 근무시간 중에는 휴가 신청
[태국] 정치활동과 관련 정치적으로 불편부당해야 하며, 정당의 평당원, 정치기부금이 가능
[한국] 공무원 및 교원에게 '정치적 중립성' 명분으로 모든 정치기본권 금지. ※ 악용한 나라 : 인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국가별 정치기본권 비교표〉

국가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	피선거권 (휴가, 휴직)	정치기부금	정치기부금 세액공제
인도네시아	×	×	×	×	×
인디아	×	×	×	×	×
필리핀	△	×	×	×	×
한국	×	×	×	×	×
일본	△	○	×	○	○
말레이시아	△	○	△	△	×
태국	△	○	미확인	△	○
영국	○	○	△	○	×
미국	○	○	△	○	×
대만	○	○	○	○	○
네덜란드	○	○	○	○	○
독일	○	○	○	○	○
프랑스	○	○	○	○	○
스웨덴	○	○	○	○	○
덴마크	○	○	○	○	○

IV. 개정되어야 할 법률들

(헌법 제7조 제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어떠한 정권이 집권하더라도 정치적 특수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비당파성’ ‘공평성’ ‘중립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이 조항에 의거하여 공무원도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발적으로 정당 가입하고 활동하며,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범주화 필요
- 또한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10여 개의 법령을 개정 내지 조항 삭제

〈개정 또는 폐지 검토 필요 법률 및 복무규정〉

공무원노조법

-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직선거법

-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0조(선거운동 금지) 국가·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제85조(선거 관여 금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86조(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홍보, 선거운동 기획 참여, 지지도 조사나 발표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물(1분기 별 1종 1회) 발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공무원법

-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당법

- 제22조(정당 가입 금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

정치자금법

- 제8조(후원회 가입 금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원 등은 후원회 가입 및 기부할 수 없다

복무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 기강의 확립) 제2항

공무원은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국가공무원 제8조의 2(복장 및 복제 등) 제2항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거나 상징하는 복장 또는 관련 물품을 착용할 수 없다

- 국가공무원 제27조(정치적 행위) : 정치 행위 금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 2(근무기강 확립) 제2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 3(복장 및 복제 등) 제2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정치적 행위) : 정치활동 제한

〈헌법재판소〉

- 본권 주체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총의를 표현할 수 없도록 제한
- 상징하는 복장 또는 관련 물품들을 착용할 수 없다
- 상징적으로도 비언어적으로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도록 제한

☞ “공무원 복무규정상 의 제한 규정들은 위헌적인 여지가 있다”

V. 국내외 단체들의 권고사항

○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제346차 보고서〉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공무원노조법 제4조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일체의 정치활동에 노조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반적 금지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상기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공무원노조가 그 조합원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경제적·사회적 정책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가능성을 보장하도록 요청한다.”

○ 국제연합(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위원회 2023년 11월 3일 ‘대한민국 제5차 정기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

“공무원과 교사의 시민으로서 개인 자격으로 행하는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정치적 중립성 침해 우려라는 모호한 근거를 바탕으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법률로 금지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제15조, 제19조, 제22조, 제25조)

또한 공무원과 교사가 시민으로서 본 규약 제25조에 보장된 공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및 여타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 현재 OECD 37개 가입 국가 중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과 활동을 금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정치 후진국 일본조차도 교사들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률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특히 대학 교원은 현직을 유지하면서 선거에 출마를 보장받고 있으나, 유·초·중등 교원은 지자체 등 모든 선거, 특히 교육감 선거마저도 출마를 위해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사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불합리하다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2016년, 2019년 2월 15일 여러 차례에 걸쳐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령개정을 권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인사혁신처장, 교육부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함.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은 과잉금지원칙과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민주국가의 ‘기능적 권력 통제’로의 기능변화와 내부감시자로서의 공무원의 역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

○ 헌법재판소

〈2020.4.23.2018헌마550〉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

- 공무 외의 집단행위 금지는 **공익개념의 모호성** 때문에 그 금지의 범위가 지나치게 불명확
- 특히 집단행위와 정치적 중립성의 제한은 집단적 의사를 **표현할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함**

〈‘공무원’-‘민주시민’으로서 이중적 지위〉

① 공직 근무에 있어서 정당 정치적인 요인의 개입없이 행하며, 불편부당한 직무의 처리를 요청하는 것

② 근무 외의 시간과 공간, 직무영역과 무관한 내용의 정치적 활동까지 제한하고 공무원에게 획일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과잉적이다

③ 일반시민으로서 향유하는 기본권 주체로서의 침해

⇒ 정부 측 입장 :

-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제한은 헌법적 판단, 사회적 공감대 형성, 국민적 합의가 필요
- △ 전면적인 허용은 신중한 검토 필요
- △ 국회 논의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 필요
- △ 헌법재판소도 공무원의 정당 가입 제한 등에 대해 합헌을 판시

“공무원 정치기본권 = 절대 불가”

VI. 정치기본권이 보장 안 되는 이유

○ 그동안 입법 현황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정당법 등 7개 법률개정안 발의

- (2023년 2월 2일) 강민정 의원을 포함한 24명의 국회의원 개정법률안 발의
- (2020년 10월 26일) 민형배 의원 등 13명
- (2017년 8월 2일) 이재정 의원 등 30명

- (2017년 6월 29일) 박주민 의원 등 10명
- (2012년 9월 17일) 강기정 의원 등
- (2012년 9월 6일) 이상규 의원 등

○ 독재 집권 세력

- 1960년대 이후 개발독재를 위해 관료사회를 성과주의를 위한 동원형 체제
- 자신의 기본권은 포기하고 국가목표 또는 집권 세력의 목표를 위한 희생과 충성을 덕목으로 하는 공직사회가 필요
- 무비판적이고 순종적인 공무원들에게 정치참여, 정당 참여, 집단행위를 위한 권리는 사치품으로 쇠뇌

○ 현대 정치인들의 속마음

- “내가 왜 굳이??” ... 행정을 정치 아래 두고 관리·통제
- ‘머슴’에게 권리 주기 싫다
- 지역 및 중앙정치 경쟁상대로 부상하는 것 사전 차단

VII. 우리는 나아가야 할 방향은

헌법 제10조부터 제36조까지 기본권을 명시한 이유는?	
- 주권자인 국민에게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포괄적 보장”
- 동시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불가피한 법률적 제한을 예외로 하여 원칙적으로 광범위하고 조건 없이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취지	“예외적 제한”

☞ 하지만 현재 공무원 정치기본권 조항들은 헌법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 법률조항들이 촘촘히 작동하고 있음

〈단계별 추진계획〉

단기	중기	장기
자유로운 의사 표현	기본적인 정치활동	완전한 정치기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의사 표현 - 업무시간 외 개인 SNS 활동 보장 - 정부 및 지자체 정책에 대한 의사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 가입 - 정치후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후보 지지 - 피선거권 제한 폐지 - 정당 활동

○ 대만「공무원행정중립법(公務人員行政中立法)」제정(2009년)

행정중립이란 주로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의 전반적인 또는 다수의 이익을 고려하고 공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입장과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의 명칭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용어 대신 ‘행정중립’을 사용.

‘행정중립’은 공무원이 공정무사하고 *국민의 이익을 창조하며 **편파적이지 않아야 함 / 대공무사(大公無私) *조복전민(造福全民) ***부득편의지의(不得偏倚之意)을 뜻함

- 공무원이라 함은 법정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임명·파견하는 상근직원과 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공립학교 교직원을 말한다(2조).
- 공무원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정치단체에서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5조)
- 근무시간이나 근무시간 중에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활동을 할 수 없다(7조)
- 공무원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못 하게 하거나, 선거 활동에 참여 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12조)

<부록1>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활동보호 입법 촉구 전국교사 서명운동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3대 입법 촉구 전국 교사 서명운동

■ 서명운동 개요

- 기간: 24.7.2(화). ~ 7.16(화). [15일간]
- 대상: 전국의 모든 교사
- 현재 응답: 총 28,244 명(24.7.15.10:00 기준)
- 서명결과 발표 및 전달: 7.17.(수) 15:00 국회 제1소회의실

■ 서명운동 내용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3대 입법> 촉구!

존경하는 전국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지난 여름 전국의 교사들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외친 '공교육 정상화'를, 제22대 국회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교사들은 교육에 전념하고,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이 지켜질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위해,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3대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첫째, "서이초특별법"

- 교사의 본질업무 법제화 / 학생 분리제도 법제화 /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 요건 명확화 / 무고성 아동학대 피소 교사 지원 및 보호장치 마련 / 학교 민원창구시스템 법제화 /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둘째, "학교 현장체험학습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

-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교사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 책임에서 교사 보호

셋째,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법안

- 정당 및 국회의원에 대한 후원금 납부 허용 / 교육감 선거 휴직 출마 허용 / 학교 밖 공간에서 정치적 의사 표현 허용 / 정당 후보의 국민 경선 참여 허용 / 학교 밖 공간에서 선거운동 허용 / 정당 가입 허용 / 정당의 공직 후보 휴직 출마 허용 (*학교밖 공간에는 학생과의 소통 공간을 제외한 온라인 공간 포함)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시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힘이 됩니다.

선생님들의 서명을 모아 국회, 교육부, 시도의회 등에 제출하겠습니다. 우리의 서명은 국회와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는 입법 근거 자료가 됩니다.

<부록2> 한국노총 정책질의 설문결과 및 정책질의서

한국노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대상 정책설문 결과(24.3.27)

■ 정책설문 개요

- 기간: 2024.3.12.~3.26.(14일)
- 내용: 공무원임금 현실화·정치기본권 보장
- 대상: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각 정당 후보자
- 응답: 총선출마자 중, 155명 응답
- 주최: 한국노총 공무원임금현실화 공동투쟁위원회(공동대표 김용서·김현진)

■ 설문 결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각 정당 후보자 가운데, 한국노총 정책질의서에 응답한 후보자 대부분이 ‘공무원임금 현실화’와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정책 설문조사는 한국노총 공무원임금현실화 공동투쟁위원회(공동대표 김용서·김현진, 이하 ‘공무원임금 공투위’)가 지난 3월 12일부터 2주 동안 총선출마자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이 중 155명이 응답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공동대표, 진보당 윤희숙 대표, 녹색정의당 김찬휘 공동대표가 정책질의서에 당을 대표하여 적극적인 동의 의사를 밝혔다.

정책설문조사에 응한 총선 후보자들은 낮은 공무원 보수 현실화에 대해 압도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응답자 155명 중 154명(99.4%)이 보수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도 응답자 155명 중 146명(96.8%)이 찬성했으며, 반대 5명, 입장없음 4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직 후 공직 출마에 대해서는 응답자 155명 중 149명(96.1%)이 찬성했으며, 6명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공무원임금현실화 공동투쟁위원회와 함께 공무원·교사들의 임금현실화, 정치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종합적인 정책·입법·조직 분야의 범국민적인 공동투쟁을 추진해 갈 계획이다.

■ <정책설문조사에 응답한 총선 출마자 명단(155명)> (2024년 3월 26일 기준)

(설문기간 이후 응답하였거나, 수신의 과정에서 누락된 경우, 명단에 미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당대표

김찬휘(녹색정의당 공동대표), 윤희숙(진보당 상임대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백승아(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한동훈(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지역구 후보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을), 김기정(개혁신당 마포구갑), 황희(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구갑), 남평오(새로운미래 강서구갑), 최기상(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이해식(더불어민주당 강동구을), 강승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수원시을), 홍운오(국민의힘 수원시을), 방문규(국민의힘 수원시병), 김준혁(더불어민주당 수원시정), 이수정(국민의힘 수원시정), 박재순(국민의힘 수원시무),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성남시수정구),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성남시중원구), 이광재(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구갑),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구을),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안양시만안구), 서영석(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 김복덕(국민의힘 부천시갑), 김기표(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 이견태(더불어민주당 부천시병), 임오경(더불어민주당 광명시갑), 김현정(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안산시병), 김성회(더불어민주당 고양시갑), 한준호(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 이기현(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 김영환(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최민희(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갑), 곽관용(국민의힘 남양주시을), 김용민(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병), 이학영(더불어민주당 군포시), 이원모(국민의힘 용인시갑), 손명수(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 고석(국민의힘 용인시병), 박용호(국민의힘 파주시갑), 엄태준(더불어민주당 이천시), 송석준(국민의힘 이천시),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공영운(더불어민주당 화성시을), 권칠승(더불어민주당 화성시병),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갑), 안태준(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 박운국(더불어민주당 포천시가평군), 김용태(국민의힘 포천시가평군), 김성원(국민의힘 동두천양주시연천군을), 조택상(더불어민주당 인천 중구강화옹진군),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남영희(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갑),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갑),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을),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 박상수(국민의힘 인천 서구갑),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허영(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군갑), 원창목(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시갑), 박정해(국민의힘 강원 원주시을), 송기현(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시을), 김종남(더불어민주당 강원 강릉시), 허필홍(더불어민주당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군), 문대림(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고광철(국민의힘 제주시갑),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김승욱(국민의힘 제주시을),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고기철(국민의힘 서귀포시),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군), 윤창현(국민의힘 대전 동구), 장종태(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박범계(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조승래(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황정아(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 박정현(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박영순(새로운미래 대전 대덕구),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 신범철(국민의힘 충남 천안시갑),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 이정만(국민의힘 충남 천안시을),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병), 이창수(국민의힘 충남 천안시병),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나소열(더불어민주당 충남 보령시서천군),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 김영석(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 정만권(국민의힘 충남 아산시을), 조한기(더불어민주당 충남 서산시태안군), 황명선(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군), 여기구(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정용선(국민의힘 충남 당진시), 양승조(더불어민주당 충남 홍성군예산군),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이태환(개혁신당 세종시을), 오종기(더불어민주당 포항시북구), 김상헌(더불어민주당 포항시남구울릉군), 한영태(더불어민주당 경주시), 박규환(더불어민주당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이영수(더불어민주당 경북 영천시청도군), 허소(더불어민주당 대구 중남구), 신효철(더불어민주당 대구 동구군위갑), 김상훈(국민의힘 대구 서구), 여영국(녹색정의당 창원시성산구), 이옥선(더불어민주당 창원시마산합포구), 송순호(더불어민주당 창원시마산회원구), 황기철(더불어민주당 창원시진해구), 이종욱(국민의힘 창원시진해구), 최형욱(더불어민주당 부산 서구동구), 서은숙(더불어민주당 부산 진구갑), 박성현(더불어민주당 부산 동래구), 전재수(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강서구갑), 정명희(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홍순현(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구갑), 박인영(더불어민주당 부산 금정구), 노정현(진보당 부산 연제구), 배재정(더불어민주당 부산 사상구), 김대식(국민의힘 부산 사상구), 최택용(더불어민주당 부산 기장군), 전은수(더불어민주당 울산 남구갑),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정운천(국민의힘 전주시을), 강성희(진보당 전주시을), 윤선웅(국민의힘 전남 목포시), 박정숙(국민의힘 전남 여수시갑), 황두남(국민의힘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정진욱(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 김형동(국민의힘, 안동예천군)

□ 비례 후보

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최영승(더불어민주연합), 손솔(더불어민주연합), 이주희(더불어민주연합), 용해인(더불어민주연합), 송창욱(더불어민주연합), 서재현(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더불어민주연합), 백혜숙(더불어민주연합), 김윤(더불어민주연합), 강경윤(더불어민주연합), 허소영(더불어민주연합), 최혁진(더불어민주연합), 전종덕(더불어민주연합), 김준환(더불어민주연합), 김영훈(더불어민주연합), 고재순(더불어민주연합), 정혜경(더불어민주연합), 한창민(더불어민주연합)

제22대 총선

한국노총 공무원·교원 정책에 대한 공개 질의서

I. 질의 이유

- 한국노총 공무원임금현실화 공동투쟁위원회는 4·10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의 공무원·교사 정책분야 핵심 입법과제가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최우선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후보께서는 아래 핵심 입법과제 추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공무원·교사 정책분야 핵심 입법과제>

- 공무원·교원 임금 현실화를 위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정치적 표현의 자유 △ 정치후원금의 자유 △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자유

※ 본 자료는 150만 한국노총 조합원 및 26만 공무원·교사 조합원의 후보 평가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 제출 시한 : 2024. 3. 26까지

한국노총 공무원임금현실화 공동투쟁위원회

(지역별) 000노동조합·000노동조합

II. 공무원·교사 정책분야 핵심 입법과제에 대한 질의

<질의 1>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에 대한 의견

(배경 설명) 공무원 임금은 민간대비 83.1%(인사혁신처, 2022)를 기록하여 역대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9급 1호봉 기본급(177만원)이 최저 임금(201만원)보다 약 24만원이나 적을 정도입니다. 전체 퇴직 공무원(54,993명) 중 26%(14,341명)가 청년 공무원·교사일 정도(공무원연금공단, 2022)로 공직사회가 위기입니다.

현행 ‘공무원보수위원회’는 공무원 임금을 논의하는 시늉만 할 뿐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130만 공무원·교원, 300만 공공부문 노동자 모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무총리 산하의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공무원 임금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하는 내용의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질의) 후보께서는 22대 국회에서 정부와 공무원·교사 간 신뢰에 기초한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합리적인 임금수준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이 추진되면 이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동의 및 총선공약화) ☐ (입장 없음) ☐ (반대)

※ 동의 여부에 대해 해당 박스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견

(배경설명) 교사들의 분노를 일으킨 작년 서이초 사태는 교육현실에 맞지 않는 교육 관련 법령 때문에 일어난 비극입니다. 교수, 학원강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방과후강사, 스포츠강사, 돌봄전담사 등 어린이·학생을 상대하는 많은 직종의 분들이 시민으로서 정치적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유독 유·초·중등학교 교원에게만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수는 교육감으로 휴직출마(복직도 가능)가 가능한데, 교사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질의) 후보께서는 22대 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되면 이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① 정치적 표현의 자유 허용 : ☐ (동의 및 총선공약화) ☐ (입장 없음) ☐ (반대)
- ② 정치후원금 허용 : ☐ (동의 및 총선공약화) ☐ (입장 없음) ☐ (반대)
- ③ 교육감 휴직 출마 허용 : ☐ (동의 및 총선공약화) ☐ (입장 없음) ☐ (반대)
- ④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허용 : ☐ (동의 및 총선공약화) ☐ (입장 없음) ☐ (반대)

※동의 여부에 대해 해당 박스에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3>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견

(배경설명) 현재 공무원은 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정치적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약) 공무원은 소셜미디어 등에서 정치적 의견에 단순히 ‘좋아요’ 등의 소극적 의사 표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징계받고 있습니다.
- (정치활동에 대한 제약) 공무원은 정당 및 정치단체에 가입이 금지된 것은 물론 정치 후원금도 선관위를 통한 간접적 기탁만 허용되고 지지하는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직접 후원은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면 서도 선관위에 후원금을 기탁하라는 독려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정치참여의 제약) 정치참여를 위한 출마의 경우도 사직, 퇴직 후가 아니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질의) 후보께서는 22대 국회에서 다음의 내용으로 공무원에게 정치기본권을 허용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되면 이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① 정치적 표현의 자유 허용 : ☐ (동의 및 총선공약화) ☐ (입장 없음) ☐ (반대)
- ② 정치 후원금의 허용 : ☐ (동의 및 총선공약화) ☐ (입장 없음) ☐ (반대)
- ③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허용 : ☐ (동의 및 총선공약화) ☐ (입장 없음) ☐ (반대)

※ 동의 여부에 대해 해당 박스에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

<부록3> 제22대 국회에서 발의 및 발의 예고된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

의안 번호	발의안	제안 이유	발의날짜	발의자
7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정치적 기본권 제약 사항을 개선해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	24.6.21.	김문수·이수진·이재강· 양부남·박해철·이용우· 이재관·문금주·조계원· 양문석·위성곤·민형배· 백승아·박지원·이광희· 문대림 의원(16인)
79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24.6.21.	김문수·이수진·양부남· 이재강·이용우·이재관· 문금주·조계원·양문석· 위성곤·민형배·백승아· 박지원·이광희·문대림 의원(15인)
79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도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24.6.21.	김문수·이수진·이재강· 양부남·이용우·이재관· 문금주·조계원·신영대· 양문석·위성곤·민형배· 백승아·박지원·이광희· 문대림 의원(16인)
80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도한 정치적 기본권 제약 사항을 개선해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	24.6.21.	김문수·이수진·이재강· 양부남·이용우·이재관· 문금주·조계원·양문석· 위성곤·민형배·백승아· 박지원·이광희·문대림 의원(15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초·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유·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 경우 휴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발의 전	백승아 대표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초·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서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유·초·중등교원이 선거 출마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발의 전	백승아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을 도모	발의 전	백승아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안	제안 이유	발의날짜	발의자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초·중등 교원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되,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된 유·초·중등 교원이 그 직을 수행하면서 학생에게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할 수 없도록 금지 규정을 둠	발의 전	백승아 대표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정치 운동의 금지’ 및 ‘정치운동죄’ 조항을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함	발의 전	백승아 대표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이 선거 후보 등록 등을 위한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정치 참여를 확대	발의 전	백승아 대표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유·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발의 전	백승아 대표발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정치 활동 금지규정을 삭제	발의 전	민형배·신장식·전종덕 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이나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	발의 전	민형배·신장식·전종덕 의원 대표발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기준에 맞춰 교원 정치 활동 금지규정을 삭제	발의 전	민형배·신장식·전종덕 의원 대표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등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을 보완	발의 전	민형배·신장식·전종덕 의원 대표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정당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	발의 전	민형배·신장식·전종덕 의원 대표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현행법상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	발의 전	민형배·신장식·전종덕 의원 대표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등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을 보완	발의 전	민형배·신장식·전종덕 의원 대표발의

교사 정채기보권보장의

교육정책과 교육공공이

전문성 강화에!